

KDI
북한경제
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 Economy

KDI

KDI 북한경제리뷰 편집진

편집자문

전홍택 | 선임연구위원
고일동 | 선임연구위원

편집주간

이 석 | 북한팀장

편집위원

김두얼 | 연구위원
김상기 | 전문위원
이재호 | 전문위원

편집간사

김은영 | 전문연구위원
이원경 | 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는

북한경제의 실태 및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정리하여
정책당국자, 학계 및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월별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958-4355
팩스번호 958-4090

본 자료는

KDI 홈페이지(<http://www.kdi.re.kr>)로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동향과 분석

3

〈신년대담〉 김정일 사후 2012년 북한의 변화전망과 남북관계 | 전홍택, 권태진, 유호열, 이석, 조동호

24

김정은체제와 2012년 | 이교덕

36

2012년 북한경제 전망 | 동용승

연구 논문

47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위상학적 검토: 수령경제와 시장세력을 중심으로 | 홍민

63

김림성의 대북 무역과 투자 현황 및 과제 | 림금숙

북한경제연구협의회

85

독재의 정치 및 경제논리-권력 교체기 현상을 중심으로 | 박형중

경제자료

105

신년공동사설 경제부문 비교(2000~2012)

부문별 주요 기사 (12월 20일~1월 15일)

121

대내경제

125

농업 및 식량

127

대외경제

131

남북경협

동향과 분석

〈신년대담〉

김정일 사후 2012년 북한의 변화전망과 남북관계

전홍택, 권태진, 유호열, 이석, 조동호

김정은체제와 2012년

이교덕

2012년 북한경제 전망

동용승

〈신년대담〉 김정일 사후 2012년 북한의 변화전망과 남북관계

KDI 북한경제팀은 2012년 1월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부원장, 고려대 유호열 교수,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를 초청하여 “김정일 사후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선포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신년대담을 개최하였다. 본 신년대담에서는 김정일 사후 북한경제가 전반적 어떻게 운영되어 갈 것인지를 시작으로 김정은 체제의 향후 행보 본격화 시기와 양상 및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이에 따른 남북경협의 전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과 토론, 그리고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이번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김정일 사후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선포와 남북관계 전망〉

- 일 시: 2012년 1월 4일(수) 10:00~12:00
- 장 소: KDI 3세미나실
- 사 회: 전홍택(KDI)
- 토론자: 권태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호열(고려대), 이석(KDI), 조동호(이화여대)

정리: 김은영 전문연구원 (key@kdi.re.kr)



전홍택: 2012년 새해를 맞아 바쁘신 중에도 KDI 북한경제연구협의회의 신년대답에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들께서 자리해주셔서 저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작년 말 김정일 사망으로 김정은 체제의 출범에 따라 북한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2012년 남북관계 및 북한경제를 전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북한의 전반적 경제운영은 어떠한 것으로 예상되는지, 김정은 체제의 향후 행보는 언제쯤 본격화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등에서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남북경협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북한 사회주의 특성상 정치분야 유호열 교수님부터 의견을 듣고, 경제분야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유호열: 김정은 체제는 단기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9월 28일 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신설) 직책을 맡으며 후계자로 전격 등장하였다. 김정은 후계구도를 염두에 둔 당체제 정비였기 때문에 일단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했더라도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서 당이나 군을 통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있는 17명의 위원들이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측근세력들이기 때문에 체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적, 인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체제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유호통치기간이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 선택과 함께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그 안에서 정책과 관련된 노선갈등도 예상이 되고 그것을 조율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균열상태, 정책의 성패에 따른 위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아직 확신할 수 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김정은 체제가 안착될 때까지는 내부결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기존의 김정일 시대의 정책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유호통치라는 입장에서도 현재의 대남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립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남한의 선거정국을 관망하면서 차기정부와의 관계설정 등에 더 비중을 둘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도발가능성을 배재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도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이 모두 한반도 안정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도발보다는 남한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망하는 경향을 보일 것 같다.

대외관계에 있어서, 북미 간의 대화는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식량, 영양식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대화는 재개될 것이고,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북중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은 북한이 안정화되길 원하고 있어 김정은 체제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권태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유호열 교수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될 것이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사정에 밝은 노동당 간부 출신의 한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은의 후계체제가 고위층의 경우 이미 간부 교체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나, 2년이라는 짧은 후계구축 기간 때문에 북한 주민들로 부터는 확실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예상보다는 김정은 체제가 빨리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단기적으로는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김정은은 유훈통치를 철저히 관철한다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당과 군의 측근을 중심으로 조언을 받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 구축 작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미국 등 외부세계도 북한이 조기에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단기적인 안정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당분간 남북관계는 현재 상태보다 크게 개선되기 힘들다고 본다.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남북한 사이의 대화나 협력에 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으며, 조국 통일 3대현장 및 남북공동선언 등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예년보다 좀 더 격앙된 어조로 남한을 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조문을 제한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을 고려할 때 북한은 당장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뜻이 없고 남북관계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이 미국, 중국, 러시아와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고,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것이므로, 북미 관계는 김정일 사망 전의 상황을 이어갈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마지막 회담이 6자 회담 및 식량지원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는 북한이 바라는

것이므로 그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미국과 대화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미 대화 과정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한미군의 우선 철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중국과 현재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지난해 김정일의 중국과 러시아 방문을 언급하면서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북한은 무엇보다 북중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코자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필요한 식량을 지원해 줄 의사가 있다고 전하는 것을 보면, 중국도 북한이 안정되길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러 관계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국제사회의 대북식량 지원 시, WFP를 통해서 중국은 10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러시아는 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동호: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여서 일단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2012년 신년공동사설의 제목과 내용은 충분히 예상할만한 것이었다. 신년공동사설은 이미 김정일 생존 시에 쓰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김정일 사후 사망 관련 부분을 첨가하였지만 경제정책 부분은 손을 댈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아직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을 내놓을 만한 상황도 아니다. 다만 남북관계는 가뭇되었을 것이며, 지나칠 정도로 강경한 표현이 눈에 띈다. 예컨대 김정일이 살아 있었다면 미제 부분은 넣지 않았을 것이다. 즉 아직은 자신의 권력 공고화와 함께 2012년 상반기에 있을 김정일·김일성 생일이라는 국가적 명절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므로 “우리를 가만 놔두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은 남한 정상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김정은의 발등의 불은 대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대남 도발을 자행할 이유도 없다. 김정은으로서는 대내 문제의 안정, 결속이 중요하므로, 대남 긴장이든 협력이든 어떤 쪽을 취할지 정할 여력이 없다. 그럴 상황도 아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당분간 현재 그대로 놔두길 바랄 것이다.

남북관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이중 복잡성이 존재한다. 우리로서는 천안함연평도 문제가 걸려 있고, 북한으로서는 조문 문제가 걸려 있다. 스스로 이명박 정부와는 상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상황의 급전환이 없는 한 이 두 문제를 풀기란 쉽지 않다. 또 하나의 복잡성은 상황의

문제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한으로서는 대내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고, 이명박 정부는 원칙을 지켰다는 것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선거의 해이고, 여당도 내부 문제로 남북문제 개선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따라서 올해 남북관계는 커다란 진전 없이 현재의 상태가 다소의 진폭을 보이며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안정성 문제에 관해 덧붙인다면, 권력층 내에서는 김정일의 권력 장악이 어느 정도 확실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 주민으로부터의 지지나 충성은 아직 미약한 듯하다. 신년 공동사설의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 등의 표현을 보면, 일반 주민으로부터의 지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일반 주민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지지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대외관계 측면을 보면, 대미 대화는 곧 재개되어 진행될 것이다. 대미 대화는 김정일의 유훈사업이 되었으므로 지난 번 미북간에 합의한 수준까지는 진행할 것이다. 대중관계는 최대 지원국으로서 긴밀하게 유지될 것이다. 다만 김정일의 대중 외교능력의 확보가 문제이다. 북한에서 대미 외교라인을 관장하는 사람은 쉽게 파악된다. 강석주 등이다. 그러나 최대의 지원국인 중국에 대한 외교라인을 대표하는 이름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이는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이 직접 대중관계를 관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북중관계가 당대당 관계로 정상화되고 중국이 여전히 확실한 지원으로 남아 있는다고 하더라도 김정일이 대중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협상능력이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부족할 것이다.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는 가운데에서 대등한 관계로 가려는 노력이 양자간 빼격거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석: 저도 발표자 분들과 같은 생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북한이 처음으로 권력교체를 실험하는 단계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경우에는 이미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권력 승계를 하였으므로 권력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부딪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의 경우에는 이와는 사정이 다르다. 특히 과거에 사회주의 체제 경우를 보면, 이전 지도자가 지명하거나 선호한 사람들의 권력이 단기간에는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얼마 후에 바로 정권이 전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새로운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 권력을 안정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도층을 바꾸는 등 기존의 체제와 구분될 수 있는 정당성 구축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이러한 시도가 기존 지도부들의 이해관계와 어긋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같다. 둘째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의 파워 엘리트들 역시 김정은 정권이 단기적으

로는 안정적이겠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북한의 엘리트들이 이러한 예상을 한다면, 이들은 김정은 정권이 도전 받게 되는 미래의 시점에서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시점에서 이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이는 만일 김정은 정권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도전 받게 된다면, 그 시점은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 빠른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북한의 변화 움직임을 보다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 역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조동호: 김정은 체제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논의할 때 우리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보면 사회주의 경제시스템 자체의 개혁 없이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김정은 체제는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독재국가의 세습이 안정적인 이유가 세습되지 않으면 권력구조의 재편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반발이 불안정을 불러올 수 있으나 세습 구조로 가면 기존 틀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점도 역사의 교훈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시간이 지나고 김정은이 어느 정도 북한 상황을 장악하게 되면 원로그룹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배제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가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전홍택: 중장기적인 변화가 되는 시점의 계기와 성격이 어떠한지, 무엇을 봐야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호열: 저는 북한의 체제, 정권에 있어서 균열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과 엘리트, 시장세력과 반시장세력, 중앙과 지방,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차별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의 김정일식 선군체제와 김일성부터 시작해 온 주체방식의 혼합체제하에서 향후 개방과 개혁 문제 등을 놓고 주민과 엘리트 간의 갈등이 증폭될 시점이 올 것이고, 저는 지금 그런 균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본다. 또 하나, 김정일은 당과 군 간의 갈등을 절대적 카리스마로 혼자서 관장하며 권력기구들 간의 상호 견제, 경쟁을 통해 통치했었다면, 이제 김정은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관, 부서들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김정일 사망 이후에 북한에서 나온 문건들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유훈통치를 선포하면서 과도기를 넘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일종의 권력갈등이 벌써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다. 김정일의 유훈 업적을 상중에 발표를 했는데, 그 업적이라는 것이 핵무기, 지구위성,

산업혁명 및 경제발전, 주민들의 일심단결 등이다. 저는 김정일이 과연 이 업적들을 계승할 것을 유훈으로 남겼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이 업적들은 그 다음체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설정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된다. 김정일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개발하면서도 자기 아버지의 유훈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변명했는데, 굳이 김정일의 업적으로 핵보유국이 된 것을 설정했다는 것은 상충하는 이해 조율보다는 김정일의 업적을 빌미로 기존의 핵정책을 지속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미 핵정책을 놓고 권력투쟁이 시작되었다는 징후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김정은의 행보에 있어 김정일의 유훈을 따를 것인지 김일성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일식으로 가야한다는 측이 현재의 기득권이라면 김일성식으로 가야한다는 측은 김일성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기존의 선군정치식의 권력구도를 변화시키려는 측이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저는 김정일 유훈통치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훈 통치 기간이 김정일이 시행했던 3년보다는 길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변국의 리더십이 변화하는 2012년 이후에는 북한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그 설정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갈등이 상층부 내에서 수평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에 수직적으로도 갈등이 표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는 앞으로 1년 정도가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권태진: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단지 임시 봉합된 상태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 개별 주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하므로 일단 이 체제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부적으로도 북한 사회가 우선 안정된 이후에 김정은 정권에 대해 논의하지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북한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북한 외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김정일 사망 이후에 중국 언론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입장을 바꾸고 있는 듯하다. 최근 수정된 중국의 입장은 김정은의 3대 세습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고, 북한의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므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며,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면 언제든지 부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초기에는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도록 중국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으로 예상되나, 김정은이 자신의 섹채를 드러내게 되면 북중 간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을 수 없으므로 경제적 지원이 단절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내부의 물자 부족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김정은 체제가 북한 주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민들의 새로운 움직임이 있으면 북한 권력 상층부에서도 이를 기회로 삼아 반발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과정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쩌면 1년 내 그러한 조짐이 나타날 수도 있다.

조동호: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균열이 시작되는 시기나 과정에 대해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시간이 지나면 선경파와 선군파가 부딪치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도자는 새로운 슬로건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김정은 시대의 슬로건은 무엇일까? 할아버지의 주체, 아버지의 선군 다음에 나타날 슬로건, 즉 김정은 시대의 상징적 구호는 무엇일까? 나는 이제는 경제와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공교롭게도 강성대국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 김일성은 주체로 사상강국, 김정일은 선군으로 군사강국을 만들었고, 이제 남은 것은 경제강국이다. 게다가 3대 세습의 정당성은 유훈사업의 완성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는 경제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개방 요구가 점차 거세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김정은의 경우 구체적인 슬로건을 어떻게 결정하여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경제', '개방' 과 관련한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석: 북한의 현 상황을 보면, 고르바초프가 등장했을 때의 상황이 떠오른다. 당시의 상황에서 모스크바의 정치 지도자들은 대중적인 지지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반면,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의 기존 정치 지도자들을 충분히 통제할만한 권력기반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 밖에서 일반 소비에트 주민들의 지지를 일으켜 기존 정치 지도자들의 노획한 권력구조를 무력화 시키고자 시도했는데, 고르바초프가 시도한 개혁과 개방 정책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 모스크바의 권력투쟁 과정이 일반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김정은 정권을 둘러싸고 내부의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김정은이 정권을 잡았으나 아직 주위의 여러 정치세력들을 충분히 통제할만한 능력은 없고, 이에 따라 김정은은 자신만의 독재적 권력을 구축하기 위해 이들 정치세력을 무력화시키고자 시도하는 경우이다. 만일 김정은이 고르바초프 식으로 한다면, 그는 북한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인 개혁개방 정책 등을 내걸고, 이를 통해 일반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기존 정치세력을 정리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정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북한내부의 어떤 정치세력이나 지도자가 김정은을 무력화시키고자 한다면, 동일하게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개혁개방 정책 등을 내걸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 지도자들의 권력투쟁이 과연 일반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활용하거나 반영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가는 미지수이다. 그런데 만일 북한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북한주민의 이해관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북한정부가 표방하는 경제정책은 매우 주의 깊고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의 경제정책이란 단순히 경제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북한의 권력 항배와 관련된 파란의 전주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김정은 정권이 자신만의 경제정책을 내걸 텐데, 이 경우 발표되는 경제정책이 어떤 시기에 어떤 권력 구조 상황에서 등장하는가에 따라, 과연 그것이 단순히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인지, 아니면 북한의 권력구조 항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이 될지가 결정된다고 본다.

조동호: 이와 관련하여 조금 다른 생각이다. 김정은의 경우 이미 경제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강국은 김정일의 유훈사업이 되었다. 김정일 사망 보도를 보면 김정일이 사상강국, 군사강국을 만들었고 경제강국을 만들기 위해 초강도 현지지도를 가다가 겹과로로 쓰러졌다는 논리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경제를 내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김정은이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내건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를 기존 논리 위에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치 주체 위에서 선군이 나왔듯, 주체와 선군 위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설령 내용적으로 완전 상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포장은 기존 논리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점이 소련과 다른 점이다. 북한은 3대세습, 유일지도체제, 수령론에 입각해서 운용되고 있으므로, 기존 정책을 허무는 개혁, 개방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못 다한 것을 관찰하는 선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소련식 전면적인 전환은 나오기 어렵다. 선군 위주에서 선경 위주로 갈 때 이해관계를 둘러싼 권력층의 갈등은 예상되나 큰 파열이 없이 진압될 가능성이 크다.

이 석: 기본적으로는 조동호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다른 부분도 있다. 현재 북한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한, 이를 통해 이야기 하는 “선경”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북한의 엘리트들과 일반 주민들도 그간의 경험을 통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김정일은 일반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북한의 엘리트들은 이러한 김정일 정부에 대해 감히 아무런 언급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김정일이 사망하여 비상 국면에 있는 현재의 북한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상황이 진정되고, 김정은 정권이

어느 정도 제 모습을 찾아가는 시점 이후의 일이다. 이 경우에도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할아버지,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들의 이해를 계속 무시하면서 이른바 수령체제나 유일지도체제를 강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과거 사회주의 시절의 매우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변화의 요인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 어느 시점에 표면화된 것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북한과 같은 통제적인 사회의 경우에도 변혁과 관련된 '질량의 변화' 시점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뜻이다.

전홍택: 올해가 강성대국 원년의 해가 되어야 하는데 북한이 강성대국문제를 어떻게 할 것으로 보이는지 전망해 주시기 바란다.

권태진: 올해는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 이란 말 대신에 '강성국가의 건설' 이란 말로 표현을 하였지만,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돌이며 조선인민군 창건 80돌을 맞이하는 해로써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금년은 김정일의 유혼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경제부흥을 위해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국가의 건설' 이란 곧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도약을 꾀하는 것이므로 사상과 제도 면에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황에서는 외부의 자본이 북한으로 유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 내부에서 자본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할 것이다. 신년공동사설에서도 경공업부문에 필요한 원료 및 자재를 북한 자체의 자원과 원료 원천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 '함남의 불길' 이란 말을 강조하는 것 역시 함남은 '주체 비료' 나 '주체 철' 생산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내부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의 통제는 어느 때보다도 강화될 것이며 비공식 부문에 대한 통제도 강화될 것이다. 반면 계획경제체제 정비를 위해 배급제나 국영유통망을 회복시키기 위해 더욱 힘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 당국은 시장에서의 외화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효과를 나타낼 경우 시장 환율은 떨어지고 물가는 안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이 의도한 바와 달리 시장은 통제되었지만 외화사용이 통제되지 못할 경우에는 물가가 그 반대의 방향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시장 혼란은 증폭되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지게 될 것이다.

금년도 식량배급을 증가시킨다는 북한의 의지는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식량배급의 정상화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정도로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먼저, 작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북한의 대중 식량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는 식량을

비축했을 것이라고 본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 장성택이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라고 식의 표현을 들었다. 빵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최근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6,000여만 톤의 콩을 수입하고 수백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하는 곡물 순수입국으로 전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요구에 따라 옥수수와 비료를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역시 북한에 “영양지원” 을 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 금년에는 식량배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대국 건설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하는 바탕위에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우선 먹는 문제(농업부문)나 입는 문제(경공업 부문) 해결을 위해 힘쓸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식량은 수입 또는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식량배급을 증가시켜 계획경제체제를 복원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금년도 식량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우선 배정하고 집단동원 방식으로 농번기의 노동력을 더 많이 공급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도 북한의 식량부족량은 70여 만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부족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수입 예상량 32만 5천 톤을 감안할 경우, 식량 부족량은 40여만 톤으로 줄어든다. 여기에서 중국이나 미국, 유엔기구로부터의 식량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경우 식량부족은 거의 해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2012년은 최근 몇 년 중 식량배급 상황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2012년 초에는 흥남비료공장의 주체비료 생산시설의 개건을 마치고 북한산 석탄을 원료로 생산되는 질소질 비료(주체비료)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1년부터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비료를 중국에서 수입하였으며 금년 봄 영농철에 대비하여 비료를 비축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올 해 농사도 잘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식량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식량배급 문제도 해결되어 물가 안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전홍택: 북한 식량 사정이 나아짐에 따라 체제도 안정이 되어가면, 김정은 체제에 자신감이 붙으면서 시장을 탄압할 가능성은 없는지?

조동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탄압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강성대국은 유보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한 단계 낮은 “강성국가” 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신년공동사설에서도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100년이 아니라)로 진입하자” 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김정일의 유훈 사업이니까 경제강국 실현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다. 또 경제강국은 김정일이 일반 주민의 지지를 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런데 경제강국, 혹은 경제 활성화가 시장 없이 가능할 것인가? 시장은 가능하다면 없애고 계획경제를 실현하고 싶을 것이나 이는 희망사항일 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이 계획경제체제를 완전 정상화할 만큼의 재정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지나친 확산은 방지하되, 시장과의 동거는 불가피하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미 북한의 권력층이 시장과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군부이다.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이 시장과 이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시장의 말살은 어려울 것이다. 시장 억제책이 나올 수는 있으나 시장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석: 두 분의 의견에 모두 동의한다. 현재 북한은 시장을 통제하고, 외환 사용을 억제하며, 국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비공식 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북한당국 역시 시장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유통될지도 모를 각종 소문이나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 심지어는 일반 주민들의 물리적인 모임 자체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권태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당국은 이러한 통제정책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반주민들에게 식량 등 기본 물자를 배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의 식량생산과 그간 올해의 강성대국 선포를 위해 북한당국이 입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물자를 이용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배급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북한 당국도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북한당국이 보유한 식량 등 확보 물자 자체가 한계를 보이는 경우, 지금과 같은 시장통제적인 정책을 계속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당국은 지금처럼 통제적인 정책을 계속하기 위해 어딘가에서 부족한 물자를 새로 채워 넣거나, 아니면 현재의 통제적인 정책을 버리고 시장을 다시 허용하는 보다 유연한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를 택하려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보다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해외로부터의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할 것이다. 반면, 이러한 대외관계의 개선이 여의치 않고, 이에 따라 북한당국의 추가적인 물자확보가 가능하지 않다면, 북한당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시장 통제를 완화하는 보다 유연한 정책으로 선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러한 선택이 대체로 김일성의 생일, 다시 말해 올해 강성대국의 선포

시점인 4월 15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유호열: 북한경제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은 향후 북한경제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모순의 축적” 이다. 대외관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경제와 맞물려서 북한의 모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번에 김정은 7인 후견인 중, 당측에서는 장성택, 김기남, 최태복이 거론되었다. 굳이 구분하자면 장성택과 최태복은 중국측 라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최태복은 당비서이면서 국제담당비서이고 또 최고인민회의 의장이다. 그는 앞으로도 중국을 방문해서 북한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받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강석주는 내각 부총리이고 해외교를 주도했던 인물일 뿐만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서, 김정일 시대에 강력한 외교간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권력 핵심이 최태복이나 장성택쪽으로 간다면, 대중관계에서 누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이 대두될 수 있다. 그 핵심은 이권 관계와 경제적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북한의 자원을 중국에 수출해서 외화를 조달했는데 이처럼 막대한 외화가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석탄수출 제한, 외환사용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은 뭔가 내부의 정책결정라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북한 시장에서 제2의 화폐개혁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부분 상인들은 달러나 중국 위안화로 시장거래를 하고 있다. 2009년 화폐개혁으로 인해 상인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다가 이제 겨우 복구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인들은 더더욱 북한돈으로 거래를 하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교역, 유통, 투자를 통해서 최대한 자본을 끌어들어서 강성대국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시장을 허용하던 것에 제동을 걸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조짐들이 김정일 사망 후 급격하게 대두된다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경제운용과 관련한 노선갈등이 조기에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그동안 외화벌이는 군부의 결정사항 중 하나였다. 외화벌이 사업중 10개의 이권사업이 있다면 8~9개는 군부가 관할하고 나머지 사업을 당에서 주도하고 있다. 권력 이양기 전면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이념투쟁의 문제로부터 오히려 이권에 기반을 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권력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자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함남의 불길’ 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너무 분명하다. 또 김정은이 CNC, 새 세기 산업혁명을 주도하지만, 이 역시 실체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것은 김정일이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때 외화를 끌어들이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북한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에는 아직은 너무 큰 간극이 있는 방식이다. 따라서 북한은 전반적인 경제운용은 원조를 받는 것에 치중하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정책노선에 대한 모순이 극복되지 않는 한 북한경제는 조만간 심각한 침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된다.

전홍택: 대중국 의존도 심화가 결국 권력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언제 방중하는가도 주목해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향후 행보는 언제쯤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조동호: 김정일 시대의 3년상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즉 김정은이 공식 지위에 오르지 않고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정일의 경우 오랫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사후 즉각 전면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외교적으로는 한중, 한소 수교, 대내적으로는 고난의 행군 등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시대를 선포할 새로운 비전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버지의 시신 뒤에 숨어 3년을 지내고, 고난의 행군이 끝나자 전면에서 나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 상황이 훨씬 좋다. 김정은이 굳이 유훈통치라는 미명하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며, 공식적인 스케줄에 맞춰 최고 직책을 확보할 것이다.

권태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은 유훈통치 기간을 3년으로 하였고, 김정일 식의 농업정책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1998년도는 김정일의 의지와 외부의 물자 유입이 모두 일치된 시기이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1998년도에 유엔개발계획(UNDP)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지원이 체계화되었고, 북한과 유엔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유엔도 지원을 약속하며 북한이 정책을 바꾸도록 권고하였고, 북한의 농업정책이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조동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북한은 1998년보다 핵무기 등 거래를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졌다. 즉, 외부 세계와 거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금년에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훈통치라는 명목으로 행동을 드러내거나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유훈통치를 내세워 반복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마냥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럴 경우 내년 즈음에 북한은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것이다. 중국이나 미국 등 외부로부터 자본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이들 나라들의 대북지원 여부는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상황이 조성되면

북한 내부에는 여러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북한은 다시 외부와의 대화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데, 이 시점이 유훈통치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훈통치의 전환점은 1년 사이에 발생되지 않을까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유호열: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김정일의 태도를 보면 북한에서 절대권력자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김정일은 그 당시 총비서를 제외한 최고직책을 차지하고 있었고, 20년이상 실질적으로 통치해왔기 때문에 주변사람 역시 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후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 식량문제 심화, 대중국관계 소원 등으로 유훈통치를 2년 하다가 3년까지 연장하였다. 유훈통치 기간 말미에 가서야 비로소 중국은 대북 원조를 재개했고, 대표단도 보냈다. 1997년 총비서, 1998년 국방위원장 취임 즈음에 북한의 대중국 관계는 상당부분 복원되었다. 김정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어려운 유훈통치의 기간이었던 반면, 김정은의 경우는 이와 상당히 다르다.

김정일과 김일성, 김정은과 김정일의 부자관계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김정일은 한두 번 정도 김일성을 아버지라도 부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김일성 역시 아들에게 비서라고 직함을 불렀다고 한다. 또한 김정일은 아버지를 승계해야 하는 장자로서의 책임감이나 역할이 있었으나 김정은은 자신이 후계자로 지목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친형인 김정철을 후계자로 하려는 고영희의 노력도 2005년까지는 지속되었으니 김정일과는 상황이 달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유훈통치기간은 길어질 수가 없다.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상황적 조건도 있었지만 부자간의 관계에서 나온 애도감이 있었지만, 김정은은 그런 감정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김정은은 어떻게든 빨리 김정일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오히려 할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며 현재 보여지는 모습도 김일성의 모습. 그래서 지금 드러나는 외모, 어투, 사람대하는 태도 등에서도 김일성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다.

태양절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시대로 갈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어차피 주변정세도 과도기고 자기도 내부정비를 해야하니 명목상 1년상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애도기간은 지난 것 같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시대의 지도자와 인민들간의 관계로 자신과 북한 주민들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텐데, 그러한 역량이 김정은에게 있는지 의문이다. 김정일의 요리사였던 후지모토의 말처럼, 김정은이 전략가로서의 자질, 투쟁심 등을 갖추었다더라도 이상화 노력에 의지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지, 아니면 그런 인물로 부각시키고 나서 실질적으로 장성택을 비롯한 후견그룹

들이 이끌어갈지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유훈통치는 기간은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훈통치의 성격도 김정일과는 다를 것이다. 김정일이 아버지 대를 이어받아서 시대에 맞게 선군정치를 내세웠지만, 김정은은 선군을 내세우면서도 선군정치를 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이전의 할아버지 시대의 당을 중심으로 한 집체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본인은 그 안에서 일종의 최종결정을 하는 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영희는 북한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실제로 김정숙은 혁명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상화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고영희는 북한사회에서 공인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이라도 김정은은 아버지 세대를 빨리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이 석: 순수하게 경제정책만 보면 변화의 계기는 두 가지 정도이다. 하나는 태양절이고, 하나는 북한 주변국의 선거가 마무리되는 금년 말 정도라고 생각한다. 태양절까지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현재의 경제정책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양절 이후에는 북한당국이 보유한 자원 역시 한계를 드러내어 기존의 통제정책 유지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부로서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모색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물자를 확보해야 하는데, 올해 말에 한국,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모두 정권교체에 들어선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현재의 주변국 정부를 상대로 북한이 대규모의 물자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전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당국으로서는 태양절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는 커다란 변화없이 정중동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는 6자회담 재개와 식량원조 등 기존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중국과도 고위층의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일정한 추가적 지원을 얻어내는 것 정도에 만족하는 대신, 국내적으로는 이제까지의 통제적인 정책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시장 활동을 암묵적으로 다시금 허용하는 정도라고 판단된다. 다만, 올해 말 주변국들의 정권교체가 가시화되면, 이들 신정부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접촉이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북한의 경제정책이 본격화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전홍택: 우리가 어떤 대북정책을 취해야 할지, 현재 정부뿐 만 아니라 미래 정부에 대해서 제언을 해 주시길 바란다.

유호열: 이명박 정부는 정책을 전환할 수도 없고, 현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이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정책을 전환하는 것 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정권자체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과도기적 상황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의 원칙 중의 하나가 5.24조치이다. 5.24조치는 다음 정권에서는 이전 정부의 정책으로 단정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현 정부가 5.24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천안함 폭침에 의해서 제정된 조치이긴 하지만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 주도로 전개하기 위해서 5.24조치는 국민적 여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김정은 정권자체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사실적 전망에 기초해서 대북정책의 기초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앞으로 차기 정부, 또는 국가입장에서 필요하다. 김정은 정권은 이석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르바초프와 닮을 가능성이 많다. 김정은의 성격이나 리더십을 우리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환경적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 정권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은 북한체제의 이면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꿰뚫고 있었으며,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고 또한 남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김정일에게는 북한 체제의 생존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충실할 수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취했다. 반면 김정은은 우선 북한을 잘 모르고, 다른 분야의 능력이 뛰어날 수는 있겠지만 북한에 대해서만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나 계기가 없었다. 그래서 김정은은 북한사회의 모순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이어받은 나라의 문제점을 독자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 그런 김정은에게 시간을 많이 줘서 제2의 김일성, 김정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상황을 몇십 년 더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의 정책방향이나 성향을 잘 이해해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저는 후자쪽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우리의 대북정책의 방향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모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초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권태진: 최근 정부는 남북관계가 너무 오래 경색되고 5.24조치의 실효성이 조금씩 떨어지자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조금씩 누그러뜨리면서 “6자회담의 상황을 지켜보겠다.” 는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취한 5.24조치 때문에 전면적 정책 전환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꺼번에 정책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국민들을 설득시키기가 어려우며 북한이 이에 화답할 가능성도 낮아 실효성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은 현 기초를 유지하면서 차츰 유연성을 넓혀 나가는 것이다. 현재의 대북 정책 기초를 유지한다는

의미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협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과의 정책 공조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아직까지 미국은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6자회담의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원칙과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연성의 확대는 민간단체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북한의 화답이 있을 경우 남북교역의 확대나 개성공단 이외 지역으로의 경협 영역을 넓혀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조동호: 올해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성과는 있었으나 원칙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받는 반면, 이명박 정부는 원칙은 있었으나 성과에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 남은 임기동안에는 원칙은 끝까지 지키되, 향후 성과의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핵심적인 장애 요인은 5.24 조치인데 획기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폐기한다고 할 수도 없고,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5.24 조치를 우회하는 부분, 사회문화교류, 방북 허용, 인도적 지원, 공동방제작업, 개성공단의 1단계 진행 등이 이명박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향후 다음 정부는 북한이 조만간 망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김정은 체제는 예상보다 안정적이며, 대내 갈등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북한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북한 자체의 내구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이다. 중국이 자국의 이익 차원에서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므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의 안정을 적극 추구할 것이다. 반면 이와 동시에 김정은 체제는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고, 그 방향은 경제 이외에는 없다. 북한이 좀 더 빠르고 넓게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 외교 정책을 통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북한의 기존 시스템 내에서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개방이 불가피하다. 조심스러운 개방을 추구할 것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으로는 나선, 황금평 등 특구활성화, 추가적인 특구 지정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호열: 우리의 대북제재는 524조치라고 할 수 있고 그 핵심은 경협이다. 그것은 UN안보리 제재결의안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UN안보리 결의안은 북한 핵개발에서 비롯되었듯이 제재의 원인은 다르지만 내용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UN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완화하거나

변경시키면 우리도 5.24조치의 일부분을 풀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연평도 포격 이전에 있었으나 매듭짓지 못했다. 북한도 당분간은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거론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현 정부하에서는 변화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 석: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김정일이 생존해 있다면, 우리 정부는 현재의 원칙 있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향후의 남북관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사망한 현 상황에서도 정책의 방향성이 동일해야 하는가는 약간 생각해 볼 문제라고 판단된다. 현재의 김정은 체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불확실성'이다. 물론 김정은 체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것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이고, 남북관계의 당사자이며, 북한의 발전을 지지하고, 북한의 변화를 누구보다 원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에 매우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정부가 김정일 사망을 끝으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조성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우리의 개입 공간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점은 우리국민과 북한주민, 그리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가 과연 어떤 시그널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유호열: 현재로서는 5.24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응징제재안이었고, 북한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시인 및 사과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 정부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실 규명, 책임 추궁은 지속할 수 있겠으나 5.24조치와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현 정부가 5.24조치를 끝까지 가져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 정부는 5.24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정권을 마무리 할 것인지, 아니면 5.24조치를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그것이 역사적 성과로서 자리매김을 하도록 하고 집권기간을 마감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전홍택: 토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호열: 저는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유신통치기간 또는 과도기에 정치적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김정은 시대의 경우, 향후 북한내부에서 개방과 관련한 노선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가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안보측면에서도 충분한 역지력을 발휘해서 도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경험은 그동안 퍼주기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퍼주기도 우리에게 새로운 또는 귀중한 교훈이었다. 5.24조치가 규제하고 있는 틀을 벗어나 경험과 관련된 부분이나 인도적 지원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우리 주도하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 수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권태진: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가든지, 앞으로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가져가는 기초로써 어떠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24 조치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틀 내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넓혀 나가면 될 것이다.

이석: 김정일의 사망을 계기로 우리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우리의 대북정책은 우리로서는 어찌지 못하는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북한요인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좋든 싫든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대북정책은 과연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김일성, 김정일을 대체하는 김정은 정부, 북한주민, 우리국민,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 과연 이들 가운데 우리의 대북정책이 진정 누구를 상대로 정립되어야 하는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

조동호: 흔히 이명박 정부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극단적이라고 이야기되지만, 대북 인식론 차원에서는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햇볕’ 정책은 햇볕으로 북한의 옷을 벗기려고 했고, 이명박 정부의 ‘강풍’ 정책은 바람으로 옷을 벗기려 했다. 포용이든 압박이든 외부의 영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의 경험은 그것이 옷이 아니라 문신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어차피 햇볕으로든 바람으로든 해결이 안 될 것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 스스로 문신을 지우러 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차기 대북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햇볕이나 바람이나와 같은 1차원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7.7선언을 통해 적국으로만 규정되었던 북한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대중, 대소수교를 통해 새로운 대외환경을 만들었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7.7선언을 받아들일도록 하였고, 남북경협에 착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김정은의 북한은 조만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만 하는 시기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에게는 정책적 호기이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구조 자체를 바꿔 나가는 정책으로 변모해야 한다.

전홍택: 장시간 토론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정은체제와 2012년

이교덕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kd227@kinu.or.kr

1. 김정일 사망 시 김정은의 위상

북한의 절대권력자 김정일이 만 70세 생일을 두 달 앞두고 갑자기 사망했다. 2008년 8월 건강에 이상이 생겼지만 사망 사실을 전한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멀리 떨어진 군부대를 주로 방문하는 현지시찰과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한 국정운영 스타일이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정해놓은 것이다. 『로동신문』은 “후계자의 유일한 령도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 사소한 우여곡절이나 편향도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 이라고 추모했다.¹⁾

김정은의 생일로 추정되는 1월 8일 북한의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을 이상화하는 기록영화 “백두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시어” 를 방영했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은 “일찌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나날로부터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받들어” 왔고 김일성종합대학 시절부터 ‘인민군대 강화를 위한 사업’ 을 지도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십대 초반부터 아버지를 보좌해온 ‘준비된 후계자’ 임을 선전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후계자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0년 9월말 북한 노동당 당대표자회에서였다. 여기서 그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지만 북한의 명목상 최고 권력기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5명 위원 가운데 하나로 선출되지 못했다. 권력서열의 가늠자가 되는

1)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로동신문』, 2011.12.22.

‘주석단 호명 순서’ 에서 비록 그가 2011년 2월 17일 김정일 생일 경축연회에서 상무위원이자 군총참모장 리영호를 앞질렀고 3월 8일 북·러 예술인합동공연 관람 시 역시 상무위원이자 내각총리인 최영림에 앞섬으로써 후계자에 걸맞는 위상을 찾아가는 중이었지만 공식적인 직위는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뿐이었다.

또한 김정은이 군사부분이 아닌 경제 분야의 현지도에서 김정일을 수행한 것이 보도된 것은 2011년 3월 4일자 『로동신문』이었다. 김정일이 3월 3일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 현지도 시 수행한 것이다. 현지도 사진을 게재한 이 날짜의 신문에서 김정은은 수행한 사실만 보도되었을 뿐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아버지의 경제분야 현지도 사진에 등장한 것은 4월 7일자 『로동신문』이었다. 이 날짜 신문은 전날 김정일이 자강도내 공장과 기업소를 현지도한 사진 23장을 게재하면서 이 중 4장에 걸쳐 김정은의 모습을 담았다. 이후 『로동신문』은 김정은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킨 사진들을 게재하고 있었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체제의 권력승계는 통상 현 최고권력자가 집권하고 있는 때에 후계자를 선정하여 육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후계자의 입장에서는 집권에 대비해 국정을 학습하는 준비기간인 셈이다. 이 기간 동안 후계자는 현 집권자의 후원과 배려 하에 향후 자신의 시대에 작동할 지배체제를 조심스럽게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후계체제 수립은 후계자가 내정되기까지의 단계, 내정 이후 공식화될 때까지 후계자가 독자적 권력기반을 구축하는 단계, 후계자가 공식화되어 현 집권자와 공동통치하는 단계, 현 집권자의 사망 후 공식적으로 권력을 승계하는 단계의 4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 같은 연속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할 시점에 김정은은 어디쯤 와 있었을까?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것은 2009년 1월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월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하였다는 김정일의 교시가 리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게 하달되었고, 이는 인민군 총정치국 중심으로 우선 전파되었다고 한다.²⁾ 내정 전에 김정은이 어떤 준비과정을 거쳤는지 여러 소문은 있지만 모두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후계자로 내정되기 이전 분명히 내정을 위한 사전 정치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김정은은 2010년 9월의 당대표자회에서 후계자로 ‘공개’ 되었지만 공식 선포되지는 않았다. 김정일의 경우 1964년 대학을 졸업하고 당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거의 10년만인 1974년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내정되었고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통해 후계자로 ‘공식화’ 되었다. 당 행사를 통해 후계자로 내정되고 공식 확정된 것이다. 반면 김정은은 ‘교시’ 로 내정되고 당 행사를 통해 ‘공개’ 되었을 뿐이다.

2) 『연합뉴스』, 2009.1.15.

김정은이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것은 2006년 12월로 알려져 있다. 국가보위부, 국방위원회 등 다양한 소문은 있으나 대학졸업 후 어디선가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고 2009년 1월에 후계자로 내정되었다. 2008년 8월 김정일이 쓰러지지 않았으면 내정시기는 좀더 늦춰졌을 것이다. 김정은은 내정된 지 불과 21개월만에 '공개' 되었다. 따라서 김정일이 내정되고 6년간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후 공식화된 것과는 차이가 있고 그만큼 정통성에서나 지지기반 확보에서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에게 부여된 직책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 된 1980년 당대회에서 맡은 직책은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었다. 또한 김정일은 이미 1974년에 당의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비서와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에는 당권 장악이 급선무였고 군의 장악은 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아버지의 사망 시점에 당의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와 부장 명단에 올라있지는 않았다. 이 점에서 김정은의 위상은 1980년의 김정일에 미치지 못했다.

김정일이 내정 된 뒤 '공식화' 되는 2단계의 과정을 거친 것에 비해 김정은의 경우 '내정' 되어 '공개' 된 뒤 '공식화' 이라는 3단계로 가는 도중에 아버지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내정한 뒤 공식화하는 중간에 '공개' 라는 또 하나의 과정을 삽입한 것은 아마도 김정은의 독자적 권력기반 구축을 '공개' 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후계자의 정당성을 선전홍보하는 기간을 거쳐 김정일 때와 마찬가지로 '당대회' 라는 성대하고 중요한 정치행사를 통해 '공식화' 하려 했을 것이다. 선군정치로 인해 당의 위상과 역할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북한이 당-국가체제인 한, 김정은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행사라는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후계자는 현 수령의 '교시' 가 아니라 형식상 인민에 의해 '추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경우는 1980년 공식화된 뒤 관영매체들이 그의 '실무지도' 를 보도하는 등 국정운영과 관련한 행보를 독립적으로 선전했고 사진도 공개했다. 반면 김정은의 경우는 그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관영매체들이 아버지의 현지도도를 수행한 사실만 보도했을 뿐 그의 독자적인 행보는 알리지 않고 있었다.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 과정이 아버지 때와 반드시 동일할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지만 2011년 12월 무렵,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은 앞서 말한 2단계의 끝, 또는 3단계 초기의 어느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단계 중에서 중요한 것은 후계자가 독자적 권력기반을 형성해가는 2단계이다. 김정일의 경우 숙부 김영주와의 권력투쟁을 거쳐 6년만에 이 단계를 통과했다. 이 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완료될수록, 그리고 후원자 김정일이 늦게 사망할수록, 김정은의 독자적 권력기반

구축이 더 튼실해진다. 그러나 3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강력한 후원자가 사라졌다.

2. 김정은체제의 권력구조

후계자로 내정되었지만 권력을 이양받는 속도의 결정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몫이다. 아버지가 건강 이상에도 불구하고 ‘정력적으로 일을 하는 한, 권력이양을 재촉할 수도 없고’, 불경스럽게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만들 수도 없다. 할아버지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아버지 김정일은 실질적으로 통치해온지 십수년이 지났고 직책도 당 정치국 상무위원, 국방위원장 및 최고사령관이였다. 김정은은 12월 30일에 서둘러 열린 당 정치국회의에서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제도적으로는 정치국원도 정치국 후보위원도 아닌 김정은은 이 회의에 참석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북한 헌법상 국방위원장이 최고사령관을 겸직하게 되어 있으므로 3월말이나 4월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될 수 있을 것이나 그도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영원한 주석’ 으로 모시고 주석제를 폐지한 것처럼 국방위원장이라는 직책을 폐지할지도 모른다.

북한 관영언론들이 김정은을 ‘준비된 후계자’ 로 선전하지만 준비되기에는 경험도 기간도 나이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김정은체제가 어떤 권력구조로 귀결될지 추론해 본다면 크게 일인지배체제, 집단지도체제, 양자의 혼합형 체제의 3가지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 우선 집단지도체제는 통상 그 누구도 1인자로 부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등장한다. 김정은이 스스로의 힘으로 북한을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미처 구축하기 전에 김정일이 사망해버린 상황이라면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단지도체제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수령론과 배치된다. 수령을 혁명의 ‘최고 뇌수’ 이자 신적인 존재로 선전해온 북한체제에서 수령의 역할을 집단이 대신하는 집단지도체제는 생경한 것이다. 북한체제는 수령이 당-국가체제를 지배하는 수령제 국가이고 수령의 혈통계승에 대해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당연시한다. ‘백두’ 의 혈통과 혁명전통을 절대화하고 있는 현재 북한의 담론 및 이데올로기체계 하에서 김정은이 아닌 제3자, 설사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 하더라도, 제3자의 등장은 기존의 정당화 논리와 모순·충돌한다. 따라서 현재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는 구호를 내세우고 김정은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우리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미래” 라고 찬양을 하는 등으로 미루어 볼 때³⁾ 집단지도체제는 아닌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하다.

이처럼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라면 김정은이 어리고 현실정치 경험이 부족하며 당내 권력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명목상의 수령과 집단지도체제가 혼합된 형태의 체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추론할 수 있다. 즉 일인이 수령을 계승하되 집단지도체제와 일정하게 공존하는 혼합형이다. 외형상으로는 일인 수령이 지배하는 체제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권력행사가 제한된 형태를 말한다. 후계자가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승계받지만 과거 수령과 같이 완벽하게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당, 정, 군의 유력자와 사실상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인 것이다. 현실에 대입하면 김정은이 수령이지만 명목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유력한 정치인들이 뒤를 돌보아주는 체제이다. 따라서 '후견체제', '상징적 수령제' 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겉모습은 수령체제이지만 실체는 집단지도체제인 경우이다. 이 혼합체제는 집단지도체제와 다른 유형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세습후계자인 김정은과 당·군의 실력자들에게 권력이 배분된 집단지도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 형태는 김정은과 유력한 정치인 집단 사이의 힘의 균형추가 후자 쪽에 쏠려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유력한 정치인 집단이 김정은을 상징적 존재로 세워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때 성립할 것이지만, 이는 본질상 집단지도체제이고 나중에 겉모습을 벗어버리고 사실상의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혼합체제는 현 김정일체제 형태 유지에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유력 권력엘리트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잠정적일 뿐이다. 권력엘리트들이 바로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지 않고 이 형태를 선호할 이유가 있다면, 김정일과 같은 일인자가 없다는 현실과 수령체제를 지켜온 오랜 관성에 있을 것이다. 현재의 김정은체제가 이 형태인지는 조금더 지켜볼 일이다.

한편 김정은체제가 수령 유일지배체제로 될 수 있느냐는 수령 유일지배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주요 조건들이 앞으로도 충족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북한체제의 성격상 수령 유일지배체제의 구축이 불가능하거나 그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유일지배체제의 구축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특히 김정일이 세습을 결정한 핵심적 이유도 후대 수령에 의한 기존체제의 고수에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세습한 방식과 유사하게 후계체제를 구축하고 후계자에게 수령 유일지배체제를 물려주고 싶었을 것이다. 김정일의 입장에서 김정은체제를 당과 군의 실력자들에게 권력을 분산시켜 그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집단지도체제 형태가 되도록 할 이유가 있었을까? 김정일이 후계자에게 기대하는 바, 즉 전임자에 대한 충실성과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라는 기대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다면 집단지도체제 구축을

3)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선군조선의 영원한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로동신문』, 2011.12.24

시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집단지도체제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은 당과 군 등의 지배엘리트들을 김정은과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지도체제의 일원으로 후계체제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총복으로서 권력에 참여시키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2009년 김정일은 국방위원회가 김정은의 후계체제를 가장 충실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군 최고위 인사들로 구성된 국방위원회에 당 행정부장, 인민보안부장,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을 포진시켰다. 2010년 9월에는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군을 장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차수로 승진하여 군의 실세로 급부상한 리영호 총참모장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김정은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도록 했다. 또한 여동생 김정희와 김경옥, 최룡해 등을 대장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정치국과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배치했다.

절대자인 김정일의 의사가 유일지배체제 수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 유일지배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근거는 김정은의 권력기반과 장악력이 아직은 약한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최고 권력자로서의 입지를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탄탄하게 구축하느냐는 지배엘리트들이 얼마나 단합하여 지원하는가에 달려있다. 60년 이상 부자세습으로 이어진 장기집권은 집권자가 선호하지 않는 엘리트들의 등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 특히 선군정치는 지배집단의 규모를 줄였지만 그 속에 군부세력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들 지배엘리트들은 권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권력공백으로 인한 위협을 막기 위해 통치자의 후계자 선택을 수용하게 된다. 김정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될 경우 권력재편이 따르고 그 속에서 숙청을 당하거나 기득권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받아들여 이제까지 누려왔던 각종 이익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따라서 그들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후계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다. 단 이는 그들이 이익 공유를 매개로 단합할 수 있는 기간에만 적용된다.

3. 김정은의 정통성과 2012년

김정일이 1974년에 비공식적으로 추대된 뒤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까지 6년간 내밀히 ‘검증기간’을 거쳤다고 하면 김정은은 내정 이후 2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공개되었다. 아버지의 건강악화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공개한 뒤 김정은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는 검증기간을 거친 후 공식 확정하는 절차를 밟으려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정치일정이 당겨졌고 그만큼 김정은의 정통성은 확고하

지 않다. 예술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관심이 많았고 또 그 방면에 재능이 있었던 아버지 김정일은 김정은이 인민으로부터 절대적 추앙을 받는 할아버지의 외모를 닮게 하여 카리스마를 전이하고자 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김정은으로서는 2012년이 매우 중요한 해이다.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 김정일 70회 생일, 창군 80주년을 맞는 해로서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공언한 해이다. 김정은이 후계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해야 하고 또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정은의 정통성(legitimacy)은 합리적인(rational) 것이거나 전통적인(traditional)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리스마적인(charismatic)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혈통승계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여 북한은 후계자가 혈통에 의해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있느냐에 따라 인민에 의해 '후대' 되고 수령에 의해 낙점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정립했다. 따라서 김정은은 북한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김정일의 혈통과 관계없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진 비범한 인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2012년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북한은 '강성대국 진입' 선언을 위해 그동안 자금과 물자 확보, 대규모 토목공사 완공에 주력해 왔다. 김일성 100회 생일, 김정일 70회 생일을 기념하는 국제행사가 열릴⁴⁾ 평양시의 조경과 아파트 공사, 유경호텔 건설을 서둘러 왔다. 아파트는 애초 10만 세대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2012년 4월까지 만수대지구에 3천세대를 우선 건설하는 것으로 바뀌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105층의 유경호텔 공사도 자재난으로 인해 외벽 유리만 부착한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20층까지만 내부공사를 진행한 후 부분 개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 노동력 확보에 거의 모든 국가기관과 주민들이 동원되면서 여러 부작용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해외 공관원 및 상사원 등을 대상으로 물자·자금 상납을 독려하는 가운데 인민보안부와 국가보위부가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재산을 압수하고 있고 육체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생들을 공사에 동원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원성이 높다고 한다. 더욱이 김정일이 강조한 희천발전소와 백두선군청년발전소 건설 등이 지체되어 김정일은 물론 김정은도 분노했다고 한다.⁵⁾

그러나 김정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배급 정상화이다. 북한 당국은 주민교양시간 등을 통해 “강성대국의 문이 열리는 내년에는 정상적인 식량배급이 가능하다”고 선전했고⁶⁾ 식량배급 정상화 준비작업으로 2011년 10월경부터 전 지역에서 주민 식량배급표 정비작업을

4) 2011년 4월 14일자 『로동신문』은 2010년 10월에 '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 기념 국제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고 보도했다.

5) 박형중, “북한의 2012년 준비 동향과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11-33.

6) 『연합뉴스』, 2011.11.1.

진행했다고 한다.⁷⁾ 북한이 일시적으로나마 다시 식량을 배급할 수만 있다면, 이는 강성대국 진입을 선전하는 데 유용하고 더불어 김정은체제의 착근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김정은이 권력기반을 다지고 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순조로운 세대교체이다. 김정은이 현재 권력층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그 척도의 하나는 당과 군대, 국가의 주요 기관에 김정은의 인사로 분류되는 엘리트들이 충분히 포진하고 있는가이다. 아버지 세대,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의사소통하기도 어렵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북한에서는 세대교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0년 5월 18일 당 중앙위원회는 각급 당 조직들에서 젊고 능력있는 간부들을 대거 천거하고 등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⁸⁾ 북한은 2006년 10월 15일자 『로동신문』 정론 “조국이 우리를 지켜본다” 에서 김일성이 혁명 개척세대인 1, 2세대의 대표자라면 김정일은 혁명의 계승 세대인 3, 4세의 대표자라고 했다. 3, 4세대는 ‘주체의 조국’ 건설에 매진한 1, 2세대에 이어 ‘선군정치의 조국’ 건설을 담당하게 된 40~50년대생으로서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선군혁명의 최후승리와 강성대국건설” 이라는 것이다.⁹⁾ 따라서 김정은체제 구축과정은 혁명 5세대와 6세대인 ‘새세대’ 와 더불어 진행될 것이고 김정일 세대인 혁명 3, 4세들이 후견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당 대표자회에서 124명의 당 중앙위원이 선출되었는데, 이들은 김정일이 1997년 총비서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중용된 사람들이었다. 군부도 1992년에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인사를 했을 때 소장, 중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중심인데, 그 핵심인물이 리영호이다. 당 중앙위원은 당 부부장 이상, 내각의 상·부상, 최고인민회의 주요 간부, 군대 상장 이상 등 당연직이 많기 때문에 김정은 등장과 함께 세대교체가 된다고 해서 20, 30대가 중앙위원이 될 수는 없다.

세대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간부등용은 노·장·청 배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특히 노·장에 대한 예우는 유지될 것이다.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지금 눈에 띄는 당·정·군의 주요 인사들이 권력행사의 중심이 될 것이다. 김정은체제의 구축에 당 비서국에서는 문경덕을 비롯한 5, 60대의 비교적 젊은 비서들이,公安부문은 장성택이, 군부는 리영호와 김경옥이, 근로단체와 젊은 세대의 동원은 최룡해 등이 선봉에 나설 것이다.

7) 『자유아시아방송』, 2011.11.24.

8) 『열린북한방송』, 2010.7.8.

9) “혁명의 3세, 4세,” 『로동신문』, 2006.2.28; “혁명은 대를 이어,” 『로동신문』, 2007.3.19.

그런데 현재 북한의 엘리트층을 구성하고 있는 3, 4세대와 다음 세대의 엘리트로 성장할 5, 6세대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선 3, 4세대들은 70년대 초반 3대혁명의 주축세력으로서 유일사상체제의 기초 축성에 기여했고 북한체제의 최고 전성기를 풍미했으므로 체제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즉, 이 세대들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에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시혜를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투철한 혁명성을 보일 수 있다.¹⁰⁾ 하지만 5, 6세대는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하고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는 등 개방적 경향을 띠는 반면 경제적으로 점차 쇠락해가던 시기에 성장했으므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3, 4세대에 비해 다소 약할 가능성이 있다. 필자가 면접한 24세의 한 탈북군인은 “우리는 정부가 어떻게 해서 자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부모들이 피나게 벌어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지금 우리 밑의 세대는 그런 경향이 더 농후해요” 라고 대답했다.¹¹⁾ 사상교양을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 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요구받지만 3, 4세대보다 더 실리적이고 대외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¹²⁾ 전례없이 북한이 『로동신문』에 국방위원이나 정치국원 등 주요 인사의 이력을 소개하고 주요 정치행사에 서방 언론들을 초청하여 취재를 허용하며 김정일의 장례식을 생중계한 것 등은 폐쇄성의 고수가 실익이 없다고 느끼는 이들 세대의 작품일 개연성이 있다.

앞으로 북한을 이끌어나가고 김정은체제의 주축이 될 집단은 이들 3, 40대의 혁명 5, 6세대이다. 지금도 북한의 일부 분야에는 담당자들의 나이가 30대이다. 조직지도부를 제외하고는 당내에서 30대 중반이나 40대로 넘어가는 세대가 실무의 팀장급으로서 업무를 이끌어가고 있다. 당내에서 김정은과 호흡하는 30, 40대 과장급 등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가 김정은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가장 보수집단이라고 평가되는 군부쪽에도 군단장은 40~50대, 사단·여단장들은 일부 30~40대로 교체되었다. 이들의 직책이 한 단계씩 승진하여 부부장급으로 올라가면 김정은체제를 뒷받침하는 당내 파워집단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¹³⁾

2010년 9월의 당대표자회를 통해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영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청년동맹을 통해 신진엘리트를 양성·배출하고 향후 이들이 김정은체제를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3, 4세대 후견그룹의 지원을 받아 후계체제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김정은은 앞으로 이들 후견그룹과 김정은식 사회주의 건설을 담당할 5, 6세대 신진엘리트들의 성향 차이에 따른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10)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29~31.
11) 탈북군인 000와의 인터뷰, 2011.5.23.
12) 정영태 외,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80.
13) *Ibid.*, pp. 81~82.

4. 정책에 대한 세습의 제약

외견상 북한은 권력이 이양되었지만 그 기반은 튼튼하지 않다. 권력기반을 다져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최대 과제는 후계체제의 성공적 구축이며 북한의 대내외 정책들은 당분간 이 과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소년시절까지 사방세계에서 유학한 김정은은 과연 쓰러져가는 북한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김정은은 수령의 후계자인 동시에 현실적인 통치자로서 북한이 당면한 대외적 고립과 경제난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권력을 장악해 나가던 상황과 비교할 때 김정은은 상당히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 자신의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앞서 있던 시기에, 후견국가인 중국과 소련이 제국주의 미국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내부단결이 요구되던 시기에, 그리고 인민으로부터 절대적 추앙을 받는 아버지의 지원 아래 후계자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반면 김정은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남한이 흡수통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중국만이 간혹 지원해줄 뿐 핵개발로 인해 모두가 등을 돌린 국제환경 속에서, 그리고 생계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정권을 인민들이 불신하는 가운데 후계자로서의 권위를 세우고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2009년 김정은이 벌였던 '100일전투' 와 '150일전투' 는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야심차게 단행한 화폐개혁도 실패로 끝났다. 고작해야 '축포야회' 와 CNC가 그의 업적으로 선전되지만 인민들은 공감을 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김정은으로서는 쉽사리 '선군정치' 를 폐기할 수 없다. '선군정치' 는 김정일시대를 상징하고 그것과 일체화된 것이다. '선군사상' 이 당규약에 명문화되었고 대내외적으로도 정권안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군' 이라는 명분은 쉽사리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선군의 길', "선군혁명령도사가 변함없이 흐르게 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¹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세습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안전보장, 좀더 넓게는 '혁명선배에 대한 존대' 에 있다. 아들이 후계자가 되면 배반당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군정치 아래 생존을 위한 최후 보루로서 핵을 유지하고 국가자원을 최우선적으로 군사부문에 할당하는 한, 정책노선의 본질적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통성의 강화와 권위의 확립을 위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영생의 모습' 으로 서 있게 하고 '유훈통치' 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필요도 큰 부담이다.

14)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2.1.1

이처럼 세습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과 노선을 거부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유산과 노선을 무조건 충실히 따르는 것은 북한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자멸의 길이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면서 아버지의 유혼으로 선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북한은 '선군정치'가 김일성정권에서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선전하다 정통성과 역사성을 부여하기 위해 김일성정권 때로 소급하여 '유혼통치'로 포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 내용물과 외피가 다르면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드는 법이다.

김정은이 권력엘리트와 일반 주민 속에서 권위와 위신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경제적 성과를 거두거나 최소한 중·장기의 경제적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다.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강화를 목표로 화폐개혁, 국영공급망 복원, 종합시장 불허, 외화사용 금지, 임금 인상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했으나 오히려 전반적인 경제침체를 심화시켰고 대부분의 조치들은 유명무실화되었다.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계층을 위축시키는 데는 일부 성공했으나 시장통제 강화와 단기적 재정확충은 실패했다. 재정확대를 위해 '강성대국 현금' 등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고 당국의 정책에 대한 주민불신을 증폭시켜 정책추동력과 주민통제력도 약화되었다.

그동안의 변화에 의해 북한정권은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와 복잡한 구조에 직면해 있어 과거와 같이 충성과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만으로는 통치가 어렵다. 북한경제에서 생산된 잉여 점유의 다양화분권화가 발생했고 국가 재정능력이 약화되면서 국가는 하부의 기관, 기업소와 일반주민이 독자적 생계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개인과 기관·기업 등이 과거와 비교할 때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가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생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얼마간 독자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와 달리 북한정권은 당조직을 통해 모든 단위에 침투하여 개인의 충성과 희생을 직접 강요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극심한 식량난이나 '고난의 행군'과 같은 곤란이 또 다시 발생하면, 그리고 북한정권과 김정은이 중·장기적으로 업적을 남지 못한다면, 또는 낼 수 있다는 현실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통치의 정통성은 위협에 빠질 수 있다.¹⁵⁾

보통 사람은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자신의 전공분야라고 일체화하는 분야에 눈을 돌리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 한다. 경제에서 업적을 쌓기 어렵다면 군사대학을 졸업하고 '대장 동지'라고 불리는 김정은이 관심을 가질 분야는 당연히 군사분야이다. 이는 '선군정치'라는 명분에도 합당한 것이고 체제를 지탱해주는 군부에게서도 환영을 받을 수

15) 박형중·조한범·장용석,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180~181.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담하고 집요한 성격이라는 김정은은 주민 사이에 위대성을 교양하고 상징조작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적 모험을 선호할 수 있다. 신년 공동사설을 논평한 1월 3일자 『조선신보』는 “〈공격방식〉이 령도의 계승자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정치방식” 이고 미·북회담은 “사실상 인민군대가 그 기회를 마련한 것” 이며 김정은이 영도하는 “초강도의 공세전 지지” 를 언급했다. 작년 12월 30일 북한은 전례없이 국방위원회 명의로 우리 정부와 ‘상중 불가’ 를 선언했다. 같은 날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고 최고사령관을 국방위원장이 겸직하게 되어 있음에 비추어 ‘상중 불가’ 는 곧 김정은 의사임을 시사한 것이다. 2012년은 한국이나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권력교체 준비에 어수선하고 세계적 금융위기와 재정불안 속에서 모두 국내문제에 함몰할 가능성이 많은 해이다. 국제공조와 발빠른 대외적 대응이 어려운 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의 여러 공세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012년 북한경제 전망

동용승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 yongsueng.dong@samsung.com

1. 서론

북한은 2012년 경제강국에 진입하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고 호언해 왔다. 이를 위해 평양시를 새롭게 단장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화폐개혁도 실시한 바 있다. 전력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에 주력하는 한편, 주요 기간산업들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다. CNC를 근간으로 하는 과학기술 중시 정책도 병행했다. 그 결과 평양시는 각종 공사로 인해 활기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노동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주요 기간산업들도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중국과의 교역은 사상최대의 기록을 갱신하며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겉모습만 볼 때 북한경제는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듯하다. 이에 편승하여 일반적으로 2012년 4월 15일에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완성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그런데 2011년 12월 19일 12시 북한의 중앙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소식을 전했다. 북한은 2012년 경제강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최대의 변수와 직면한 것이다. 발표 이후 북한에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보였다. 조문기간이 끝나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듯 하지만 그 여파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세간의 관심은 후계자 김정은의 안착에 집중되고 있다. 강성대국 진입 여부보다는 4.15 행사를 마친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감지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당시 북한은 3년의 기간 동안 “고난의 행군”을 펼치면서 그 어떤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고 유혼 통치만을 강조했던 점을 감안할 때 북한경제는 별다른 변화 없이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것들을 이른바 유훈사업으로 지속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사항을 통해 2012년 북한경제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우선 북한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했던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북한경제를 이끌 유훈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2012년 신년공동사설 등 최근 북한당국의 발표문을 점검해 본다. 김정일 사후에 발표된 내용들은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시장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경제의 공식경제부문과 비공식경제부문의 상호 충돌과 타협 속에 앞으로 북한경제의 실질적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2년간의 시도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당대표자회의에서 공식 등장하면서 사실상 후계자로 공식 지명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후계자로 지목된 시점은 대략 2009년 1월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11년 12월 17일까지 진행된 각종 경제정책은 결과적으로 후계세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됐으며, 향후 북한 유훈정책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북한의 정책적 시도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공식경제부문의 정상화이다. 2009년 5월부터 북한은 150일 전투를 시작했다. 공업부문의 생산정상화와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50일 동안 집중적으로 노력 동원하는 작업이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수립했던 계획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분야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순차적으로 생산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였다. 오랜만에 노력동원에 참여하는 북한주민들은 다소 불평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연이어 전개된 100일 전투에서는 지친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등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찌됐든 공식경제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동원 사업을 전개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100일 전투가 끝나갈 무렵인 2009년 11월 30일 북한은 신권과 구권의 교환비를 1:100으로 하는 전격적인 화폐교환을 단행했다. 예고없이 단행된 화폐교환으로 외부세계에서는 그 배경과 영향을 분석하는데 분주했지만, 정작 북한은 별다른 혼란없이 일주일 만에 화폐교환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화폐교환이 한창 진행 중이던 12월 4일 북한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게재된 “근로자의 이익 옹호와 생활안정향상이 목적”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보면 북한당국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서 인터뷰에 응한 북한관료는 화폐교환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북한화폐의 가치를 높여 화폐유통을 원활히 하여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다 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근로자들의 임금은 종전 수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00배의 임금인상 효과를 도모하기도 했다. 두번째로 150일 전투를 통해 비정상적인 통화팽창 현상을 근절해 버릴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화폐의 주제, 사상, 예술적 내용과 권종 구성을 현대적인 화폐제조 기술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보도에 따르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위한 전초 작업도 아니며 2012년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보고 있다. 더욱이 “과거 국가가 기업소들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계획한 만큼 원만히 보장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이용을 일부 허용했지만, 국가의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서 보조적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던 시장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화폐가치를 높이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에서의 물가의 평균수준은 2002년 7월 1일 직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경제활동의 많은 몫이 시장이 아니라 계획적인 공급유통체계에 따라서 유통되게 되며 이는 계획경제관리질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주장을 주목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 지도부들과의 협력 문제를 협의함은 물론 중국 동북3성 지역과의 협력강화를 상징하는 현지 방문도 이루어졌다. 이 결과 지린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지투 개발사업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나진항 공동 개발에 중국과 합의를 보았다. 중국의 창지투 사업은 중국 동북3성 개발의 핵심적인 개발 사업으로서 나진항을 통한 동해로의 출구 확보가 관건이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에 대해 나진항을 개방하는 문제에 소극적이었는데 2년의 기간 동안 오히려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 나진항의 중국 사용을 권장한 듯한 모습을 읽을 수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러시아 역시 나진항 개방을 계기로 끌어들이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및 러시아의 나진항 사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러시아 역시 나진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랴오닝성이 추진하고 있는 5점(항만개발) 1선(철도 및 도로개발) 사업에도 연계고리를 만들어 놓았다. 신의주와 단둥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황금평을 양국이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신압록강 철교를 건설하기로 함으로써 양 지역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나진항 공동개발은 중국의 필요성이 보다 큰 반면, 황금평 개발은 북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서로 맞교환을 한 듯한 인상도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는가 하면, 합영투자추진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하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간 무역은 2010년 34억 달러, 2011년 60억 달러(추정)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북한이 예년의 무역수준을 상회하는데 대중국 무역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주로 석탄, 철강 등 지하자원 수출로 외화를 획득하는 한편, 생필품, 원부자재 등을 수입 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간 교역이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전면 중단되었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중국으로 넘어갔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북한이 의도적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북중교역 가운데 북한의 대중국 석탄수출이 8억4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볼만하다. 북한의 무역계획은 수입물자를 결정하고 이에 맞춰 수출을 하게 된다. 그런데 석탄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무역계획 자체가 무의미해 졌음을 의미한다. 2012년 4월 행사에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수출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조치는 북한이 무역계획을 포기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3.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난 내용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했다.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주지하다시피 지난해를 결산하고 신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경제의 실정을 감안할 때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언급되는 내용이 현실에 기초한 정책 방향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 여부를 가늠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어느 분야에 주력하려고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경제부문에 대한 할애는 예년에 비해 작았지만,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난 2012년 북한의 경제관련 정책 방향은 자력갱생의 강화와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증대로 집약할 수 있다. 우선 자력갱생 강화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신문 1월 1일자에 실린 공동사설에는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 “현시기 식량 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 “일군들의 혁명성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검증된다” 등을 표현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부터 3년 연속 경공업 및 농업 부문을 정상화하는데 대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2012년에도 변함없이 경공업 및 농업 부문의 정상화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국영유통망에서 경공업 제품을 국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공식경제부문이 정상화된다는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전력, 철도, 강철 등 일반적인 기간산업을 정상화하는데 목표를 두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경공업 및 농업 부문의 정상화조차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기간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더욱이 이 부분에서 외자유치를 통한 정상화라는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여전히 “함남의 대혁신 불길”, “당의 농업혁명 방침”, “우리식 유기농법” 등을 강조함으로써 정신혁명을 통해 자체적인 능력에 기초해서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경공업 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경공업 부문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우리나라의 자원과 원료로 해결하며, 지방공업을 발전”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북한이 자력갱생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여전히 자력갱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력갱생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대외관계 측면에서는 “지난 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 방문은 세계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었다” 고 표현하고 있다. 경제문제와 직접적 연결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기존에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중국과의 나진항 및 황금평 개발, 무역확대 등을 의미할 것이며, 러시아와의 가스관 연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또한 6자회담을 매개로 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역시 미국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2012년 신년공동사설 역시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에서 북한의 경제정책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국면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북한의 시장화 정도

북한의 시장화 정도는 북한에서 상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맞물린다. 이미 북한사회에서는 시장이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 수평적, 수직적으로 확산되어 있으며, 확산 속도 역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장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사례가 화폐교환 이후에 발생한 적이 있다. 북한은 2010년 2월 북한시장에 대한 제한적 조치를 취했다. 평성시장과 청진시의 수남시장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북한 전역의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역효과를 불러 왔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주민들은 배급제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배급제는 일시에 붕괴됨에 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시장 억제 조치는 당시의 상황이 재연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한 것이다. 급기야 북한은 이를 추진했던 박남기 당 재정부장을 공개처형하고 평양시 인민반장들을 대상으로 당시 김영일 총리가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시장도 다시 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무마된 바가 있다. 화폐교환하는 일주일 동안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이은 시장폐쇄 조치에는 북한주민들이 반발을 한 것이다. 이미 북한사회는 시장이 배급제를 대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상인 계층들이 존재한다. 북한에서는 “전인민의 상인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북한사회에는 전통적으로 노동자, 농민, 지식인 계급들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적어도 이러한 세 가지 계급 중 하나에 속해 왔다. 그밖에 군인, 당원, 학생, 부양 등의 부류가 있으나 이들은 계급적 개념에 포함되기보다는 일정한 직업 또는 나이에 따른 계층의 부류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계층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계층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상인들이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한 상인들은 아직 북한에서 계급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하나의 계층을 이루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상인들의 수요와 범위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이들을 지칭해서 간층(間層)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간층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상인들이 어느 계층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계층이기 때문이다.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계층 또는 계급과는 무관하게 형성되고 있는 계층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할 것 없이 모두 생계를 위해 장사를 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북한의 전통적 계급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전통적 계급에 속하지 않는 전업 상인(북한에서는 ‘장사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주로 40세 이상의 전업주부들 또는 직장에서 은퇴한 60세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북한에서는 가정주부, 퇴직 노인들을 부양계층이라고 지칭한다.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가족 구성원으로써 국가에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면서 부양해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상업 활동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부양계층의 숫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북한당국도 가족 중 1명만 조직에 속해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부양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특정 기관에 소속된 것도 아니며, 기관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사람들도 아니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시장에 나와 장사를 하는 외중에 상인으로 발전한 것이다. 시장이 확대되면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도 나타나고 다양한 사업방식들도 등장했다. 현재는 상설시장 등지에서 개인 판매대를 확보하고 전업으로 장사를 하는 전문장사꾼, 즉 상인들이 하나의 직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형태가 발전하여 유통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에서도 개인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 자체는 상인계층이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자영업자 또는 사업자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수 있다.

이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의 리(里)단위 이상의 3,000여개 지역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설시장이 존재한다고 본다면, 이 상설시장에는 50~100개의 매대가 있다. 상설시장 이외에 소규모 시장들이 존재하며 여기에도 개인 상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대략 50만명에서 100만명 정도의 상인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시장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12년 북한경제는 공식경제부문을 정상화하려는 북한당국의 시도와 북한주민들의 시장활동이 상호 충돌과 타협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평양시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방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평양과 지방간의 “양극화” 현상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새로이 출발하는 김정은 체제는 유희통치에 기반해서 공식경제부문의 정상화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충성경쟁은 공식경제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에서도 경쟁을 벌이게 할 것이며, 선명성을 위해 보다 강성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북한주민들은 이제 시장에 익숙해져 있다. 심지어 공식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경계조차 모호해져 있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젊은 지도자의 출현으로 많은 기대가 있을 것이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장사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제한조치를 없애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간간부들이 잘못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젊은 지도자는 이러한 고충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기대 속에서 북한경제는 충돌과 타협을 거듭해 나갈 것으로 본다. 강경하게 시장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충돌이 발생하면, 다시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 완화하는 조치들이 반복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당장의 문제에 미봉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거듭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가운데 이와 같은 충돌과 타협은 과거보다 그 주기를 짧게 가져갈 것이다.

연구 논문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위상학적 검토:
수령경제와 시장세력을 중심으로
홍 민

길림성의 대북 무역과 투자 현황 및 과제
림금숙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위상학적 검토: 수령경제와 시장세력을 중심으로

홍민 |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 kleiber@dongguk.edu

1. 들어가는 말

최근 북한경제를 해석하는 일련의 연구들 - 특권경제론, 경제권역론 또는 구획론 - 은 북한경제를 계획과 시장의 이분법 속에서 경합, 갈등, 공존이란 다소 경직된 틀로만 보던 방식을 탈피하여 경제를 보다 경험적으로 식별 가능한 다양한 경제 구획을 통해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북한경제에 유의미한 해석의 가능성을 주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북한에서 경제 '잉여' 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누구에 의해 점유되고 있는가를 통해 북한경제가 단순히 계획과 시장이라는 이분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잉여 점유의 분화와 구획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들 연구들은 북한경제의 특징을 바로 이런 각 구획화된 경제가 갖는 독특한 잉여 점유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해석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논의들의 한계 역시 존재한다. 아마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들 논의들이 갖는 한계를 파악해 보는 것은 북한경제 연구의 현주소, 북한경제 연구가 사회과학 일반의 학술적 지형 속에서 갖는 어떠한 위상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 논의들이 사용하고 있는 패러다임, 관점, 분석틀, 설명방식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이들 논의들의 무용론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연구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날카로운 통찰은 북한경제 이해에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다만 이들 기존 연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점, 분석틀, 설명방식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거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해 봄으로써 북한경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들 연구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을 보다 풍부하게 발전시키고 쟁점화하여 북한경제

연구의 심화에 일조하는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설명의 공백을 폭력적 조정기제, 수령경제의 재개념화, 북한의 '시장세력'의 위상을 시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북한의 '시장세력'은 기존 북한경제 논의의 쟁점들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키워드이자 대상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만 이 글이 아직 정교하게 논리화를 위해 가다듬어진 글이 아닌 거칠지만 시론적으로 문제의 영역을 짚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다양한 기존 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라기보다는 최근에 가장 문제적으로 북한경제에 대한 분석을 제기한 차문석과 박형중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음을 밝힌다.

2.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차문석의 특권경제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잉여라는 개념의 모호성

이 연구에서 가장 큰 의문이 드는 지점은 왜 '잉여'라는 용어인가이다. 이런 궁금증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 어디에도 '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와 개념적 정의가 없다. '잉여'의 사전적 의미는 '다 쓰고 난 나머지'이고 보통 경제학에서의 경제적 잉여(economic surplus)의 개념은 소비자, 생산자, 정부 등의 주체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생기는 이득, 또는 정부가 예상된 세금보다 더 거둘 때 생기는 이득을 뜻한다. 그런데 실제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잉여의 뜻은 내용의 맥락상 사전적 의미나 경제학적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 인민경제나 시장경제에서 잉여를 추출한다면 그때 잉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논문은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문맥 상 잉여를 일종의 총량적인 생산물, 자원, 재부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호하여 왜 굳이 '잉여'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잉여를 일정하게 전체 사회에서 생산하는 재부나 채취된 자원을 뜻하는 것이라면 전체 논리 전개상 보다 잉여의 '동선'에 대한 설명 과정에 더 많은 설명의 엄밀함이 요구된다. 정의하기에 따라 한 사회가 생산해 내는 재부나 자원은 그 유형이나 가지 수로도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인간-비인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흐름을 만들어낸다. 자원, 상품, 화폐, 기술, 에너지, 운송, 제도, 정보 등과 더불어 인간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사물들과 인간 네트워크의 구성이 한 사회의 재부나 자원의 흐름을 구성한다. 만약 이런 것을 포함해 ‘잉여’ 라는 말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이런 복잡한 체계의 잉여가 생산되고 독점적으로 특권경제라는 것으로 전유되는지 보다 엄밀하고 많은 설명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그 속에서 펼쳐지는 복잡한 사회적 관계의 양상과 그 동력도 설명되어야만 한다.

(2) 특권경제의 개념과 권역론에 대한 문제

차문석은 이 논문을 통해 ‘특권경제’ 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데, 그에 따르면 특권경제는 당과 군이 운용하는 경제를 총합적으로 지칭하는 경제이며, 관료집단의 ‘총성’ 을 관리하고 각종 경제 문제를 돌파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수령의 통치자금의 기본이 되고 있는 경제권역이다.¹⁾ 문제는 ‘특권’ 이란 개념이 당과 군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특권’ 이란 영역으로 단일화하고 동일물로 보게 한다는 점이다. 설명을 위한 단순화라고 해도 당과 군이라는 특권경제 영역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차이와 정치적 관계 등이 생략된 채 ‘특권’ 으로 단순화됨으로써 다른 경제영역과의 이질성은 부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들 내부의 내적인 역동성은 생략되고 만다.

사실 여기서 정의하는 ‘특권’ 은 기존의 정치자본론과 크게 다른 개념이 아니다. 정치자본 (political capital)은 사회주의체제 일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으로 관료적 지위나 특권을 통해 공적 자산과 서비스를 전유·활용할 수 있는 특수한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힘을 뜻한다.²⁾ 사회주의체제 관료들은 이런 특정 기관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치자본을 통해 경제자본을 전유하고 축적하며 세습도 한 바 있다. 사실상 정치자본을 통한 여타 자본의 전유와 특권의 향유는 어떤 특수한 경제적 논리를 갖는 영역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체제 일반의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정치자본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정치자본이 여타 다양한 자본들 -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상징자본, 관료자본 - 로 교환되고 확대재생산 또는 소멸될 수 있는지를 보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³⁾ 더 나아가 관료 장(場) 내부의 여러 조직적 분파 - 당, 정, 군 - 들이 각각 내적으로 갖는 특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어떻게 정치자본의 활용에서 차이가 나는지도 드러냄으로써 내부의 역동성을 포착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나 특권경제의 개념은 특권 향유라는 하나로 모든 당, 군 관료 개인과 관료그룹을 동질화함으로써 내적인 역동성을 포착하고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1) 차문석, “북한 경제의 동학과 잉여의 동선-특권경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009년 상반기(통권 제51호), p. 335-340.

2) Pierr Bourdieu, *Practice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 16.

3) 이와 관련해서는, 홍 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2006), pp. 36-44.

특정한 현상이나 대상을 구획하고 경계 짓는 것은 사태의 단순화와 설명의 편의는 누릴 수 있으나 자칫 내적 본질을 놓치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특권경제를 이렇게 폐쇄적인 당, 군의 엘리트와 수령의 통치자금 영역으로 정의함에 따라 다른 경제권역과의 관계 역시 매우 이질적이고 배타적으로 돼 버리고 말았다. 특권경제, 인민경제, 시장경제 사이의 배타성, 특히 그것은 특권경제와 나머지 두 권역경제와의 상호 배타성으로 설명된다. 차문석은 국가가 “특권경제를 독점적으로 운용 관리하면서 인민경제와 시장경제는 역동성에 노출시키겠다는 분리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국가가 “전자를 통해 후자를 중국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⁴⁾ 더 나아가 현 시기 북한 경제의 특이한 구조로 “특권경제와 시장경제로 각각 대립하면서 병존하고 있는 것”⁵⁾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북한의 시장경제는 특권경제로부터 배제된 인민들을 자신의 구성원으로 획득했으며, 북한의 국가와 전혀 다른 전망을 가진 경제 권력으로 전환되었다”⁶⁾고 결론을 짓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차문석이 특권경제라 부르는 권역이 소위 시장경제라는 영역과 구분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이런 특권경제의 성립 조건에는 시장이 중요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특권경제는 시장과 대립하는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하는 ‘시장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차문석이 보듯 특권경제와 시장경제는 대립하고 병존하듯 분리된 영역으로 식별 가능한 권역이 결코 아니다. 당, 군에 의해 운영되는 외화별이 기관과 회사, 이를 후견하고 보호하는 권력 엘리트와 이에 봉사하는 일꾼들은 사실상 모두 국내외 시장교환 또는 시장을 자신의 중요한 활동 근거와 수단으로 존재한다. 이들은 국내외 수출입에 대한 독점적 권한과 이를 통해 공식·비공식적으로 국내 유통에 관여하는 것을 통해 수많은 물자와 자원의 시장 거래와 가격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권경제라 부르는 내부의 당, 군 외화별이 기관과 회사, 일꾼들, 권력 후견 세력들은 시장을 통해 자신들의 기관·조직의 운영과 개인의 기득권과 지위 유지에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소위 ‘자생적 시장화’론 역시 고난의 행군이라는 초기의 시장 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합당할지 모르지만, 이후 시장화는 결코 국가 내부의 이들 시장세력을 떼어 놓고서는 설명되기 힘들다. 오히려 시장의 활성화는 이들 당, 정, 군 기관과 회사의 개입과 활동, 이해관계를 통해 그 동력을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차문석의 정의한 권역의 개념으로만 본다면, 시장경제는 특권경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경제 내부에

4) 차문석, *op. cit.*, p. 330.

5) 차문석, *op. cit.*, p. 335.

6) 차문석, *op. cit.*, p. 342.

있는 것이고 특권경제는 시장경제가 유지되고 활성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사회적 관계의 차원에서 본다면 특권경제와 시장경제는 이들 특권화 지위를 가진 시장세력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차문석은 ‘특권경제’, ‘인민경제’, ‘시장경제’라는 권역 구분을 통해 사실상 국가와 시장, 국가와 인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작동하는 억압과 착취구조로만 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분된 권역들이 현실에서 결코 분리된 실제 영역들로 식별되기 힘들다는 것이며,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시장, 국가-인민의 관계는 결코 억압과 착취, 수탈이란 설명만으로는 단순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사이에는 더 많은 이해관계와 긴장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구분과 설명은 오히려 기존의 계획과 시장, 정치와 경제라는 관념적 구분을 재강화하면서 현실의 실제 세계를 제대로 경험적으로 포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강력한 특권경제의 힘과 거의 그런 특권경제에 의해 억압과 수탈만 당하는 인민경제와 시장경제를 이분법적으로 상정함으로써, 마치 경제를 국가의 정책과 의지, 책략의 결과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는 사회 안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단순히 국가의 의지와 책략, 정책으로만 전적으로 환원될 수 없는 하나의 내적 동학, 사회적 관계의 동학으로서 다양한 실천과 우연성이 결합된 산물로 존재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경제를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가-시장, 국가-인민의 관계를 관념적 차원에서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런 연속선상에서 차문석의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억압 정책에 대한 설명 역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차문석은 국가의 “시장 억제 정책이 등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민의 시장 활동 능력이 일정수준으로 증대되어 특권층들과 시장 경쟁력(자금 경쟁력)이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때 그 경쟁력을 없애기 위해서 비경제적인 방법으로 시장 활동을 억제하고 축소시키는 것”⁷⁾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필자가 위에서 비판적으로 문제제기했듯, 특권경제는 시장경제를 내부화하고 있으며 결코 식별 가능한 구분된 영역이 아니다. 특권층 자체가 시장세력인 이상 특권경제와 시장경제가 경쟁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억압 기제만을 발동하는 관계가 될 수 없다.

특정 국면마다 등장했던 국가의 시장에 대한 통제나 억압 정책은 시장 자체에 대한 공격이나 견제만으로 해석될 수 없는, 사회에 대한 통치의 ‘수단’으로 정치적으로 선택된 상징적 조치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것은 하나의 통치를 위한 ‘이벤트’로서 주기적으로 사회적 이완에 대한

7) 차문석, *op. cit.*, p. 349.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권력 내부에 있는 시장세력의 시장을 통한 지대 추구하고 재분배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⁸⁾ 주기적으로 단행되었던 당, 정, 군 외화벌이 사업기관에 대한 통폐합 조치는 국가 권력 내부 시장세력들의 지대 분배관계 재조정하고, 인적(人的)으로 교체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조치들 역시 시장 자체에 대한 적대적 공격이나 근절을 위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 이들 국가 권력 내부의 시장세력이 없이는 북한경제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해 단행된 시장에 대한 통제 정책은 사실상 시장 활동을 하는 사회 저층의 인민들에 대한 주기적 경고라는 통치의 수단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사실상 시장 유지와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국가권력 내부의 시장세력에는 많은 타격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⁹⁾ 당, 정, 군에 내부에 있는 시장세력은 바로 국가 권력의 일부이자 다양한 핵심 권력의 후견과 네트워크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차문석의 논의는 국가와 시장, 국가와 인민, 특권화된 기관과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시장세력과 시장 네트워크, 관료들과 시장의 공생관계를 간과함으로써 이들 관계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

(3) 국가와 시장, 국가-인민 관계에 대한 문제

한편 차문석의 논문은 국가와 인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설명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찰을 요구한다. 차문석은 ‘이중화전략’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전략의 핵심은 “체제보위와 유지를 목적으로 당과 군경제의 특권경제만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전략”이다. 또한 더 나아가 북한에서 “인민경제의 붕괴와 이를 정상화시킬 능력과 의지의 부재로 인민경제의 운용은 포기되었”고, 따라서 “국가 경제 운용의 중심은 체제 유지를 위한 통치자금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이른바 ‘특권경제’로 구축되었다”¹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북한의 국가와 인민 관계를 지나치게 ‘착취성’, ‘억압성’, ‘폭력성’의 일면을 통해서만 바라봄으로써,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긴장관계를 포착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민경제를 포기’할 정도로 착취만 존재한다는 해석에서 우리는 어떤 국가도 인민경제를 포기하는 정책으로 자신의 국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 아주 극렬한 독재국가라도 인민에 대한 최소한의 허위적이나마 도덕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와 인민의 관계의 핵심에는 ‘도덕성’에 대한 긴장이 존재한다. 일종의 국가와 인민사회에 존재하는 ‘도덕경제(moral economy)’는 지배와 착취에

8) 최봉대, “북한의 시장 활성화와 시장세력 형성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한반도 포커스』 2011년 7·8월호(제14호), p. 14.

9) 최봉대, *Ibid.*, p. 14.

10) 차문석, *op. cit.*, p. 335.

결맞는 마땅한 최소한의 배려에 대한 인민의 도덕적 기대감, 그리고 이런 도덕적 기대감에 대해 국가가 마땅한 응답을 해야 한다는 통치 행위의 책임과 의무가 긴장 어리게 존재함을 알린다.¹¹⁾ 인민에 대한 최소한의 물질적, 정치적 배려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정치적 지배와 경제의 저변에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국가와 인민은 이러한 긴장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일상과 생존을 위한 다양한 행위와 전술을 하는 사람들이다.¹²⁾

다시 말해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과 폭력 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은 분명 다른 것이다.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착취가 존재한다는 것과 인민경제를 포기했다는 것은 분명 다른 것이다. 차문석의 ‘잉여’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오히려 잉여의 지속적인 추출을 위해서라도 인민경제는 결코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아마도 최소한 ‘포기’라는 극단적 해석에 걸맞는 설명이 풍부하게 더 뒤 따라야하지 않을까 싶다. 설령 특권경제가 인민경제의 복구와 정상화와 무관하다고 해도 특권경제가 운용되는 과정은 수많은 시장교환의 관계를 확산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시장적 이해관계에 묶어두게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북한경제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필요하다면, 비판해야할 지점은 오히려 이들 특권경제의 운용자들이 그 자체로 하나의 특권적 시장세력이며, 시장을 통해 인민을 오히려 착취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2) 박형중의 잉여점유론과 조정기제 분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잉여점유론의 개념적 문제

박형중의 연구에서도 역시 ‘잉여’가 등장한다. 그런데 앞서 제기했듯 박형중의 논문에서도 ‘잉여’의 개념에 대해 특별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국민경제에서 생산된 경제 잉여”¹³⁾라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그 개념이 모호하다. 이런 개념 사용의 불명확함은 이후 서술되는 분석에서도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박형중은 “1980년대 말까지는 국민경제에서 생산된 경제 잉여가 대체로 중앙에 집중되었다고 하면,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 잉여 점유가 분권화하여, 보다 다양한 잉여 점유 관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이래의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데서 관건은, 다양한 잉여 점유의 양태와 다양한 경제조정 기제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이에 관하여 개념과 이론을 정립하는 것”¹⁴⁾이라고 주장한다.

11) 이와 관련해서는, 제임스 스콧 저·김춘동 역, 『농민의 도덕경제: 동남아시아의 반란과 생계』(서울: 아카넷, 2004) 참조.

12) 이와 관련해서는, 홍 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참조.

13) 박형중, “과거와 미래의 혼합물로서의 북한경제-잉여 점유 및 경제조정기제의 다양화와 7개 구획구조,”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p. 40.

14) 박형중, *Ibid.*, p. 36.

그러나 과연 1990년대 경제문제는 잉여에 대한 중앙집권적 관리체계의 문제가 본질인 것인가 의문을 달아볼 필요가 있다. 잉여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뒤로 하고 본다면, 오히려 북한경제의 문제는 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된 것에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1990년대 이전의 계획경제에서 소위 잉여를 발생시켰던 투입 자원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한 전체 경제의 위축이 중요한 문제의 본질 중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잉여 점유의 다양화, 분권화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줄어들거나 발생하지 않는 잉여를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잉여 발생의 자원 루트를 찾는 경로의 탐색과 경제활동이 많아졌다는 것이 더 적합한 설명일 수 있다. 기존에 그나마 이루어지던 생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잉여 고갈에 따른 새로운 자원, 잉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루트를 찾았던 것이다. 이것은 계획경제와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교환관계를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과거 계획경제가 그나마 형식적으로나마 강제하던 교환관계의 일정한 패턴이 유명무실화된 것이다.

새로운 잉여 창출지를 찾고 만들기 위해 모색한다는 것은 과거 계획경제가 보장하지 못하는 ‘물질-에너지(상품, 화폐, 정보, 자원, 기술, 인간, 운송 등)흐름’ 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하고 모색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와는 다른 사회적 관계, 교환관계가 형성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박형중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정리한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잉여 점유를 위해 과거 계획경제와는 다른 교환관계, 사회적 관계, 물질-에너지 흐름을 만들어 내는 과정과 양상인 것이다. 박형중의 표현을 빌린다면, 다양한 조정기제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조정기제의 개념적 문제

이런 다양한 교환관계, 사회적 관계, 물질-에너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박형중의 논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조정기제’ 의 개념화와 탐색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형중은 “북한경제 내에서 어떠한 경제적 조정기제(economic coordination mechanism)가 작동하고 있으며, 그 기제가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 있고, 그 세력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그는 계획, 특권계획, 동원, 부패, 시장 이라는 5개의 조정기제를 제시한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북한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매우 일반론적 차원에서 진행된 조정기제에 관한 개념 설정¹⁵⁾은 충분하지 않다” 고 보고, 심지어는 이런 일반적이고 추상적 차원의 조정양식은 북한 내에 존재하는 조정양식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분석하는

15) 박형중은 예를 들어 코르나이가 구별했던 조정기제의 5가지 유형을 든다. 즉 관료적 조정, 시장적 조정, 자치적 조정, 윤리적 조정, 가족적 조정이다.

데 “불충분하고 비생산적이며, 때로는 사대주의적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박형중이 새롭게 제시하는 5개의 조정기제는 과연 조정기제의 개념에 걸맞게 타당하고 적절한 것인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코르나이가 개념화한 조정기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르나이는 조정기제를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들 또는 조직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가 무엇이든, 그들의 행동은 일정한 형태의 조정을 요구” 한다고 보고 각 조정기제는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하고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고무하며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는 특정한 ‘양식’, 윤리, 공식·비공식적인 지배적 규칙을 갖는다고 본다. 이에 관료적 조정, 시장적 조정, 자치적 조정, 윤리적 조정, 가족적 조정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각 조정기제들은 특정한 사회적 관계의 집합을 나타낸다” 고 강조한다.¹⁶⁾

코르나이가 제시하는 조정기제는 모두 사회적 관계적 특성을 묘사하는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특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관계의 특성, 그러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게끔 하는 일정한 기제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박형중이 제시하는 조정기제는 과연 이런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담은 개념으로서 적절한 것인가. 본 연구자는 박형중이 제시한 것 중 ‘계획’, ‘특권계획’, ‘동원’, ‘부패’ 가 그런 조정기제라는 개념이 갖는 관계의 특성을 지칭하는 것에는 부합하지 않는 용어라고 본다. 이들 용어들은 모두 국가의 의도와 기획의 일방적인 수단으로서 표현될 수 있는 용어들이지 어떠한 관계의 특성을 포착하는 용어들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본다. 우리는 어떤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들 사이의 관계를 ‘계획적’ 이다, 또는 ‘동원적’ 이라고 말하진 않는다. 이들 용어들은 관계의 특성을 표현하는 용어가 아니라 오히려 조정기제에 동원되는 수단의 의미 또는 구획된 경제권역의 특징적 수단을 표현하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 따라서 이들 용어를 통해 관계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코르나이가 제시한 조정기제를 따르든, 박형중이 제시한 조정기제를 따르든 우리는 조정기제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윤리적인든, 관료적인든, 시장적인든, 계획적인든, 특권적인든, 상호 순수한 조정기제, 작동양식, 구획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이들은 상호 하나의 ‘행위성’ 에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그 행위를 통해 다중적인 의미와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 개인의 실천(행위)조차도 순수하게 윤리적인 조정기제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고, 시장적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들 개인들의 ‘행위성’ 속에는 윤리적인 것, 관료적인 것, 시장적인 것 등등 직면하는 현실에 대해 다양한 전술, 일상적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고 다면적으로 펼쳐진다. 여기서 일상적 전술, 일상의 정치는

16)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95.

바로 수많은 조정기제로 열거되는 것들을 브리콜라주(bricorage)하며 일상의 생존에 맞게 그것들을 변형하고 전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특정한 조정기제의 양태나 표현으로 환원되고 회수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박형중이 “1990년대 이래로 보면, 위 5가지 경제적 조정기제 중에서 각 조정기제 간에 의미 있는 세력 균형의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다” 고 강조한 부분은 그가 사용하는 조정기제의 개념이 위에서 말한 사회적 관계의 특성과 다면성을 담는 개념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각 경제 구획에서 사용되는 수단들의 특성을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치 조정기제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상호 경합하거나 균형을 찾는 것으로 기계적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물론 박형중의 연구는 조정기제라는 개념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유의미한 해석의 가능성을 충분히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구획을 나누고 그 수단들을 찾는 것 이상으로 이들 사이를 연계하는 사회적 관계의 특징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본다.

3. 폭력적 조정기제와 수령경제

한편 만약 조정기제의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경제를 본다면, 또 다른 하나의 조정기제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폭력적 조정기제’이다. ‘폭력적 조정기제’는 코르니가 제시한 관료적, 윤리적, 시장적, 자치적, 가족적 조정기제를 비롯하여, 박형중이 제시한 계획, 특권계획, 동원, 시장, 부패 등과도 관련하여 북한사회 또는 경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조정기제의 하나로 제안될만 하다고 본다. 폭력적 조정기제는 국가와 인민,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서 국가가 행사하는 하나의 조정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절대적 권한과 물리력을 소유한 지도자와 지배엘리트들이 경제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 사용하는 수단의 의미도 있지만, 절대적 폭력을 행사하는 존재, 그것이 가능한 체계라는 것이 국가와 인민관계, 국가와 시장관계, 그리고 일반의 사회적 관계에 부여하는 하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문제나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희생양을 처단(공개처형)하는 - 비근한 예로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남기를 공개처형한 것처럼 - 방식으로 사회적 질서, 경제 질서에 개입하는 메커니즘이다. 또한 폭력적으로 기관이나 회사를 통폐합하고 관료들을 숙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경제나 사회와 관련하여 포고문을 내려 행동을 규제하는 법을 초월한

행위가 가능한 메커니즘이다. 이런 절대적 폭력의 가능성을 내장한 권력체 - 아마도 핵무기 보유 정권이라는 것은 그런 절대적 폭력 행사의 가능성을 갖는 권력체의 가장 빛나는 전유물일 것이다 - 가 사회에 주는 공포는 다른 조정기제를 아마도 압도하는 하나의 기제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체제가 표방하고 있는 '선군시대의 경제노선' 은 바로 이런 폭력적 조정기제를 극대화한 '예외상태의 국가' 를 상징하는 슬로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폭력적 조정기제는 '수령경제' 라는 개념을 재사고 하게끔 한다. 수령경제를 특정한 당경제나 통치자금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치패러다임으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령경제' 를 지금 동선과 점유라는 측면에 한정하여 하나의 영역으로 국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령이라는 폭력적 조정기제의 정점이 있기에 가능한 경제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령경제는 정치와 경제가 결합된 절대적 독점력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의 모든 것이 결합된 메커니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관료들이나 권력기관의 특권성 역시도 수령이란 존재, 이런 절대적 독점력에 기반한 수령경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수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권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힘든 지점이 북한체제에는 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령경제는 모든 경제관계의 총체성을 담는 개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것은 이 경제체제가 돌아가는 핵심적인 동력, 동학의 본질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경제 권역론 또는 구획론은 수령경제, 궁정경제, 특권경제, 군수경제, 비공식경제 등 추상 수준이 현저하게 다른 것을 마치 분리된 실제 영역이나 구획으로 보게 함으로써 총체적인 조망과 그것의 핵심 동력을 찾기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수령경제는 군수경제, 당경제, 비공식경제, 특권경제, 계획경제, 시장경제 등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총체적으로 구성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수령경제 개념의 가능성은 다양한 경험적 사례를 통해 드러낼 수 있으나, 앞서 검토한 박형중의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기관별 회사 경제도 결국 '수령경제' 또는 김정일이라는 초법적 존재로 수렴되는 경제 영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전체 구획 상황에 대한 총 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각 구획의 워크(허가된 무역액)를 정해주며, 때로는 구획 간에 자원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누가 얼마나 큰 워크를 허가받느냐 하는 것은 그 때 그 때 시점에서 김정일의 내부권력운영에서 당, 정부, 군 등 어느 곳에 힘이 실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¹⁷⁾ 이런 분석은 수령경제의 개념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본다.

17) 박형중, *op. cit.*, pp. 48-49.

4. 북한의 '시장세력' 과 네트워크

북한에서 '시장세력' 은 시장을 생계 근거로 활동하는 일반 주민과 매대상인 및 보따리 상인들과 같은 일반적인 시장 일상생활 영위층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을 국가와 적대적인 관계에 위치시키고 시장을 통해 일상을 영위하는 일반 주민과 상인들을 시장세력으로 보지만, 그것은 매우 협소한 시각일 수 있다. 사실상 북한은 시장 활성화를 통한 수탈 구조를 디자인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시장세력' 은 대내외 시장 및 시장교환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것을 통해 생존과 이윤, 기득권과 지위 등을 유지, 확대, 재생산하는 데 있어 상호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개인 및 집단(기관, 조직)을 총칭하여 정의할 수 있다.¹⁸⁾ 이들 시장세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정치자본, 경제자본)과 지위, 네트워크 등의 소유 수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직간접적인 상호 협력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상호 구성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시장세력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공생적 관계 자체, 또는 이들 네트워크의 '효과'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시장세력은 생계 차원에서 시장 활동을 하는 대다수 주민들을 비롯하여, '돈주' 를 비롯한 크고 작은 상인계층들, 이들의 활동에 약탈적으로 기생하는 중하층 관료들, 당·정·군 기관 외화벌이 회사들과 그 관료들, 이들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활동하는 무역지도원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교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중앙 및 지역의 상층 관료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세력-네트워크' 는 이들 시장세력들이 개인과 조직의 이해를 위해 시장을 전유(appropriation)하는 데 있어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조직, 조직 대 조직, 조직 대 지역, 지역 대 지역 등의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유지·변형하면서 상호 공생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뜻한다. 이들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 전유에 있어 부문별, 지역별 협력·공생체계를 구성하기도 한다.¹⁹⁾ 이런 네트워크들은 단순한 잉여가 아닌 자원, 물자, 운송, 에너지, 인간, 기술, 정보 등의 물질-에너지 흐름체계를 일정하게 만들어낸다.

18) 홍 민, "화폐개혁 전후 북한의 국가-시장 관계의 변화 동향: 후계 정치지형과 시장 권력과의 상호관계 및 변화구도," 2010년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2010, 6), p. 60.

19) 꼭 시장세력으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관료들이 시장과 갖는 관계는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친화적이다. 일반적으로 과거부터 관료들 간의 거래의 기본단위는 '행정적 서비스' 였다. 경제관리체계의 특정영역을 통제하고 있는 관료그룹들은 각자 필요한 행정적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과거부터 호혜적 관계를 맺어왔다. 이것은 계획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방편적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이라는 영역도 자신의 행정적 관리기능을 통해 새로운 교환체제로 끌어들인다. 일종의 시장이 요구하는 행정 서비스를 판매하고 대가를 챙기는 행정서비스 시장을 허술한 제도적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형성해 온 것이다. 홍 민, "북한 시장 일상생활연구-그로테스크와 부조리극 '사이' 에서," 박순성·홍민 편,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p. 360.

우선 가장 상층에는 당·정·군 기관들의 외화별이사업 회사들이 있다. 당 39호실, 38호실, 당재정경리부, 당조직지도부 등²⁰⁾에 소속된 외화별이 기관들과 내각, 군, 안전부, 보위부, 주요 도급기관 및 주요 특수기관 등의 산하에 있는 외화별이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기관들은 북한의 내부 자원에 대한 독점적 수취 권한과 수출입권으로 무역을 통해 국내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긴다.²¹⁾ 이들 회사들의 국내 수출원천 동원, 대외 시장거래, 수입품 국내 유통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은 국내의 시장교환을 직간접적으로 경유하여 이루어진다. 중앙당 외화별이의 경우 국내적 유통과는 별도로 김정일 통치자금 조달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출을 위해 국내 자원을 수매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이 관련 담당 일꾼이나 지역기관에 의해 유출되어 시장으로 나가고 있어 국내 시장과 완전히 절연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²²⁾

이들은 강력한 권력을 지닌 중앙 엘리트들의 공식적, 비공식적 후견과 보호, 독점적 지위 속에서 시장을 전유하는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가장 규모와 파급력이 큰 시장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국내외 수출입과 시장 유통 과정에서 국가기관 명목의 워크(무역 허가권)를 통해 동원하는 자원, 물자, 운송, 인간, 정보 등의 규모 측면에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이 사실상 국내 시장의 가격구조와 유통 물량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만큼 국내 시장의 존속에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시장은 수출입을 통한 지대 실현을 매개해 주는 경제적 공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뇌물은 이 기관들의 외화별이 지대 실현에 기생하는 시장 상품 유통 피라미드 안에 산재해 있는 여러 단계의 시장 참가자들의 이윤에서 나온다.²³⁾

두 번째로, 이들 당, 정, 군 기관의 회사 밑에 소속되어 자금과 인원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무역 활동을 하는 ‘돈주’ 들이 있다. 이들은 ‘돈주’ 들은 자신의 자금과 음성적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을 보태 이들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는 대신 무역지도원으로 채용되어 회사의 보호 아래 영업을 한다. 이들 무역지도원은 할당된 계획분을 회사 회계연도에 입금하고, 나머지 수입은 자신의 몫으로 챙긴다.²⁴⁾ 이 돈주들은 몇 단계를 거쳐 피라미드 맨 밑바닥에 놓여 있는 시장의 공업품이나 식량 소매장사, 또는 기업소의 부업선 선장 같은 외화별이 원천 생산자까지 연결되어

20) 익히 알려진 대로 중앙당 39호실에는 대성총국, 경흥지도국, 락원지도국, 금강지도국, 대흥지도국 등의 무역회사들이, 38호실에는 호텔, 상점, 백화점, 식당 등이, 또 당 재정경리부의 무역회사, 식당, 상점, 농목장, 공장들, 당조직지도부 행정부문에서 관리하던 조선민족보험회사, 727지도국, 2호지도국, 수도건설총국, 조선원예총회사 등 경제단위들, 당 민방위부의 114지도국 등이 있다. 김광진, “북한 외환관리시스템의 변화와 외화의존도의 증대,” 『수은경제』 2008년 봄호, p. 25.
21) 기관별 ‘회사’ 의 운영과 시장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박형중, “과거와 미래의 혼합물로서의 북한경제-인어 점유 및 경제조정기제의 다양화와 7개 계획구조,”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p. 48.
22) 이와 관련 대흥지도국 산하 5호관리부에서 금, 송이버섯이나 지방 특산물 수매 과정에서 당 관료들을 통해 상당한 양이 중간 유출되어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2009년 5호관리부 수매담당 일꾼 출신 탈북자 인터뷰 내용.
23) 최봉대, “북한의 시장 활성화와 시장세력 형성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한반도포커스』 2011년 7·8월호(제14호), p. 13.
24) 박형중, *op. cit.*, p. 49.

있다.²⁵⁾ 이들은 당, 정, 군의 무역회사와의 공생관계 속에서 이들 기관과 국내의 시장을 연결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로, 도당, 시·군당 및 인민위원회, 보안서 등 지역 권력기관들과 현장 일꾼들이다. 이들 시장과의 유착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시장을 통해서이다. 이들 기관과 지역 시장 사이에는 시장운영과 관련한 각종 편의제공, 시장관리소 소장에 대한 정치적 평가, 시장에 대한 검열 권한 등을 명분으로 권력관계가 밀접하게 형성된다. 시장관리소장은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당 간부와 행정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이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검열을 피하거나 인사상의 신임을 얻고, 지역당 간부와 행정간부들은 뇌물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특혜를 시장을 통해 누리게 된다.

또한 이들 지역 당·정·치안 기관들의 현장 간부들은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통해 이들에게 정기적인 상납을 받거나 아예 소상인 및 중간상인들의 후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 권력기관들은 해당 지역 내 있는 ‘힘없고 뺨없는’ 곳 - 협동농장, 지방공장, 수산사업소 - 을 타겟으로 비리노트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정기적으로 고기와 금품을 상납 받아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 개인 또는 기관이 착복을 해 오고 있다. 이밖에 이들 협동농장이나 지방공장에 대해 각종 사적지 및 전적지 건설 지원, 사회노동 지원의 명목으로 필요할 때마다 ‘갈취’ 를 하는 데 여기엔 법질서를 담당하는 보안일꾼도 참여한다.²⁶⁾ 이들도 보안국이나 시·군 보안서 일꾼들은 밀무역꾼들과도 결탁하여 이들을 보호해 주는 대가로 재산을 불리기도 한다. 이들이 상납 받거나 갈취한 물품이나 농산물 등은 시장으로 유통된다. 이들 지역의 권력기관들은 시장이나 힘없는 농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약탈’ 을 상호 묵인하거나 공모하면서 시장을 통해 지역의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시장세력이다.

시장은 위로부터 통제할수록 중하위단위 권력기관의 부패는 번성한다는 생리는 ‘고난의 행군’ 이후 하나의 사회적 진실이 되었다. 오히려 시장을 통제하라고 중앙에서 지침이 많아질수록 감독·통제 권한이 있는 권력기관들이 힘은 커지고 뇌물의 명분을 키우게 되고 위험이 많아진 만큼 “뜯어 먹는 게 많아진다”. 결국 지역의 보안기관이나 여타 권력기관은 사실상 시장에 기생하면서 시장의 근절을 바라지 않는 ‘시장세력’ 의 핵심으로 자신들의 먹이 사슬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계 차원에서 시장 활동을 하는 대다수 주민들이다. 공식적인 매대를 통해서든, 비법적인 장사를 통해서든, 가내 개인 사업이든, 이들은 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 시장에

25) 최봉대, *op. cit.*, p. 13.

26) 홍 민, “범죄의 사회적 구성과 주민 생계유리,”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서울: 통일원, 2010), pp. 202-203

매달리는 사람들이다. 사실상 이들은 수적으로는 가장 많을지 모르지만 가장 낮은 판매 이윤속에서 권력기관들의 통제와 수탈을 감당해야하는 사람들이다. 언제든 그나마 하고 있는 시장 활동에서 배제될 수도 있으며, 언제든 ‘비법’의 굴레에 의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또 북한 시장의 전체 규모에서 보면 위에서 열거한 시장세력에 비해 상대적인 비중이 적고 힘이 없고 가장 주변적인 사람들이다. 사실상 이들은 북한 시장의 가격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의 확산을 주도하는 힘 있는 주도 세력이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난의 행군기’ 부터 아래로부터 시장을 일구어 낸 사람들이고 생계를 시장을 통해 지속해야만 하고 시장을 통한 계층 이동의 꿈을 꾀다는 점에서 하나의 시장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모두는 시장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사활적 이해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이다. 이들은 처해진 조건과 환경, 이해관계의 깊이는 다르지만 시장을 자신의 생존과 기득권, 지위의 유지, 부의 향유라는 차원에서 전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장 활성화의 주체는 생계유지를 위해 시장에 참가하는 대다수 중·하층 가구들보다는 특권적 국가기관들의 외화벌이에 연루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²⁷⁾ 이들은 사실상 국가 차원의 시장 통제 조치에서 제외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국가경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이 크고 사실상 북한경제의 핵심적인 동력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기적으로 외화벌이 기관들에 대한 통폐합 조치가 단행된 바 있지만, 그것이 이들 특권적 국가기관의 시장 전유를 통한 잉여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특권기관에 자리한 시장세력의 개인 착복이나 부패를 줄이기 위한 인물교체로서 일종의 관리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장이 지속되고 활성화되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일치시키는 능력의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는 점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국가와 인민 사이의 도덕적 레버리지와 시장세력

북한에서 시장은 국가의 정치적 지배체제 유지와 사회적 생계윤리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국가는 인민들에 대한 부양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기존 지배체제의 근간을 이루었던 도덕적 레버리지(moral leverage)에 큰 손상을 입게 된다. 시장을 허용할

27) 최봉대, 위의 글, p. 13.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생계윤리를 시장을 통해 대체 보상해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도부는 시장의 허용에 따른 통치력의 누수나 사회적 이완의 위험을 감내해야만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민들에게도 시장 활동은 생계윤리 차원의 도덕적 레버리지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었다. 이처럼 국가와 인민 사이에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한 도덕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바로 이런 긴장관계 속에서 시장세력은 출현하였고, 이 속에 기생하며 역설적으로 시장의 유지와 활성화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서 시장 및 시장교환은 다양한 권력기관들 사이의 협력 및 공생관계 속에 묻혀(embedded)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 관료그룹인 당, 내각, 군부, 정보기관, 치안기관, 에너지·자원복합체(발전소, 광산), 군산복합체(군수공장), 수송 및 운수기관 등의 권력부처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 시장의 잉여를 전유하는 데 있어 상호 공생관계를 가져왔다. 중앙-지방 관계, 각 지역별, 각 기관별로 위계적·수평적 관계를 통해 시장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데서 협력적인 체계를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들은 국가기관이면서 한편으로 시장 권력을 구성하는 주요한 실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장권력은 특정한 어떤 권력체를 지칭하기보다는 이러한 시장 이해를 통해 얽혀 있는 복잡한 사회적 관계 전반을 일컫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시장권력은 정태적이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조직화를 꾀하는 시장 활동 전반의 역동성과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통제나 억압이 많을수록 그 우회경로와 생존 기술을 터득하기 때문이다.

길림성의 대북 무역과 투자 현황 및 과제

림금숙 | 중국연변대학경제관리학원 국제무역학과 교수 | lin_jinshu@hanmail.net

I. 서론¹⁾

길림성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1,200km의 변경선으로 마주하고 있으며, 10개의 통상구와 3개의 임시 통상구를 갖고 있다. 길림성 변경일대 내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와 통화지역의 장백(長白)조선족자치현, 임강(臨江)시, 집안(集安)시 등 크고 작은 30여 개의 변경도시와 향진들이 있다. 이처럼 길림성은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의 지리적 요건을 갖춘 중요 지역이다. 길림성은 중국의 대북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변경무역은 주로 길림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길림성의 장백현, 집안시, 연변자치주 등 변경지역을 매개로 중국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시작되었으며 또한 대북 광산물 수입의 중요한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길림성의 대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등 북부지역의 경제회생과 주민들의 생활필수품공급의 확대 및 상품경제의식 확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09년에 중국의 장길도를 선도구로 한 두만강개발계획요강이 발표된 후 길림성의 대북 경제협력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본문에서는 길림성의 대북 무역과 투자의 현황 및 향후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이 학술연구는 2011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지원사업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AKS-2011-R-58).

II. 길림성 대북 무역과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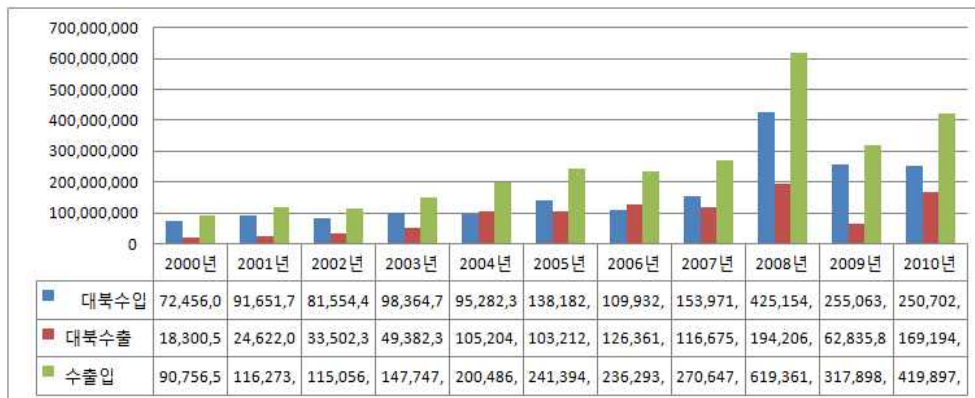
1. 길림성의 대북 무역

(1) 무역의 개황

해방 이후 1954년 10월 19일 중국대외무역부에서는 변경지역 주민들의 해산물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길림성과 북한 간의 변경소액무역을 비준하였다. 길림성의 대북 무역은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와 90년대에는 저조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길림성의 대북 무역액은 2008년도에 6.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9년에는 대폭 하락하였다가 2010년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또한, 2000년대 길림성의 대북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무산광산의 철광분과 기타 광산물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 2000년대 길림성의 대북 무역액

(단위: 천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 [http://: www.customs.gov.cn](http://www.customs.gov.cn)

길림성의 대북 수출은 식량, 연초, 방직품 원자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길림성은 중국의 대북 식량수출의 주요지역으로서 2010년 길림성의 대북 수출 중 옥수수과 쌀 등이 15.4%를 차지하였다. 길림성의 대북 수출품인 연초는 나선에 투자한 연길(延吉)담배공장의 원료이며 섬유 및 방직품 원자재는 연변의 의류회사들이 나선지역의 의류기업들과 위탁가공무역을 하기 위해 원자재를 수출한 것이다.

표 1 2010년 길림성의 대북 10대 수출상품

(단위: 달러, %)

순위	코드	품목명	수출액	비중
1	100590	옥수수	15,668,889	9.2
2	240310	연초	15,312,162	9.0
3	100630	쌀	10,518,361	6.2
4	640399	신발	7,514,408	4.4
5	610910	면직물	7,446,092	4.4
6	090420	빨간고추	6,484,811	3.8
7	600632	염색물	5,492,341	3.2
8	481920	포장상자	5,301,224	3.1
9	560122	섬유	4,980,785	2.9
10	870423	차량	4,556,658	2.6

자료: 중국해관통계 [http://: www.customs.gov.cn](http://www.customs.gov.cn)

2010년 길림성의 주요 대북 수입품은 철광분, 몰리브덴, 무연탄 등의 광산물, 해산물, 방직품 등으로, 이들은 각각 길림성의 대북 수입에서 33%, 15%, 2.8%를 차지하고 있다. 철광분은 주로 연변천지(天池)공업유한회사가 무산광산으로부터 수입한 것이며 몰리브덴, 무연탄 등은 장백현, 집안시 등의 지역에서 북한의 양강도와 자강도의 광산으로부터 수입한 것이다. 90년대 길림성의 대북 수입에서 해산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2000년대 중반부터는 철광분을 위주한 광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철광분 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2 2010년 길림성의 대북 10대 수입상품

(단위: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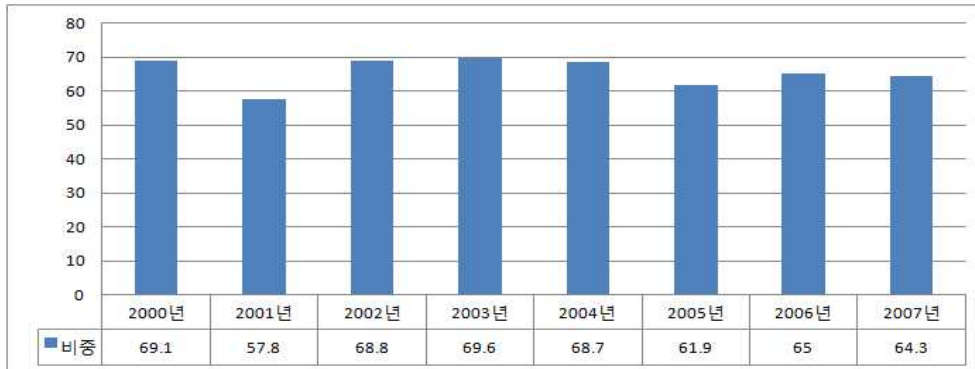
순위	코드	품목명	수입액	비중
1	030749	해산물	37,939,171	15.1
2	260111	철광분	34,290,071	13.6
3	720110	유색금속	20,349,990	8.1
4	260300	동광	13,133,645	5.2
5	610910	방직품	7,155,121	2.8
6	720610	합금강	6,222,875	2.4
7	080290	견과류	5,203,746	2.0
8	261390	몰리브덴	5,080,754	2.0
9	740311	동 반제품	2,621,161	1.0
10	260112	철 반제품	2,383,705	0.9

자료: 중국해관통계 [http://: www.customs.gov.cn](http://www.customs.gov.cn)

길림성의 대북 무역 중 변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중국 전체의 대북 무역에서 변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다. 이는 변경무역이 길림성의 대북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길림성 대북 무역에서 변경 무역의 비중

(단위 : %)



자료 : 장춘해관, <http://changchun.customs.gov.cn/>

길림성의 대북 무역은 주로 연변지역과 통화지역의 장백현, 집안시, 임강시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연변자치주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길림성의 대북 무역에서 연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0년대 초반까지 북중 무역은 신용장 결제 방식을 취했으나 북한의 무역대금의 결제 지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국대외무역부에서는 북한은행의 신용장을 접수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따라서 90년대 중반부터 북중 무역은 큰 교역의 경우 마카오 은행을 통한 간접 송금방식을 취하고, 변경무역의 경우 80% 이상이 현금거래 방식을 활용하였다. 현재 인민폐가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거래는 인민폐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관에서 인민폐 현금을 2만 위안(6천 달러)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역회사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현금을 들고 다닌다. 이러한 원초적인 현금 결제방식은 국제무역규범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금운송의 위험성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하므로 2008년 중국건설은행 훈춘지점은 북한의 황금삼각주은행과 상호 결제협의를 맺고 은행 간 결제루트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 은행에서 수수료를 높게 요구하고 북한에서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돈을 제때에 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 측 회사들은 은행결제를 회피하고 있다. 중국 측 회사들도 은행수수료가 비싸고 자금 이동이 세무당국에 의해 쉽게 포착될 수 있다는 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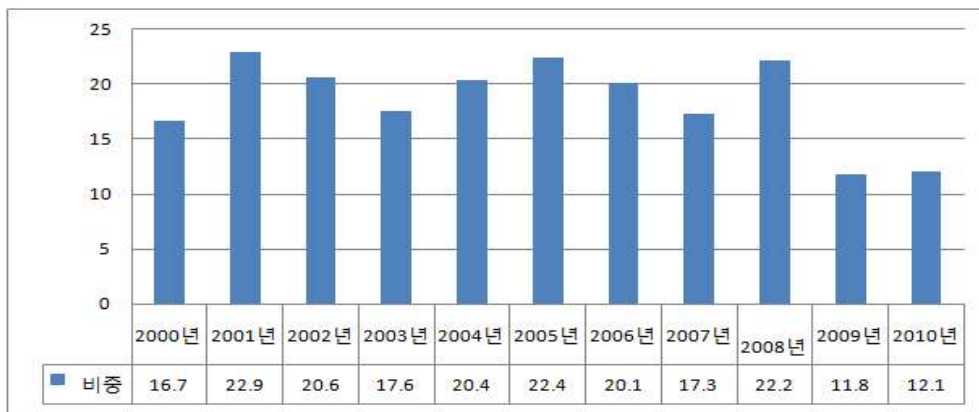
고려하여 현금거래를 선호한다고 한다. 따라서 변경무역에서는 현금거래가 관행이 되었다.

(2) 길림성의 대북 무역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점

첫째, 길림성의 대북 무역은 그 규모가 작고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2000년대 북중 무역은 신속한 증가세를 보여 2010년 북중 무역액은 34억 달러로 2009년에 비해 30%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길림성의 대북 무역액은 4.19억 달러로 중국의 대북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의 22%에서 12.1%로 하락하였다. 이는 최근 중국의 산둥성(山東), 허북성(河北), 강소성(江蘇) 등 남방 도시들의 대북 교역이 증가한 것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 2010년 중국의 대북 수출에서 길림성은 요녕성(遼寧)의 30% 정도이다. 길림성의 대북 무역이 요녕성보다 훨씬 적은 데에는 여러 원인이 존재한다. 먼저, 요녕성 단둥시와 마주한 신의주는 평양으로 통하는 관문으로서 중국의 대북 일반무역과 지원성 물자운송의 주된 창구이다. 둘째로, 중국의 대북 수출 상품구조를 살펴보면, 요녕성의 대북 수출 상품들은 원유, 기계, 운송장비, 발동기, 가전제품 등 공산품이 위주인 반면 길림성의 대북 수출은 주로 식량과 해산물 등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들이다. 마지막으로, 요녕성 단둥시에는 8천여 명의 화교들이 대북 무역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도 요녕성의 대북 무역액이 길림성에 비해 큰 이유 중 하나이다.

그림 3 중국의 대북 무역에서 길림성 비중 (2000~2010년)

(단위: %)



자료: 중국해관통계 [http:// www.customs.gov.cn](http://www.customs.gov.cn)에 의해 작성함

둘째, 길림성의 무역회사들은 경쟁력이 낮다. 길림성의 연변지역과 장백현, 임강, 집안 등 통화지역에는 대북 무역회사들이 몇 백 개가 있다. 지난 90년대 초반 길림성의 연변지역에서는

삼각무역²⁾, 중계무역³⁾ 등 다양한 무역방식으로 대북 무역이 활발히 진행됐고, 1993년 연변의 대북 무역액은 3억 달러에 달하여 당해 중국의 대북 무역총액의 약 3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북측으로부터 무역대금을 상환 받지 못하게 되어 무역회사들의 대부분이 부도가 났다. 2005년 중국상무부는 민영무역회사 설립을 허가하는 동시에 회사등록자금을 30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낮춰줘 민영무역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었다. 연변의 투먼시에서만 해도 무역회사가 2005년에 36개였던 것이 2008년도에는 72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역회사들은 자금이 부족하고 대외시장개척 능력이 약하여, 일부 무역회사들은 기타 기업의 수출입을 대행하고 대리 수수료로 연명하고 있다. 이처럼 길림성의 무역회사들은 요녕성과 남방계 무역회사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한데, 이는 길림성의 대북 무역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북한회사들의 계약위배가 심각하다. 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측 회사들은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되도록이면 대금을 먼저 받은 후 수출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무역회사들은 여러 수법을 사용하여 중국 측 대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예약금을 보내고 물건을 받은 후 나머지 부분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상급부문에서 하달한 자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어 중국 측 인원의 통행증이 만기가 되어 귀국하면 다시 요청장을 보내지 않는 경우; 기업책임자들을 빈번히 바꾸는 수법으로 대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수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2008년 필자가 연변주의 훈춘과 도문시, 장백현과 지안시의 일부무역회사들을 조사한 대표적인 몇 개의 사례만 제시한다.

예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상환하지 않은 사례

2006년 5월 연변 훈춘시의 모 회사는 북한의 모 무역회사와 화학비료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대방은 30%의 예약금을 먼저 내고 화학비료가 북한에 도착한 후 한 달 내에 나머지 대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함경북도 인민정부의 보증서를 제시하였다. 중국 측 회사는 계약에 따라 권하(圈河)세관을 통하여 화학비료를 북한에 수출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 회사에서는 반년이 지나도 남은 대금을 상환하지 않아 중국 측 회사에서 여러 번 북한 측에 대금상환을 독촉하였으나 북한 측은 상급에서 준다고 약속한 자금이 도착하지 않아 상환을 미루고 있다고 답하였다. 얼마 후에 중국 측이 함경북도 인민위원회를 찾아가니 이 비료구입 대금은 원래

2) 당시 북한은 러시아에 대량의 벌목공들을 파견하였다. 북한은 벌목공들의 임금으로 받은 목재를 연변에 수출하고 연변으로부터 옥수수를 수입해갔다.

3) 북한은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과의 파트너 관계를 이용하여 연변의 무역회사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설탕의 중계무역을 진행하였다.

중앙농업위원회에서 주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아 대금을 상환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대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이 회사는 수차례 북한을 찾아갔지만, 여전히 미결 상태라고 한다. 북한의 대답은 항상 언젠든 자금이 내려오면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각종 이유로 대금상환을 지연한 사례

2007년 9월 연변주 훈춘시 모 회사는 나선시 인민보위부 산하의 무역회사와 중국산 자동차 10대 수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중국 측 회사가 자동차를 나선시까지 운송해준 후 북한 측 무역회사가 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국 측에서 자동차를 나선까지 운송한 후에도 북한 측은 자금 미도착을 이유로 기다리라고 하였다. 중국 측 회사는 북한 현지에서 매일 자동차 한 대 당 인민폐 20원의 주차비를 지불하면서 23일간 기다려 겨우 50%의 대금을 받았으나, 북한 측은 나머지 부분을 자동차 부품 구입 후에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중국 측 회사에서 다시 자동차 부품을 구입해 보내주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현재까지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강제로 물건을 탈취한 사례

2006년 11월 말 연변 훈춘시 모 무역회사에서 나선시 모 무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자동차 타이어 400개를 나선에 있는 북한 측 회사에 운송하였다. 권하 세관을 통하여 나선에 도착하니 저녁 8시가 넘었다. 북한 측 회사의 직원은 중국 측 운송기사 2명과 책임자 1명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따뜻한 물을 주며 잠시 쉬도록 하였다. 20분이 지나 중국 측 책임자가 밖에 나와 보니 두 자동차에 실었던 타이어가 모두 사라졌다. 북한 측은 처음에는 본인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중국 측에서 신고하겠다고 하자 본인들이 한 짓이라고 시인하였다. 북한 측은 자금이 없어 줄 수가 없다고 변명하며 1개월 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미상환 상태이다.

책임자를 바꾸는 수법

연변 투먼시 모 회사는 2004년에 북한 청진시 모 회사와 광산설비를 수출하고 청진시 김책제철소 부근의 직두천 바다에 깔려있는 미광(철강 찌꺼기)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중국 측은 계약에 따라 1,600만 달러에 해당되는 광산 채굴설비를 수출하였고 400만 달러 정도의 미광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북한 측 기존의 책임자가 비사검열(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에서 대량의 달러가 색출되어 잡혀 갔고 새로운 책임자가 파견되어 왔다. 북한의 새로운 책임자는 원래의 계약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면서 미광 수출을 중단시켜 현재 중국

측 회사는 미광수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북한 측에서 중국 측 회사의 명칭을 합자회사에서 합작회사로 바꾸라고 강요하여 명칭도 바꾼 상태여서, 나머지 투자는 어떻게 회수할 지 미결 상태라고 한다.

넷째, 중국의 변경무역정책의 변화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변경무역 지원정책이 WTO의 관련규정에 되므로 2004년 4월 이후 중국정부는 변경무역을 통한 수입세금 감면(50%) 정책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현재 변경무역은 일반무역과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길림성의 대북 무역에서 변경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정부의 정책변화는 길림성의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길림성의 대북 투자

(1) 길림성 대북 투자의 일반 개황

2000년대 중국기업들의 대북 투자는 대부분이 길림성과 요녕성의 변경지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변경지역이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해 있고 장기간의 대북 교류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분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일정한 부를 축적해 온 남방계 기업들은 변경지역을 통해 대북 투자를 하고 있다. 연변텐츠공업유한회사의 무산광산에 대한 투자, 중국오광(五礦)그룹의 장백현을 통한 혜산동광에 대한 투자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정부는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중국 측 자원개발 관련기업들의 대부분은 보상무역형태를 취해 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한 예로 무산광산에 투자한 연변텐츠공업유한회사도 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보상무역형태로 철광분을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대북 실제투자기업수와 투자액은 중국 상무부에 등록된 수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본다.⁴⁾

길림성의 대북 투자는 주로 북한의 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연변텐츠공업무역회사는 무산철광에 1.3억 위안을 투자하였고 창바이현의 대북 투자기업 중 13개 기업이 북한 양강도의 갑산철광, 보천금광, 후창몰리브덴광, 8월동광, 신파몰리브덴광 등에 투자하였으며, 지안시 이창(懿昌)회사는 북한의 평안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등 지역의 철광, 연, 아연광, 몰리브덴광 등 혼자 여러 개 광산에 투자하였다. 중국광업투자회사는 길림성 장백현을 통해 양강도 혜산청년동광에 투자하였고 2011년 9월 30일에 개업식을 가졌다. 이 합영회사의 등록자금은 4,490만

4) 중국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3~2010년까지 중국의 대북 총 투자규모는 1억 1천만 달러라고 한다. (우영자, "최근 중·북 경제협력의 실태와 전망", 『북한경제리뷰』, KDI, 2011년, 11월호, p 93.)

유료로 생산이 시작되면 일 2천 톤의 채굴능력을 갖추고 연간 60만 톤의 광석을 채굴할 수 있으며 연간 2.5억 위안(4천만 달러)의 수입액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⁵⁾

그러나 2009년 중국정부가 두만강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부문과 제조업으로 이전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6월 9일 나선시에서 거행된 북중 경제협력 착공식에서 길림성 아태그룹⁶⁾은 나선시에 100만톤 시멘트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북한과 협의하였다⁷⁾. 나선시 경제협력국은 시멘트 생산공장 건설에 필요한 우대정책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건설용수, 인력, 운수, 물류, 출입국수속 등에 대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나선경제협력국은 원칙적으로 다른 기업이 나선개발구 내에 시멘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였다고 보도되었다. 길림연초그룹 산하의 연길(延吉)담배공장에서는 평양에 대동강 연조합영유한회사(2000년), 백산연초유한회사(2008년)를 설립한 데 이어 2011년에는 나선특별시에 독자기업인 나선신흥연초회사를 설립하였다. 현재 이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 중 일부는 북한시장에서 판매되고 일부는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⁸⁾

2000년대 중반부터 길림성의 대북 임가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훈춘운달(運達)의류 회사는 2005년부터 북한 나선시 은하 의류회사 등 4개 회사(1,500명 노동자)와 의류 위탁가공을 6년째 진행해 오고 있고, 이 사업은 나선시 정부에서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훈춘운달(運達)의류 회사는 각종 내의들을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했는데 인건비의 상승과 구인난으로 나선시 은하의류회사와 위탁가공협력을 시작하였다. 현재 이 분야의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연변지역 동일 업종 노동자임금의 20~30% 정도이다. 중국 측에서 설비와 원자재를 공급하고 북한에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은 나진항을 통해 직접 한국과 일본 등지에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일본,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섬유, 의류분야의 위탁가공교역이 대폭 위축된 상태이다. 2000년대 길림성의 대북 수출에서 합섬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의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과 의류, 봉제 임가공사업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2) 길림성의 대북 투자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점

첫째, 전력 및 교통·통신 등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이다. 2000년대 북한의 경제난은 90년대에 비해 다소 완화되기는 했어도 사회기반 시설은 여전히 낙후된 실정이다. 2010년 북한의 발전량은

5) 『길림신문』, 2011년 10월 3일.

6) 중국 길림성 아태그룹은 1986년 설립된 기업으로 할빈과 장춘 2개 시장을 기반으로 시멘트 생산을 위주로 성장한 업체이며 현재는 부동산, 주식투자 및 석탄, 의약품제조, 무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1995년 상하이증시에 상장되었으며 '중국 500대 대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할빈대교, 장춘 화능(华能)전력발전소 건설 등 동북지역 대형 프로젝트가 줄지어 등장하면서 2010년 시멘트 생산가능량이 전년대비 40% 증가하는 등 호황기를 맞고 있는 기업이다.

7) "중국 시멘트 생산업체, 북한 나선시에 전격 독점투자권 따내", 〈http://www.kotra〉, (검색일:2011년 6월 20일).

8) "길림연초공업의 대조선 투자", (연변대학동북아연구원과 한국평화문제연구소 공동세미나 논문집, 2011년, 8월 30일).

235억 kw로 발전설비용량인 775만 kw의 30%정도 밖에 되지 않아, 전력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대북투자업체들은 정상적인 생산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불안정한 전압으로 기계설비들이 쉽게 고장 난다고 한다. 연결담배 공장 등 능력이 되는 투자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으나 그 외 기업들은 정상적인 생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한의 교통사정도 심각한 상황이다. 1, 2급 도로의 폭이 2차선 정도에 지나지 않고 4급 이하의 도로는 폭이 더 좁아서 자동차의 운행이 쉽지 않으며, 비포장도로 구간이 많고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교통난이 심각하다. 기계설비, 원자재의 운송을 위해서는 먼저 도로부터 닦아야 하므로 투자업체들은 생산설비가동 이전에 투입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모든 국제전화와 외국에서 보내오는 팩스는 무조건 평양을 거쳐야 하므로 대북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제때에 상대방과 연락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둘째,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정책이다. 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대외개방을 실시하기 때문에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폐쇄적인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1월 27일에 수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1993년에 제정한 『라선자유경제무역지대』에 비해 “간접 투자의 명시” (4조), “기술기능실습을 위한 노동력 해외 파견가능” (16조), “지대의 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투자기업 모두에게 지대 밖 기관기업소단체와의 경제거래 허용” (21조), “지대에 진출한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에 지대 밖 위탁가공의 허용” (27조) 등 전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투자가의 주요 관심사항 중의 하나인 노동력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노동력의 채용-해고를 지대의 노동력 알선 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 (23조)하고 있다. 즉 외국투자기업은 노동력의 채용과 해고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임금지불도 여전히 북한 정부 측에 지불하는 관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보너스를 통한 유인 제공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나선특구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의 외국인 독자기업은 기본상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기타 제한 조치들도 많다.

셋째, 중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북한당국의 정책변화이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광산 등 자원개발에 투자한 업체들이 운영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다. 즉, 중국 측 투자기업들이 생산을 가동하여 제품을 다시 국내로 수입하려고 할 경우 북한 측은 상급에서 새로운 방침이 내려 계약에 따라 수출할 수 없다고 하여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게 된다. 합자기업에서는 북한 측이 제품을 뒤로 빼들려 타 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아래의 사례와 같이 중국 측에 손실을 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새로운 방침이 내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위배

1) 2007년 8월 도문시 모 회사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모 금속채굴 기업에 1천 만 위안의 광산채굴 설비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비금속 유황철(非硫鉄)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 측 회사가 계약에 따라 북한에 설비를 운송하고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자 북한 측은 상급에서 새로운 방침이 내려와 이 제품은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수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미 북한까지 운송한 설비를 다시 운송해 올 수도 없는 중국 측 회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2) 2006년 6월 장백현의 모 회사는 양강도 모 임산작업소에 목재가공설비를 수출하고 목재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중국 측에서 설비를 수출한 후 목재를 수입하려고 하자 북한 측은 상급에서 목재 수출금지라는 새 방침이 내려와 수출할 수 없다고 하며, 다시 지령이 내려와야만 목재를 수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합자기업에서의 계약 위배 사례

2004년 중국 장백현 모 회사에서는 북한 양강도 모 광산에 1,700만 위안에 해당하는 광산설비를 수출하였다. 합자계약에 따르면 북한 측은 매달 일정량의 폴리브덴을 중국 측에 수출해야 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 회사에서는 중국 측 관리 인원들이 음력설 휴가 시 귀국한 틈을 타서 몰래 중국의 타 회사에 현찰을 받고 판매하였다.

2008년 7월 1일부터 북한은 모든 외국차량들의 국경통과 금지조치를 내렸다. 이는 중국기업들의 대북 교역과 대북 투자비용을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무산광산에 투자한 텐즈공업무역회사는 원래 중국 측 차량들이 직접 무산광산에 들어가 철광분을 운송해 왔으나 현재는 북한 측 기업이 먼저 세관부근까지 운송한 후 중국 측 차량들이 북한 측 세관에 가서 다시 싣고 나와야 하므로 운반비용과 시간이 훨씬 증가하였다고 한다. 북한 측의 이러한 정책변화들은 중국투자기업들을 환경변화의 리스크로 인해 불안하게 만들고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한다.

중국 측 기업들은 지난 1980~90년대 일본조총련 기업들이 대북 투자에서 겪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북한의 현실에서 외자기업이 독자적으로 모든 서류수속을 밟으려면 여러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전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합자형태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합자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분쟁 때문에 중국기업들은 되도록 단독투자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나선특구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독자기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합자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III. 길림성의 대북 경험 과제

1. 두만강 지역 국제물류운송루트의 구축

2009년 “중국두만강지역 합작개발계획요강”은 국제물류운송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운송루트의 구축을 창지투선도구 개발개방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두만강지역의 북중 국제운송통로는 중국 훈춘권하~북한 나진도로; 중국도문~북한남양~두만강~나진철도; 중국도문~북한남양~청진철도; 중국용정삼합~북한회령~청진도로 등이다. 이러한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 중 훈춘에서 나진항으로 통하는 운송통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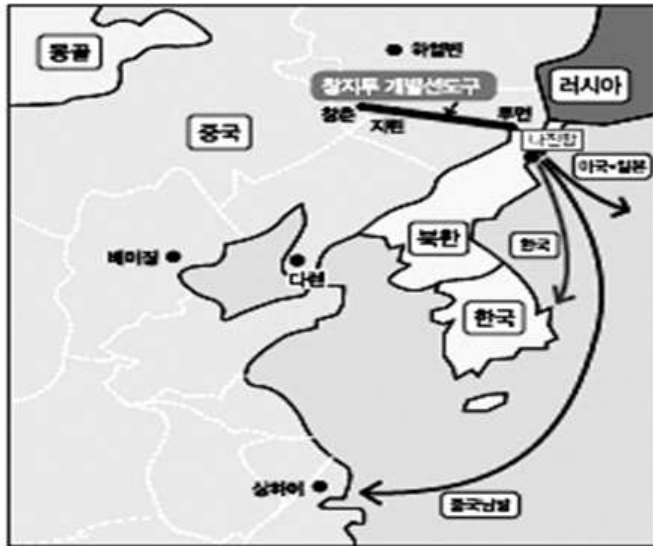
중국은 나진항을 이용하여 동북지역의 풍부한 석탄 및 곡물을 남방연해 지역으로 운송하고, 남방연해 지역의 값싼 공산품을 동북지역 내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운송하기를 원한다. 2008년 7월 중국대련창리그룹(創立集團)은 북한강성무역회사와 합영회사를 설립하고 나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며⁹⁾, 3천만 위안을 투자하여 나진항 1호 부두에 연간 150만 톤의 하역능력을 갖춘 정박지의 보수 공사를 마쳤다. 이 회사는 2010년 12월 7일 2만 톤의 석탄을 훈춘 권하 통상구로부터 나진항 1호 부두로 운송한 뒤, 임대한 중국해운그룹의 만 톤급 진버호(金博号)화물선으로 2011년 1월 11일에 나진항 1호 부두를 출발하여 1월 14일에 상하이 와이꼬초(外高橋)부두에 도착하였다.¹⁰⁾ 이는 중국 동북지역의 물자가 나진항을 이용하여 남방지역으로 운송된 과정운송의 첫 사례이다. 2011년 3월 훈춘광업집단은 중강(中江)그룹 상하이회사와 석탄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한 해에 50만 톤의 석탄을 나진항에서 상하이로 운송하기로 하였다.¹¹⁾ 2011년 5월 14일 제2차로 2만 톤의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 상하이로 운송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운송할 계획이다. 나진항을 통한 과정운송통로의 개척은 향후 동북지역의 풍부한 자원들을 중국의 남방지역이나 한국, 일본, 미국 등 태평양 지역 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9) 『黑龍江日報』, 2010년 3월 8일.

10) 『연변일보』, 2011년 1월 12일.

11) 『연변일보』, 2011년 5월 23일.

그림 4 중국의 나진항을 통한 해상운송통로



또한, 중국은 현재 나진항으로 통하는 도로건설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길림성은 훈춘~나진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에 우선 1.5억 위안을 투자하여 원정리통상구~나진항 도로개조에 착수하고 있다¹²⁾. 2011년 5월에 현장측량, 시공설계도 공사기술인원과 차량, 시공설비 등 관련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북한 나진시에 현장 건설지휘부도 설치하였다. 이 도로건설은 금년 말에 완공될 계획이다.¹³⁾ 창지투선도구 100개 중점 프로젝트는 2015년까지 23억 위안을 투자하여 권하~나진 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훈춘에서 출발한 자동차가 나진까지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되며 연간 20만 대의 차량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고속도로의 건설을 통해 현재 40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30% 밖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나진항이 본 건설을 통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¹⁴⁾ 북한은 나진항을 연간 1천 만 톤의 하역능력을 가진 항구로 확장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12) 『연변일보』, 2011년 5월 24일.
 13) 그 중 도로 철도분리소 1개, 중소교량 16개, 배수로 129개가 포함된다. 시속은 시간당 40킬로미터, 고개를 넘는 구간의 시속은 시간당 30킬로미터로 설계된다. 시 구역 구간 노반 너비는 10미터, 길바닥너비는 9미터이고 시외 구간 노반너비는 8.5미터, 길바닥너비는 7미터이다.(『연변일보』, 2011년 5월 17일.)
 14) 김영운·임을출, “라진·선봉지역 물류운송분야 협력방안과 과제”,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8월호), p.117.

청진항은 비록 나선시에 속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두만강물류 운송대동로” 구축의 총체적 전략에 포함되고 있다. 청진항은 나선항의 남쪽에서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연간 화물 하역능력이 800만 톤에 달하며 연변의 투먼과 북한을 연결하는 관문이므로 중국 동북지역을 바다로 연결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해상운송 통로가 될 수 있다. 2010년 북한정부는 연변자치주에서 제기한 “청진항종합이용” 프로젝트를 국가의 ‘방침전략’으로 승격시키고 이 사업을 전격 추진하고 있다. 도문시 하이화(海华) 무역회사는 청진항에서 사용하기 위한 40톤 컨테이너와 비포장물 운반작업 기중기 설비를 중국 상하이에서 제조하였고, 도문에서 청진으로의 철도 운송에 사용될 차바곤 50대는 이미 북한 측에 교부하였다. 하이화 무역회사는 또한 부두건설에 3천 만 위안을 투입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청진~부산 간 컨테이너 항선을 개통할 예정이다. 창지투선도구 100개 중점추진 프로젝트는 북한의 나선항과 청진항으로 통하는 도로, 철도 및 통상구 다리 등 인프라건설에 총 160.5억위안을 투자하고 국내 구간은 2015년에 완공하고 북한 내 구간은 2020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산업협력의 과제

첫째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확대이다. 길림성과 북한의 북부지역은 산업구조가 비슷하며 서로 다른 경제발전단계에 처해 있어 상호 협력 가능성이 풍부하다. 길림성은 자동차, 석유, 화학공업, 목재가공 등이 발달하였고 북한의 북부지역은 광산물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청진시에는 김책제철소를 비롯한 대형 철강업체들이 있다. 현재 북한은 기계설비의 노후와 전력난, 원자재난으로 기업 가동률이 30% 정도이며 대부분의 공산품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길림성과 북한은 제조업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호 협력 가능성이 크다. 『중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에 따르면, 양국은 나선-선봉-웅상-굴포로 이어지는 산업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나선에 창고보관물류, 장비제조, 첨단기술산업단지, 피복식료품 가공 등 4대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선봉에 원자재공업, 방직피복, 장비제조업, 농산물가공 등 4대 공업단지, 웅상에 종합목재가공공단, 굴포에 기계제품 생산단지 등 10개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향후 길림성의 대북 투자는 자원개발중심에서 자동차 및 부품제조, 화학공업, 목재가공, 기계제품생산 등 제조업에 대한 투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둘째, 수출 가공 협력이다. 북한의 동해안에는 명태, 고등어, 청어, 대구, 방어, 게 등 해산물자원이 풍부하다. 길림성은 매년 북한의 나선, 청진 등지로부터 대량의 해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길림성의 연변지역은 중국 전역에서 생산된 마른명태의 가공지로 자리잡고 있는데, 처음에는 농민들이 한가한 겨울철 시기를 이용하여 러시아와 북한산 명태 가공을 부업으로 삼던 것이 점차 명태전문 가공촌으로 발전하여 매년 대량의 마른 명태들을 중국 전역과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훈춘변경합작구 내의 만 톤급 해산물 냉장창고가 완공되면 연변은 북한 동해안으로부터 더욱 많은 해산물들을 수입하여 가공생산한 후 중국의 내지와 한국, 일본 등의 주변국가에 수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 지역 내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연변의 일부 회사들은 나선시에 수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하여 수산물을 가공 및 수출하고 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향후 길림성과 북한간의 수산물가공협력은 점차 발전할 전망이다. 길림성과 북한 간 의류가공 수출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90년대 이후 연변지역은 막대한 여성노동력이 대도시와 외국으로 진출하여 여성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의류 분야는 구인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분야의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 수준은 연변지역 동일업종 노동자임금의 20~30%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일본, 한국과의 관계악화로 섬유, 의류분야의 위탁가공교역이 대폭 위축된 상태이다.

셋째, 농업분야의 협력이다. 길림성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해 있고 기후가 유사하며 북한에 비해 농업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길림성의 농업기술과 농자재를 북한에 도입하여 북한의 농업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면 북한의 식량난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길림성은 북한과 농업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지투선도구와 나선특별시 간 경제협력의 8개 항목에는 나선농업시범구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즉, 나선시에 우량품종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북한 전역에 우량품종을 보급하고 현대적인 태양에너지 온실, 채소, 과일, 화초생산기지를 건설하여 현대 농업기술이 북한 전역에로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관광협력의 과제

향후 길림성과 북한 간 관광협력의 주요 과제는 두만강지역 다국적 관광의 발전이다. 지난 90년대 UNDP는 두만강 접경지역의 변경관광업을 두만강개발의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하였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지역의 관광업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후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은 두만강지역에 창지투선도구,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북한의 나선시 등 3개 지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초국경관광합작구를 건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2010년 3월 훈춘삼강관광회사와 러시아 극동지역 운송연합체, 북한나선시 국제 여행사는 공동으로 두만강지역 다국적 관광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다국관광은 두 개의 기본

코스로 구성되었고 각 코스는 4일 간의 여행으로 진행된다. 그 중 A코스는 훈춘~슬라브양카~하산~두만강철교~나선~훈춘이며, B코스는 훈춘~블라디보스토크~슬라브양카~하산~두만강철교~나선~훈춘이다. 중-러-북 3국을 경유하는 이들 다국관광 코스는 이들 동북아 지역 최초의 무비자관광 노선으로 이는 수속 절차가 간편하고 빠르다.¹⁵⁾ 이 코스는 재작년에 개설되었고 작년에는 관광객이 대폭 늘어났다. 두만강지역의 다국적 관광은 추진 중에 있는 두만강국제자유무역구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호시무역의 발전

중국 서남부의 운남성과 광서 변경지역에서는 인근의 베트남, 태국 등 나라와 변경호시무역이 활발히 진행되어왔으며 호시무역의 발전은 중국과 아시안 자유무역구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에 반해 길림성은 13개의 대북 통상구를 가지고 있어 호시무역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호시무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시무역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상품이 북한으로 유입되어 북한주민들의 생활고의 완화와 시장경제의식 확산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이므로 호시무역의 발전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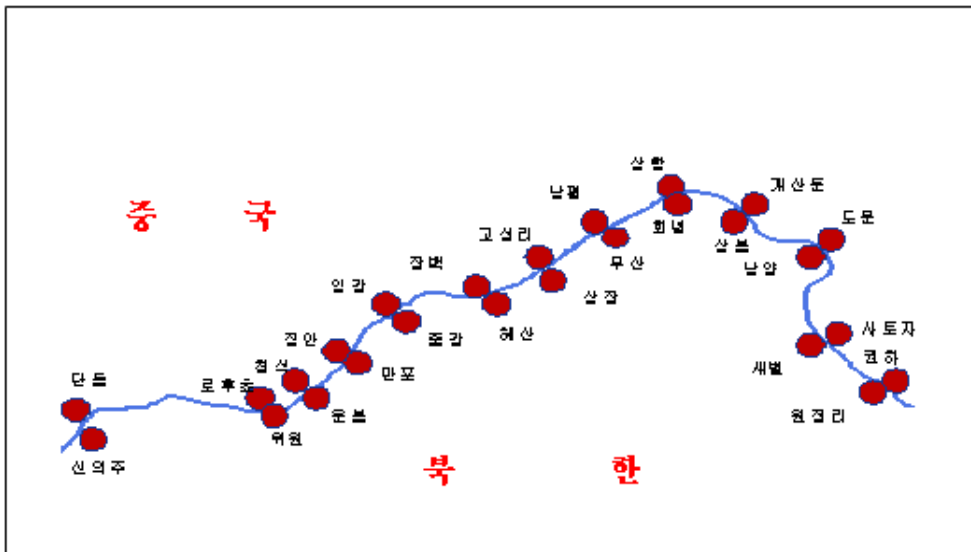
1997년 6월 변경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북한 나선특구 원정리 세관 부근에 3만 평방미터의 북중 변경호시 무역시장을 개설하였다. 초기에는 매주 4일 개장하고 북중 양측이 각각 150명씩 호시무역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였으며 인민폐 3천 위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었다. 원정리 호시무역은 활발히 운영되어 시장에 진입하는 인원이 많은 날에는 500명 이상이었고, 일 교역액은 40~60만 위안에 달하였다. 원정리 호시무역시장을 통해 대량의 중국 상품들이 나진시장과 북한 북부지역에 공급되었고 이는 변경주민들의 소득증가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1999년 5월부터 북한 측은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호시무역에서 외화유통을 금지시켰고 이에 따라 호시무역은 자동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2008년에는 창바이현이 통상구 바로 옆에 중조호시무역센터를 건립하고 절강성 이우(浙江义乌)에서 상인들을 유치하였으나, 북한 측이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호시무역센터가 개장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10월 13일 도문시는 도문세관 부근에 중조호시무역시장을 개설하고 매주 2차, 면세상품액은 8천원 인민폐까지 확대하였고,¹⁶⁾ 현재 도문시는 100만

15) 「연변일보」, 2011년 4월 28일.
16) 「연변일보」, 2010년 10월 14일.

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보세창고와 22층의 대규모 호시무역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용정시에서도 북한회령을 마주한 삼합(三合)통상구 부근에 국제물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용정과 회녕 일대를 묶어 국제경제협력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¹⁷⁾ 북중 변경지역에서 호시무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한의 경제난과 폐쇄성이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물자가 부족하고 교역 상품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호시무역에 나올 상품이 부족한 것이다. 북한은 또 주민들의 탈북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 지역 내에 호시무역시장 설립을 꺼려하고 있다. 호시무역의 활성화는 북한주민들의 생필품 뿐만 아니라 기업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들의 북한 내에 유입되어 기업가동율과 주민들의 가정부업을 늘려 상품생산을 확대시킬 수 있어 북한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서남 변경지역의 호시무역발전이 북중 호시무역 발전에 많은 시사점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관건은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인식전환이다. 즉 북한 당국은 시장을 계획경제의 필요한 보충수단으로 인식하고 상품경제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그림 5 북중통상구



17) 창지투선도구 100개 중점건설프로젝트에는 룡징삼합 국제수입자원가공단지 건설 항목이 포함된다. 총투자가 25억원 인민폐, 부지면적이 20만 평방미터인 이 가공단지는 주로 저장창고, 무역, 가공 등 종합기능을 갖춘 동북 3성에서 가장 큰 해산물제품 교역 센터로 될 전망이다. 건설기한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다.

IV. 맺음말

2000년대 길림성의 대북 경제협력은 무역과 투자를 상호 추진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이루었으나 길림성 자체의 경제구조, 지역경쟁력, 대외개방도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요녕성에 비해 뒤떨어진 상태이다. 길림성의 대외개방도 향상, 경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의 마련, 변경지역의 안정과 조선족 사회의 발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길림성의 대북 경제협력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원개발을 주목적으로 한 중국기업들의 대북 투자는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활용되었지만, 북한정부가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자원개발 중심의 경제협력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회생과 북중 경제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 모두 새로운 경제협력방식이 필요하였다. 중국의 두만강개발계획요강 발표의 배경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창지투를 선도구로 한 『중국두만강 개발계획 요강』은 길림성과 북한 간 경제협력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두만강지역 국제운송대통로가 구축되면 대량의 기업들이 이 지역으로 진출하여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며 다국적 관광, 호시무역의 발전 등으로 두만강 국제자유무역 시대가 형성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길림성의 대북 경제협력의 전망은 밝다.

참고문헌

- 课题组, “大图们江区域合作开发战略的思考”, 『社会科学战线』, 2006.3.
- 赵春子, “图们江下游流域近50年径流变化研究”, 『延边大学学报』, 2008.4.
- 金向东, 金奇宪, “图们江地区开发开放再度升温”, 『东北亚论坛』, 2008.4.
- 石明山, “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打造东北新增长极”, 『科学时报』, 2009.9.21.
- 张玉山, “新形势下中国图们江区域开发的机遇与挑战”, 『东北亚论坛』, 2010.3.
- 리은철, “나진 선봉경제무역지대 인프라 확충과 중국의 역할”, 『통일문제연구』, 제34권.
- 배종렬,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진전과 국제협력과제”, 『수은북한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9년, 겨울호.
- 조명철,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경협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1.6.
- 김상학, “동아시아지역내 경제협력과 라선경제 무역지대의 개발”, 『圖們江 學術論壇』, 2010.
- 조명철, “두만강지역 개발잠재력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10년 여름호.
- 최성근,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의 향방”, 평화재단, 전문가포럼, 2010.
- 『연변일보』, 2009.12.21, 12.23, 12.28.
- 『黑龙江日报』, 2010.3.8.
- 『길림신문』, 2011.6.18.
- 『길림신문』, 2011.7.1.
- 『연변일보』, 2010.10.14.
- 『연변일보』, 2010.11.15.
- 『연변일보』, 2011.1.3.
- 『연변일보』, 2011.1.12.
- 『연변일보』, 2011.4.28.
- 『연변일보』, 2011.5.17.
- 『연변일보』, 2011.5.19.

『연변일보』, 2011.5.23.

『연변일보』, 2011.5.24.

『연변일보』, 2011.6.7.

『延邊日報』, 2011.6.9.



북한경제 연구협의회

독재의 정치 및 경제논리 -
권력 교체기 현상을 중심으로
박형중

독재의 정치 및 경제논리 - 권력 교체기 현상을 중심으로

박형중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dpblue@kinu.or.kr

KDI 북한경제팀은 2012년 1월 11일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하여 “독재의 정치 및 경제논리-권력 교체기 현상을 중심으로” 라는 제하의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독재정치의 다양한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고, 독재 권력의 장악 및 유지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동학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 논의가 김정은 체제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는데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발표문을 수록하여 소개한다.

〈독재의 정치 및 경제논리-권력 교체기 현상을 중심으로〉

- 일 시: 2012년 1월 11일(수) 14:00~16:00
- 장 소: KDI 4-2세미나실
- 발 표: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재의 정치 및 경제 논리

- 권력 교체기 현상을 중심으로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경제연구협의회, 2012.01.11

목차

1. 독재정권 유형론
2. 독재정권 정치변동 일반론
3. 독재의 경제 논리 (1)
4. 권력 장악의 정치 및 경제 동학
5. 권력 유지의 정치 동학
6. 권력 유지의 경제 동학
- 독재의 경제 논리(2)

독재정권 유형론

독재정권의 유형과 정치변동

- 정권 유형에 따라 정치 유지 및 정권 변동의 양상이 달라짐.
- 4가지 종류
 - 개인독재
 - 일당독재
 - 군사독재
 - 혼합형

개인독재

- 일인통치, 권력은 배타적으로 일인에게 장악되어 있음.
- 자율적 기관이 존재하지 않음.
- 군부는 지도자에 종속되어 있음.
- 정당이 존재한다해도 사실상 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음.
- 지도자가 정책을 결정
- 지도자 권력에 대한 견제가 없음.
- 지도자의 친구/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도당이 통치를 도움.

일당독재

- 일당이 정치를 통제, 권력이 어느 한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장악되어 있지 않음.
- 당중앙위 또는 정치국이 누가 책임을 지며 정책을 책정하는가를 좌우함.
- 야당의 존재와 선거경쟁이 때때로 허락됨.
- 당이 미디어를 비롯 대부분의 국가 기관을 통제함.
- 군대는 당에 종속되어 있음.
- 선거는 통상적이지만 일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음.
- 입법기구도 보통 존재하지만, 일당통치 지지자로 구성되어 있음.

군사독재

- 한 명의 장교에 의해 지도되는 군대가 권력을 잡고 있지만, 배타적으로 지도자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음.
- 장교집단(군사평의회)이 누가 책임지며 정책을 지령하는가를 결정
- 군 위계가 분명하며 존중됨.
- 군부가 병력의 사용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고 있음.
- 정합적이고 규율잡혀 있고, 효율적 소통 통로를 가진 통치 단위
- 군대가 정책을 집행하고, 대부분의 통치 기관을 유지함.

독재정권 정치변동 일반론

정권 생존의 변수

- 독재정권의 존속 문제와 독재자의 존속 문제는 구별해야
 - 일당독재와 군부독재의 특정 지도자는 교체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일당독재와 군부독재가 붕괴하는 것은 아님.
 - 개인독재의 경우는 개인독재자의 운명과 독재정권의 운명이 밀접히 결합되는 경향, 그러나 개인독재자의 운명과 상관없이 (다른 독재자 또는 세습에 의해) 개인 독재 정권이 연명되는 경우도 있음.
- 독재정권 지도자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정권 내부의 엘리트로부터 발생,
 - 지도부가 얼마나 지탱하는가는 지도자가 독재정권을 구성하는 엘리트들을 얼마나 만족시키는가 그리고 엘리트 이탈을 얼마나 막는가에 의해 좌우
 - 일반대중은 정권 존속여부에는 큰 변수이지만, 개별 지도자의 존속여부에는 거의 역할이 없음.

개인독재

- 개인독재의 붕괴가 내부 분열 또는 지도자 지지 그룹으로부터 엘리트 이탈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음.
 - 보통 지도자들이 끝까지 권력에 집착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개인독재 내부로부터 발생할 개연성이 낮음.
 - 개인독재자가 정치적 자유화를 추진한다면, 권력을 투쟁없이 양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엘리트들도 개혁을 추진할 개연성이 낮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정치 미래가 정권의 미래와 뗄 수없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
 - 개인독재에서 엘리트들은 독자적 권력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당독재 및 군사독재와 비교할 때, 정권 교체 후 정치계의 정당한 행위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음.
- 독재자의 사망을 제외하면, 정권교체는 정부의 바깥에서 추동되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대중봉기 또는 외국 간섭에 의해 정권붕괴가 발생
- 개인독재정권 붕괴 과정:
 - 독재자는 권력에 집착할 개연성이 높, 통상적으로 폭력적 이형(말살, 쿠데타, 혁명 또는 외국 간섭 등)
- 주요 사례:
 - 루마니아(자우체스쿠), 이라크(사담 후세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보카사), 우간다(아민), 자이레(모부투), 아이티(두발리에 부자(부자))

일당독재

- 가장 생명력이 긴 독재 유형,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다른 독재 유형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
 - 잠재적 야당을 회유, 위기의 경우 정치참여와 야당의 대표성을 약간 증가시키고 야당의 요구를 약간 수용
 - 일당독재는 흔히 권력승계 과정에 관한 합의를 보유하고 있어서 지도자가 교체되고 일당독재는 지속함.
 - 따라서 개인독재의 경우 지도자의 사망이나 사임이 정치위기를 불러오지만 일당독재는 그렇지 않을. 다시 말해 지도부 투쟁은 일당정권의 붕괴 또는 일당의 붕괴를 통상 초래하지 않음.
- 일당독재정권이 붕괴하더라도, 과거 집권당은 재생되어 선거경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다시 말해 상당수의 엘리트에게는 일당독재 붕괴 이후에도 소생할 공간이 존재함.
- 일당독재의 붕괴 과정의 특징:
 - 협상에 의한 평화적 이행, (단기적이라고 해도) 민주주의가 가능함. 특히 정당엘리트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때
- 주요 사례:
 - 소련 및 동유럽의 공산독재, 중국, 말레이시아(1957-), 대만(1949-2000), 멕시코(1929-2000).

군사독재

- 군사독재는 내부적으로 취약, 세 유형 중에서 평균생존기간이 가장 짧음.
 - 정치권력을 잡고 있는 것보다는 군부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생존하는 것을 더 우선시
 - 기관이익이 충족되거나, 권력을 잡는 것이 군대의 통합성과 효율성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면, 병영으로 복귀
- 군부는 정치위기로부터 국가를 구하고 안정을 복구하기 위해, 군부독재는 처음부터 잠정 통치라고 선언하는 경우가 많음.
 - 군부는 대중의 민주화 압력에 예민하게 반응
- 군부독재의 붕괴 과정:
 - 협상에 의한 그리고 보통 폭력적이지 않은 이행, (단기라고 해도) 보통 민주주의로 귀결됨.
- 주요 사례:
 - 아르헨티나(1976-1983), 브라질(1964-1985), 한국(1960-1989)

독재의 경제논리(1)

총성집단 포상이 우선

- 독재자는 비교적 소수의 지지 집단의 충성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며, 이 핵심 집단의 규모를 되도록 작은 규모로 유지하고자 함.
- 소수의 지지집단에는 보통 군대, 대민행정(관료체), 통신과 정보 하부구조 그리고 핵심 경제 수단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음.
 - 소수집단을 부유하게 만들자면, 어디로부터인가 경제잉여를 이전해야 함.
- 독재자의 우선적 관심은 (다수 주민의 복지 증진이 아니라 다수 주민으로부터) 지대 추출을 극대화하는 것
 - 이의 재분배를 통해 핵심 지지집단을 유지시키고, 결과적으로 집권기간을 최장 연장하는 것
 - 만약 독재자가 정권 생존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 집단(즉 주민다수)을 돕기 위해 지지층에 배정되는 자원을 삭감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그는 정치적 위협에 직면하게 됨.

경제침체가 오히려 득

- 독재자는 누가 치부할 수 있는가를 독재자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시키고자 하며, 반대로 이러한 자신의 권능이 감소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막아내고자 함.
 - 재산권 보장과 법치실현, 주민의 교육 수준 향상, 낮은 조세 수준, 자유무역과 같은 정책은 독재자의 이러한 통제능력을 감소시키며, 또한 도전세력이 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냄.
 - 따라서 독재자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을 취하는 대신에 경제침체 상황 속에서 자신과 지지자의 특권과 부유가 보장되는 상황을 선호함.
- 만약 다른 지도자가 독재자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대 예상 수익이 현존 독재자보다 더 크다고 생각된다면, 현존 지도자의 핵심지지그룹은 붕괴
- 그러나 현직자는 도전자에 대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핵심그룹 멤버는 도전자가 약속을 지킬지 아닐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며, 또는 도전자가 일단 정권을 잡으면, 정권정취 시 지원자들을 제거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함.

권력 장악의 정치 및 경제 동학

권력 장악의 계기

1. 현존 권력자가 사망했을 때

현존 권력자의 사망이 일박하게 되면, 이제까지 핵심 충성자들은 자신들에게 미래에도 충분한 소리를 보장해줄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찾아 모색하게 될.

2. 도전자가 현직자 동맹의 핵심 멤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을 하여, 그들이 현직자에 대한 충성을 철회하고 도전자를 지지하게 하는 경우(축출, 암살, 사임, 쿠데타 등)

그러나 현직자는 도전자들에 비해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현존 핵심 충성 집단의 구성원들은 현존 지도자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포상할 것을 확신하고 있음.

그러나 현존 지도자가 죽어가고 있거나, 자기 주머니를 너무 많이 채운다거나 잘못된 정책을 선택했다거나, 핵심 지지자의 충성이 약화되었다거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도전자가 나타나 현직자를 폐위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

3. 군사적 패배에 의해 외부세력에 의해 현존 정치체제가 제압되거나, 혁명과 폭동으로 대중이 봉기하여 현존지도자를 폐위하고 현존제도를 파괴하는 경우

권력 장악을 위해 해야 할 일(1)

- 전임 지도자가 퇴출된 이후, 구정권의 돈줄과 같은 권력 수단을 가능한 한 빨리 장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정권을 경쟁적으로 장악하고자 하는 그룹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눈치를 보거나 이쪽저쪽 모두에 협력하는 집단의 규모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 권력의 고배들을 신속히 장악하여 국가를 장악한 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해두어야 할 필요
- 좋은 정책을 실시한다거나 다수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지자들을 충분히 포상하여 그들이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
 - 또한 새로운 집권자가 정권 잡을 때 도와준 지지자들을 (새로운 보다 충성스런 지지자로) 신정권 공고화 이후 갈아치울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는 순간 그들은 말을 갈아타려고 할 것

권력 장악을 위해 해야 할 일(2)

- 국가파산 지경에서 권력을 인수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 국가 수입을 확보하고 지지자들에게 포상하는 것
 - 인민을 굶겨 죽어도 군대에게 봉급을 주는 것을 망각하지 않으면 계속 집권은 보장됨
 - 만약 지지자 그리고 군대를 우선적으로 포상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폭동을 진압하고 반대파를 살해한다든지 등의 더러운 일을 하지 않을 것
- 권력 경쟁자를 제거

권력 세습의 장점

- 권력을 세습하는 것은 지도자와 충성자 양측에 많은 이익을 제공
- 충성분자를 포상해야 하는 것이 정권 유지의 핵심인데, 권력세습자(왕자)는 지지자를 계속 포상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
 - 돈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포상해야 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
 - 세습을 승인하면, 왕위를 둘러싼 투쟁을 풀릴 수 있음.
- 왕자가 왕이 되면 전임 왕의 신하들은 후임 왕과 공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전임 권력자의 핵심 충성자들이 특권적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은 권력이 외부자에게 계승되는 경우보다 가족 내부에서 계승되는 경우에 더 커짐.
- 새로 왕이 되는 왕자의 입장에서 볼 때, 취약한 권력 초기에 전임자의 충성자들의 보좌가 필요하며,
 - 만약 이들을 제거하려면, 새로운 권력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 전임자 핵심그룹 멤버들이 권력 상속자가 전임자의 핵심그룹의 구성을 대체로 존치시킬 것이라는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경우, 외부자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그들이 이탈하도록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짐.

권력 유지의 정치 동학

집권 초기의 어려움

- 독재자에게는 권력 초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임.
 - 독재자들은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직 잘 알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지지자 집단이 볼 때 신임 지도자가 자신들에게 부의 원천이 될지 안될지에 대해 의심하게 됨.
 - 독재자들은 정말 필요한 것이 누구의 지지인지, 누구를 털어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아직 알고 있지 못함.
- 권력자의 집권 초기는 특별히 어려운 시기로서, 특히 수입원을 열성적으로 찾아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질의 거버넌스라는 것은 사치적인 것임.
 - 따라서 집권 초기에 약탈, 압수, 추출, 금매매 등이 종종 발생, 역으로 (집권 초기를 넘기고자 하는 미분책으로) 역설적으로 잠정적 개혁이 실시되기도 함.

권력 지지 집단 재편성(1)

- 초기의 어려운 국면을 넘기고 성공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지도자는,
 - 자신의 권력장악을 성공시킨 지지자 집단을 재편성하여 자신의 힘을 배가시키고자 함.
- 현명한 지도자는 초기 지지자 중 일부를 털어낼 것이고, 대신 더 신뢰할 수 있고 포상하는 비용도 덜 들어가는 지지자를 새로 충원할 것임.
 - 그러나 자신의 친구와 지원자로 이루어진 지지집단을 새로 꾸린다고 해도, 새로운 지도자가 이들을 충분하게 포상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충성은 보장되지 않을 것임.
- 가능하면 핵심 충성집단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
 - 개인별 배당 증가, 절대 충성 보장, 감시를 위해서 독재자에게 유리함.

권력 지지 집단 재편성(2)

- 권력 유지는 권력 장악과는 전혀 다른 기술을 요구
 - 권력 생존의 규칙은 통치를 잘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도 동일하지 않음.
- 현명한 지도자는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 도움을 준 자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음.
 - 전임 지도자를 폐위한 이후, 새로운 권력자는 권력 장악시 도움을 준 자들 중에서 일부를 신속히 제거하며 앞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데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권력에 진입시킴.
 - 일부 털어내고 이리저리 뒤섞고, 규모를 축소시킨 후에야 자신에 구미에 맞는 충성집단을 새로 구성할 수 있으며, 그래야 신임 권력자의 미래가 보장됨.
- 현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유능한 부하가 아니라 (무능하더라도) 충성스러운 부하임.
 - 성공적인 지도자는 자신의 주위에 믿을 만한 친구와 가족을 배치하며, 야망을 가진 지지자는 제거함.
 - 현존 지도자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도움을 줄 능력이 있는 부하는 그 지도자를 폐위시킬 능력도 가지고 있음.
 - 위협이 될만한 부하의 숫자는 풀이고, 가장 충성스러운 자들을 주위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

권력 유지의 경제 동학

-독재의 경제논리(2)

경제 재편성 (1)

-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은 지지(충성)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핵심
 - 통치라는 핵심은 권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양질의 거버넌스 공급과는 다른 문제임.
- 독재자의 경제운영에서 핵심은 핵심 권력그룹과 주요 지지층을 그 충성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특권을 보장하는가에 있음.
 - 이는 국가경제를 성장시키고 다수 주민의 복지를 증가시킨다는 일반적으로 상정되는 경제 운영의 목표와 상반되는 것임.
 - 따라서 독재자 자신의 개인 치부와 지지층 보상을 보장할 수 있지만, 주민의 영속적 가난과 무지를 방치 또는 조장하는 경제정책이 독재자가 취하는 경제 정책 방향임.
 -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여러 조치 예를 들어 재산권과 계약준수 보장, 일반 주민의 교육과 보건의 향상과 같은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독재자와 충성집단의 특권을 제한하고 전체 정권에 도전요소를 키우는 성격의 정책임.

경제재편성(2)

- 정권 교체로 새로운 독재자가 등장하면, 새로운 층성집단이 꾸러지며, 이들의 경제적 번성을 보장하기 위해
 - 기존 경제특권체계가 해체되어 재편성되어야 하며, 이것이 새로운 권력 체계 공고화의 핵심 작업임.
 - 중요 요직 분배, 부패 허가권 재배분, 경제 특검권 재배분 등
- 조세는 층성을 생산하는 데서 두 가지 역할
 - 조세는 핵심지지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포상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
 - 조세는 지지그룹 바깥의 집단의 복지를 감소시킴. 다시 말해 바깥 집단(가난한 다수)의 부를 층성집단(소수 부자)에게 이전하는 기능을 수행
- 독재자들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직접 스스로를 포상하도록 함으로써 재부를 수집했다가 다시 나누어주는 방식이 내포하는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부담을 회피
 - 많은 지도자들에게 부패는 제거되어야 할 악이 아니라 핵심적 정치 수단임.
 - 독재자들은 암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시민들로부터 뇌물을 받을 허가를 부하들에 부여 함.

독재의 경제전략 2가지 선택

- 독재자는 기본적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경제운영원칙에 입각하는데,
 - 이를 기본틀로 하면서도 주어진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의 경제전략을 택할 수 있음.
- 발전국가전략:
 - 한국 등과 중국 및 베트남
- 약탈국가 전략:
 - 장기 경제 침체에 기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대다수의 “체제이행”국가를 포함) 다양한 독재국가
- *유럽연합에 가입한 동유럽의 구 공산 국가는
민주주의 시장경제형 경제 노선

약탈국가전략

- 자연자원 풍부국가 및 다액의 원조 수취국가에서 주로 나타남.
 - 내부경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중앙기에 걸쳐서 공급하는 것이 가능
- 이들 국가는 경제성장 및 인간자본 개선, 소득 균형 등에 관한 실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
- 자연자원과 외부원조는 조세를 받지 않고도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원천을 제공
 - 한편에서 자연자원 추출은 독재자가 지지자를 동요로써 지경으로 포섭하면서 자신도 엄청난 개인축재할 수 있게 함.
 - 그러나 독재자 지지집단 바깥에 존재하는 다수 주민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스스로 조직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정권의 장수에 도움이 됨 -> 빈부격차 극심.
- 국내경제생산성 증대 및 조세 증액을 회피
 - 생산성 및 조세수입을 증대하려면 재산권 보장과 계약준수 보장을 토대로 하는 내부 개혁 또는 국가의 공공재 공급이 증가해야 하는데.
 - 이는 독재자와 총성 특권집단이 자연 재부 약탈 및 생산자 수탈에 제한을 가하게 되며, 일반 주민의 교육과 보건 향상은 중장기적으로 권력 유지에 도전 요소를 증가시키는 것과 동일

발전국가전략

- 자연자원과 원조의 빈곤 때문에 또는 의도된 선택에 의해 고용증가에 기초한 국내경제생산성 증대 노선을 채택
 - 고용증대에 따라 소득기회 확산 -> 중장기적으로 임금상승 및 고도숙련노동수로 증가 -> 노동력 투입 증가 요구에 따른 교육 및 보건 향상 수요 발생 -> 조세 수입 증대에 따른 국가의 공공재 공급 능력 증가
- 이러한 노선은 파이가 커지는 가운데 그 파이 중에서 누가 더 많은 파이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 <약탈자와 생산자 사이의 권력 투쟁>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 중장기적으로 재산권과 계약준수 보장을 지향하는 법치로의 발전 경향이 나타남.
- *약탈현상의 기반: 경제특권의 국가관리, 제도 취약(특히 소유권 및 계약준수보장의 취약), 부정부패의 만연
- *생산자 우대 정책: 국가 간섭 감소, 법치, 국가 공공재(교육, 보건, 법치 등) 공급 능력 증가, 제도 강화 등

두 노선의 비교

- 약탈국가노선은
 - 권력 핵심 집단의 규모가 작을 수록 그 특징이 강화됨.
 - 구조적으로 사회의 정권에 대한 도전 능력을 낮은 수준에 유지하면서도 독재자와 출성집단의 번영과 생존을 장기 보장하는 노선
 - 파이의 크기가 증대하지 않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내부 세력간에 제로섬 권력 투쟁이 특징
- 발전국가노선은
 - 구조적으로 정권에 대항하는 사회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노선으로 독재자에게는 정치적으로 훨씬 위험스러운 노선
- *약탈국가이든 발전국가이든
 - 이른바 '시장경제'에 기반하며,
 - 대다수의 약탈국가는 북한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개혁개방'된 국가임.

경제 자료

신년공동사설 경제부문 비교(2000~2012)

나미나, 박조아(정리)

신년공동사설 경제부문 비교(2000~2012)

2012년 1월 1일 북한은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라는 제목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이번 신년공동사설은 전반적으로 김정일의 유훈통치에 따른 기존노선을 유지하면서 ‘김정은 중심’으로 정책운영을 강조하며 경제부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성대국 건설’ 관련 내용을 대폭 줄이고 강성부흥 강성국가 구호가 이를 대신하였다. 지난해 사설에서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이라며 ‘경공업 21번, 인민생활 19번’ 언급한데 반해, 올해는 각각 5회와 3회로 줄었다.

본 경제자료에서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의 신년공동사설 경제부문의 구호, 전년도 경제부문 성과, 올해 경제부문 목표, 경제건설 부문 주요 과업 및 방침을 비교하여 소개한다.

정리 : 나미나 연구원 (mina@kdi.re.kr)

박조아 인턴 (joah@kdi.re.kr)

1. 2012년 신년공동사설 경제부문 비교

가. 연도별 사설 제목

연 도	내 용
2012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011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2010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의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2009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2008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 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2007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2006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
2005	전당전군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2004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003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2002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2001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2000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 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나. 구호

연 도	구 호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 훈련도 전투대! ▪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 ▪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 ▪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대! ▪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 인민을 돕자! ▪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여 선군조선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나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 인민을 돕자!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나가자!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 ▪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 <우리 민족끼리> 가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자!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의 기발을 높이 들고나가자!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자! ▪ 우리 민족제일주의 기치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국창건 55돐을 맞는 올해에 선군의 위력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자! ▪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 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민족최대의 명절을 빛내이자! ▪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를 21세기 경제강국 건설의 새로운 진격의 해로 빛내이자!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다 당창건의 55돐을 빛내이는 돌격전의 영웅이 되자!

다. 전년도 경제성과

연 도	전년도 경제성과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의 정신적 영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대혁신대비약이 일어난 승리의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발전소를 비롯하여 2012년 축전을 기념할 기념비적 건축물들 건설 - 경공업공장 개건 완비, 현대화된 축산, 양어, 대규모 과일생산기지를 마련 ▪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룡림과 대흥, 회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선경마을 건설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성번영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난 가장한 변혁의 해 ▪ 민족사에 특기할 정치적대경사들을 통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양방한 전도와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 ▪ 강성대국의 리상을 전면적으로 꽃피울수 있는 토대가 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과 화학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연관된 공업부문들에서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주체 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열려짐 - 정보기술, 핵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혁혁한 성과들이 이룩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청사에 특기할 변이 난 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가 펼쳐진 극적인 전환의 해 ▪ 지난해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놀라운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 제2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 성강에서 주체철생산체계 완성, CNC기술이 세계의 첨단을 확고히 돌파 - 태양절과 5.1절, 10월의 명절에 펼쳐진 축포야회 -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생산이 획기적으로 정상하고 전반적인 공업부문 활성화 -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가 창조 - 냉원발전소와 원산청년발전소, 미루벌물길, 만수대거리 살림집과 같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 건설 - 남흥가스화대상공사가 완공되고 중요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비약적인 성과 달성 및 협동농장들이 강성대국 리상층으로 변화 - 방직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생산토대와 잠재력이 훨씬 강화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년에 걸치는 우리 공화국의 긍지높은 년대기우에 빛나는 승리의 장을 기록한 력사적전환의 해 -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길데 대한 웅대한 목표를 제시 -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현대화가 적극 추진 - 려성강청년1호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냉원발전소 등이 완공되어 인민경제의 기술적토대와 생산잠재력 한층 강화 - 대흥단과 미곡협동농장은 우리 사회주의농촌의 휘황한 전망을 보여줌. - 혁명의 수도 평양시 재정비 - 과학교육사업과 체육부문에서 군대와 인민에게 기쁨을 주는 훌륭한 성과 도출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군혁명 노선의 위대한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되고 부강조국 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자랑찬 승리의 해 -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수 있는 전망이 열림 -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기술개선이 적극 추진 - 나라의 원료, 동력기지와 인민소비품생산기지가 튼튼히 다져짐. - 공업의 주체성이 더욱 강화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성대국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이 열린 긍지 높은 해 - 경제건설분야에서도 새로운 비약의 발판 마련 - 농업생산을 더욱 늘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림 -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기술개선이 힘 있게 추진 - 기념비적 창조물 건설 -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생산기지 설립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경제건설 분야에서 최근 몇 해 동안에 해놓은 일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룩 - 농사에 모든 힘을 집중중, 총동원함으로써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진 - 대안천선유리공장과 백마-철산물길을 비롯한 선군시대 기념비적 창조물 건설 -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많은 대상들이 개건 현대화 - 기간공업과 중요공업부문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적 양양이 일어나고 나라의 경제전반이 확고한 상승의 궤도에 진입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자랑찬 성과 - 전력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전선들에서 최근년간에 볼 수 없었던 생산적 양양 -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대규모 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 물길공사가 적극 추진되어 선군시대 농업혁명의 튼튼한 토대마련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의 자립적 경제력이 한층 강화 ■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위한 전망을 열어 놓았음 - 전력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경공업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 -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토지정리가 힘있게 벌어졌으며 감자농사와 두벌농사에서 훌륭한 경험이 창조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이 이룩된 전변의 해 - 라남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지는 속에서 새로운 경제적양양의 돌파구가 열리고 황해남도 토지정리와 개천 - 태성호물길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는 21세기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른 장엄한 진격의 해 - 전반적 경제분야에서 생산적양양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도처에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생산기자들이 건설 - 새세기 진격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창한 투쟁속에 라남의 봉화가 타오르게 되었음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는 세기를 진감시킨 천리마 대고조의 북소리가 더욱 높이 울린 보람찬 투쟁의 해 - 혁명적 군인정신, 강계정신은 안변청년발전소, 청년영웅도로를 비롯한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건설 - 성강의 봉화, 낙원의 봉화는 사회주의경제를 활성화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이 장엄하게 벌어진 보람찬 해 - 성강의 봉화따라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 생산적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 전개 - 농업발전에 커다란 힘이 돌려지고 주체농법 요구 구현 - 강원도와 평안북도에 토지정리와 광명성제염소 건설 등 대자연개조사업에 커다란 성과 달성 -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한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

라. 경제목표

연 도	경제목표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당의 웅대한 강성부흥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총동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함 -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지켜 장군님의 강성부흥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 모든 힘과 지혜와 열정을 강그리 바쳐야 함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함 -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투철한 입장임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는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송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야 함 -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리는 것, 이것이 올해의 총적인 투쟁방향임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당, 전군, 전민이 우리의 사상, 우리의 투쟁방식에 의거하고 우리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21세기의 새로운 대고조역사를 창조해나가야 함 집단주의와 자력갱생은 우리의 고유한 혁명방식이며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음 - 모든 문제를 집단의 힘에 의거하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발성을 발양시켜 풀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함 - 자력갱생에 우리의 힘이 있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열쇠가 있음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선군시대의 총진군속도를 창조하여야 함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 발전을 앞세워 자위적 군사력의 물질적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함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야 함 - 현시기 경제강국건설의 기본방향은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 우리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는것 - 우리 경제구조의 특성을 살리면서 인민경제를 기술적으로 개간해나가는 원칙,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면서 인민들이 실질적인 덕을 보게하는 원칙, 내부의 원천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틀어쥐고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야 함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우리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건을 다그치고 그 잠재력을 최대로 발양 국방력강화 -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우리 군사력의 물질적 기초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함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사업은 강성대국 건설의 제일중대사 -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함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함 - 가까운 년간에 경제전반이 흥하게 하고 인민들이 우리 경제토대의 덕을 실질적으로 보게 하려는 것이 당의 의도이며 우리의 투쟁목표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공업은 나라의 군사경제력의 기초 - 빈터 위에서 시작하여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다져온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 -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함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혁명과 건설의 제차적인 전략적과업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함 경제과학전선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함 - 선군시대 경제와 과학기술은 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물질기술적으로 담보하고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보장해 주는 현대화되고 활력있는 경제와 과학기술로 되어야 함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군의 기치밑에 공화국의 위력을 높이 떨치자면 경제문화건설에서 새로운 변혁을 이룩해야 함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시기 우리 제도 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는 것임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야 함 - 국가경제력은 사회주의 강성부흥의 기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21세기에 상응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 것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음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우리가 큰 힘을 넣어야 할 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임 - 우리의 경제형편은 의연히 어려움, 올해 우리의 투쟁은 구보행군의 계속이며 경제강국건설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임

마.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 및 방침

연 도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 및 방침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남의 불길은 2012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기치 새로운 전환의 기치 ▪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은 경공업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문제 해결이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 ▪ 4대 선행부문 및 기초공업부문의 생산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100년 대진군을 다그치기 위한 돌파구 ▪ 새 세기 산업혁명은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임 ▪ 4대 선행부문 및 화학공업기지의 생산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공업부문, 전력공업부문, 금속공업부문, 철도부문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밑돌이 되어야 함 - 경공업혁명은 곧 화학혁명 ▪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나가야 함 ▪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내에 뛰어넘어 지식경제시대의 전열에 서야 함 ▪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함 ▪ 경제관리를 개선해야 함 ▪ 국방공업은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원천이며 인민생활향상의 믿음직한 담보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이미 다져진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 때 인민생활에서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함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생산정상화와 현대화를 밀접히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고생산수준을 결정적으로 돌파하는 것임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생명선인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는데 결정적인 힘을 넣어야 함 ▪ 인민생활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함 ▪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음 ▪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을 더 잘 구현해나가야 함 ▪ 경제강국건설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 나라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조직전개해나가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함 - 내각을 비롯한 각급 경제기관 지도일꾼들은 당의 경제사상과 리론, 방침을 경제강국건설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 집단주의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함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문제 해결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여야 함 ▪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함 ▪ 4대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이 경제강국건설의 전초선을 튼튼히 지켜야 함 ▪ 대기념비적건축물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하여야 함 ▪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선군시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우리 당의 경제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동지의) 현지지도단위들의 귀중한 경험과 생동한 모범을 적극 따라 배우고 일반화하여야 함 ▪ 자력갱생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변함없는 투쟁방식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의 힘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 락업을 일떠세울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하여 경제를 운영해나가야 함 ▪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경제강국건설의 확고한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며 대중적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함 ▪ 인민경제의 기술개건도 생산과 경영활동도 과학기술인재들을 적극 발동하는 방법으로 해나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사업에 힘을 넣어 강성대국건설을 떠메고나갈 유능하고 실력있는 인재들을 많이 키워야 함 -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이며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함

<p>20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다시 한번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함 ■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선 우리경제는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 것을 요구 ■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를 개건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나가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개건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중요한 경제전략으로 내세우고 새 출발을 한다는 립장에 서서 대담하고 통이 크게 혁신적으로 내밀어야 함 - 지력갱생의 원칙에서 간요하고 실리가 있는 대상부터 하나하나씩 실현하는 방법으로 개건현대화를 다그쳐야 함 ■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하는데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길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 지휘에 따라 처리해 나가는 정연한 체계와 질서를 세워야 함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획규률, 로동행정규률, 재정규률을 강화하고 생산의 전문화와 규격화, 표준화를 적극 실현하며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함 - 경제부문 지도일군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실리를 따져가며 경제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야 함 ■ 과학혁명, 기술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함 ■ 경제관리와 사회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철두철미하게 사회주의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함 ■ 당, 행정, 기술일군의 3위 1체를 보장하며 경제지도일군들이 주건과 신심을 가지고 올해 전투를 통이 크게 작전하고 패기있게 지휘해 나가도록 적극 밀어주어야 함 ■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은 후방사업을 당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틀어쥐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주어야 함
<p>20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시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본고리는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있음 ■ 발전하는 현실과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세우고 그 생활력이 높게 발휘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어야 함 - 생산을 전문화하고 규격화, 표준화를 적극 받아들여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자원을 효과 있게 이용하여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하며 노동행정사업을 짜고 들어야 함 ■ 당의 과학기술중시방향을 틀어쥐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힘있게 다그쳐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도 높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관점을 확고히 세워야 함 - 오늘의 선군혁명대고조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함 ■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조직집행자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지도일군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사업에서 주도성, 창발성, 능동성을 발휘하여야 함 - 당 조직들은 경제사업을 당적으로 힘있게 밀어주면 당, 행정배합을 잘해 나가야 함
<p>20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 ■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전반적 과학기술을 빠른 기간안에 세계선진수준으로 올려세워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과학의 새로운 목표를 끊임없이 점령하고 기초과학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우리 실정에 맞게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 강화 - 과학기술분야에서 실력전의 준비를 일으키며 과학자, 기술자 후비양성사업을 전망성 있게 추진 ■ 내각의 역할을 높이고 경제관리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가 날수 있게 모든 사업을 작전하고 결매있게 내밀어야 함 ■ 경제와 과학기술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 ■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물과 건설의 질 제고
<p>20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 양상을 일으키려면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를 관리운영해 나가야 함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진기술을 진지하게 배우고 최첨단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현대화의 뚜렷한 전망목표를 세우고 기술개건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히 해 나가야 함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경제관리완성의 기본방향은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적인 계획경제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 -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옹계 구현하며 사회적 시책을 바로 실시해 나가야 함 ▪ 우리 제도 제일주의를 구현하려면 과학기술과 교육사업발전에 전 국가적인 관심을 돌려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공업의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중요하고 절실한 부문부터 하나씩 착실하게 해 나가야 함 - 과학기술을 전반적으로 빨리 발전시키면서 특히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전에 힘을 집중하여야 함 - 우리 당의 인재중시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실력있는 첨단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함 ▪ 격동하는 오늘의 현실은 남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질 것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다 낮은 틀, 고정격식화된 재래식 방법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를 혁신적인 안목에서 보고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해 나가야 함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존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그 위력을 최대한 높이면서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진행 ▪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은 현재 경제사업의 중심고리이며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대담하게 현대적 기술로 갱신 -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기지 건설 - 온 사회에 과학기술 중시 기풍조성 ▪ 경제조직사업을 해도 실리가 나게 효율적으로 추진 -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에 맞게 우리 식의 경제관리체계를 더욱 개선 ▪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중자론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풍 조성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나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 사회에 과학중시기풍을 철저히 확립 - 새로운 과학연구성과와 기술혁신안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고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 - 경제적타산을 앞세우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제고

바. 경제부문별 과제

연 도	경제부문별 과제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며 이미 있는 발전소들의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 4대선행부문 및 화학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공업) 화력발전소와 화학공장금속공장들에 필요한 석탄을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하며 새 탄 발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함. - (금속공업부문) 주철생산능력을 더 높이고 우리의 연료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압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함. - (철도부문) 나라의 철길을 일신시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철도수송능력을 높이고 철도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함. - (화학공업부문) 주체비료생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그 생산능력을 부쩍 높이고 비닐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화학섬유 합성수지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하여야 함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식 CNC공작기계생산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련하의 개척정신 련하의 창조기풍으로 전반적 기술장비 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워야 함 -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 기초기술과 중요부문 기술공학 발전에 더 큰 힘을 쏟으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함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의 해인 올해에 경공업부문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는 일대 선포문이 온 나라에 휘몰아치게 하여야 함 -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함 - 1차소비품을 비롯하여 인민생활에 널리 쓰이는 필수품생산에 힘을 집중하면서 전반적소비품생산을 확대강화 해나가야 함 - 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려나가야 함 - 인민소비품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함 -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며 자체의 원료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생활필수품생산을 부쩍 늘여야 함 - 상 품공급사업과 급양봉사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 4대산업부문 및 화학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공업) 채굴조건이 좋은 탄광들에 힘을 집중하고 새 탄밭들을 개발하여 석탄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함 - (전력공업) 전설비들의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고 송배전체계를 개선완비하는데 힘을 넣어야 함 - (금속공업) 철강재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함 - (철도) 전반적수송수요를 원만히 풀어야 함 - (화학)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섬유와 수지, 각종 기초화학제품들, 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보장해주어야 함 ■ 농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종지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공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농업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여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물자들을 영농공정에 앞세워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함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공업뿐아니라 전반적공업부문에서, 중앙공업뿐아니라 지방공업에서도 첨단들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게 하여야 함 - 풍부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원료도 해결하고 자금도 확보해나가야 함 - 국방공업부문은 앞으로도 최첨단들의 선구자, 경제전반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함
<p>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선풍을 일으켜야 한다. -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공업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 농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종지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공농사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 주체적인 육종체계가 서고 실리주의원칙이 구현된 현대적인 축산, 양어, 과일생산기지들이 현실에서 커다란 은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 금속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거한 주체철생산능력을 높이고 당이 제시한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 ■ 전력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력발전소들의 만부하를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화전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석탄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력발전소들과 화학공장들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필요한 석탄을 무조건 생산보장하고 현대화를 다그쳐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 철도운수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기관차와 화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철도의 현대화, 철길의 중량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 기계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CNC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공구혁명을 일으켜 성능높은 첨단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들을 철저히 구현하여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혜택의 참다운 향유자로 되게 하여야 한다. - 평양시의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내밀며 도시와 농촌들에 21세기의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 - 상품류통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인민봉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자체의 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능력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현대화, 과학화를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p>20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공업의 선차적발전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 주체철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금속공장들에 전기와 연료, 원료를 집중적으로 대주어 이미 개간된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이 큰 은을 내게 하여야 한다. - 전국이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 ■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량대적혁신을 일으켜 전반적인민경제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 - 전력공업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건설중에 있는 수력발전소들의 조업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 석탄공업부문에서는 경제발전의 생명선을 지켜냈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 국가적으로 탄광들의 생산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 철도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철도의 통과능력을 훨씬 높여야 한다. ■ 채취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한 광산들을 실리있게 개발하며 기계공업부문의 생산을 추켜세우고 현대화를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 화학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화학제품생산을 높이며 남흥가스화대상공사를 다그쳐 끝내야 한다. ■ 농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의 힘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발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의 생활력을 더 높이 발양시키며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고 농촌경리를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며 전군중적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한다. ■ 수산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생산과 재배어업, 양어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 경공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기업소들과 지방산업공장들,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높이고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여 생활필수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시살림집건설을 통이 크게 내밀며 도시경영사업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 산림조성사업을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을 전망성있게 내밀어 우리 조국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좋은 낙원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p>20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농업혁명방침의 요구대로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 지난 10년간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인민군대에서처럼 콩농사를 잘해 나가야 한다. - 농촌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체로 농사를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 농사에 필요한 영농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 품들어 마련해놓은 현대적인 축산기지, 양어기지, 과일생산기지들을 잘 운영 ■ 경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소비품의 지표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그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생활필수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공업부문에서 대규모수력발전소와 중소형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발전설비들의 현대화수준을 높여 전력생산을 증가 -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탐사와 굴진을 앞세워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석탄을 원만히 생산보장 -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철생산방법을 완성하고 적극 받아들여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 - 철도운수부문에서 운수수단들을 정비보강하고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을 세우며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보장
<p>20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가야 함 - 알곡생산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 - 미루벌을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꾸려야 함 ■ 경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인민소비품의 가치수와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함 - 축산기지, 양어기지, 기조식품생산기지가 은을 내게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함 - 상품공급과 인민봉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 ■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긴장한 전기, 석탄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함 -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성을 강화하고 기술개건을 적극 다그쳐 철강재 생산을 늘여야 함 -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함 - 지철탐사사업을 앞세우고 에네르기 및 자원개발 사업을 전망성 있게 해나키며 나라의 자원을 아끼고 보호
<p>20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 주어야 함 - 인민군대처럼 혁명적으로 달려붙어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 관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함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농사일을 간지게 하며 모든 자원자들은 지난해처럼 농촌을 적극 도와주어야 함 - 미루벌을 비롯한 도처에서 물길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며 토지관리를 잘 하여야 함 -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다그쳐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지닌 무거운 책임이 깊이 자각하고 전력문제를 풀어나가야 함 - 석탄공업과 금속공업은 인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 고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공업부문에 국가적인 힘을 넣으며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중요탄광들에 역량을 집중하여 석탄생산을 부쩍 늘려야 함 ·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적인 철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철강재생산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함 -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짜고들고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충족시켜야 함 - 채취,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하면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새로운 생산적 양상을 일으켜야 함 - 건설에서 공법을 철저히 지키고 질을 높여 선군시대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함 - 경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을 적극 현대화하여 질 좋은 인민소비품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야 함 -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벌려 늘어나는 인민들의 살림집수요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함 - 국토환경보호사업에 전체 인민이 떨쳐나 우리나라를 풍치수려하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금수강산으로 빛내여 나가야 함
<p>20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에 농사를 잘 짓는데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것을 농사에 복중시키며 농업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 - 농업부문에서는 실천에서 정당성이 확증된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 농사를 잘할 데 대한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들을 계속 철저히 관철 - 다수확품종들을 대대적으로 심고 농촌에 비료와 농약을 원만히 보장해 주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의 기계화비중을 높여야 함 - 농업지도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농업과학발전에 힘을 넣어야 함 - 백마-철산물길공사를 앞당겨 끝나며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여야 함 -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농업부문 일군들 속에 깊이 들어가 제기된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함 -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든 농사일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하여야 함 -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함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대고조의 앞장에서 기세높이 나아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쳐 조업일일을 앞당기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며 화력발전설비들의 능력을 높여 전력생산을 훨씬 늘여야 함 - 금속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성강의 모범에 따라 주체적인 철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철강재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으로써 강철로 당을 응위하고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내어야 함 - 철도운수부문에서는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 들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짐을 제때에 싣고 부리도록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함 ■ 경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을 개건현대화하고 갖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이 쏟아져 나오게 함으로써 인민생활을 높이고 온 나라가 흥성거리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 잘 꾸리고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함 ▪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올해에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함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에 주되는 힘을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력발전소들의 개건보수와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치며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를 쓸모있게 건설 - 석탄공업과 금속공업발전에 국가적인 힘을 넣어야 함 - 철도운수부문에서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을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령활하게 하여야 함 ▪ 채취,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임업부문에서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정상화 ▪ 경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기술개건을 적극 추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제고 ▪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해서는 종자혁명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감자농사혁명을 힘 있게 밀고 나가며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 그리고 콩농사와 과수업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 ▪ 토지정리사업에 계속 큰 힘을 쏟으며 백마-철산물길공사를 다그침 ▪ 축산기지들과 개건 현대화된 닭공장들이 큰 은을 내게 함 ▪ 평양을 더 잘 꾸리고 도, 시, 군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함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함 ▪ 경공업의 현대화를 다그쳐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 ▪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함 ▪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추진 ▪ 혁명의 수도 평양을 새 세기 맛이 나게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야 함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경제의 현실적 요구와 전망에 맞게 채취공업 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함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틀어쥐고 이 부문에서부터 경제적 양양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함 ▪ 농업부문에서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함 ▪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와 개천-태성호 물길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끝내야 함 ▪ 모든 분야에서 인민적인 것, 대중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1차적인 과업으로 풀어 나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우리는 새로 꾸려진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의 위력을 적극 발양시켜 인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여야 함 - 온 나라를 수리화, 원리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려나가야 함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전선은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에 힘있게 다그치고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석탄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려 나감. - 금속공장들의 설비현대화로 철강재생산에서 혁신 - 철도운수를 정비보강하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보장 ▪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1차 식품소비품과 기초식품 증산 ▪ 농업생산을 늘이는 것은 올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 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며 두벌농사 면적의 적극 확대 - 메기를 비롯한 생산성 높은 물고기 사육 - 현대적인 축산기지 설치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등 대자연 개조사업의 독려 ▪ 사회적 시책으로 휴양소, 정양소, 병원들을 비롯한 문화후생 및 보건시설들과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더 많이 건설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공업과 석탄공업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존 발전능력을 최대한 높이고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과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함. ▪ 금속공업의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철도운수를 치켜세움 ▪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 높여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가져와야 함. ▪ 농업부문에서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집짐승 사육, 양어사업의 전군종적 운동 전개, 토지정리와 산림조성 등 국토관리사업의 계속 추진 ▪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과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등 중요 대상건설 추진

부문별 주요 기사

12월 20일~1월 15일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

부문별 주요 기사

12월 20일~1월 15일

대내경제 121

- 북 ‘기업소법’ 제정, 전망 없는 기업 정리 | 121
 - 평양, 난방 및 전력난 시달려 | 121
 - 북, 새해부터 거름 수집에 안간힘 | 122
 - 북, 암시장 달러환율 7년새 19배로 폭등 | 122
 - 북 사치품 유입 지난 5년간 대폭 늘어 | 122
 - 북 ‘합리적 세무조사’ 강조, 투자유치 노력 | 123
 - 북 경제, 한국 지원 덕에 2007년 정점 | 123
 - 북, 휴대폰 수입 2009~2010년 6배 증가 | 124
 - 북 경제자유도 세계 최하위 | 124
-

농업 및 식량 125

- 북, 애도기간 소규모 식량배급 실시 | 125
- WFP “12월 북한 당국 배급량 증가” | 125
- 유엔, 북한 영양실조 어린이 긴급 지원 | 125
- 북, 미에 “영양지원 규모 늘려달라” 요구 | 126
- 북, 환율 및 식량가격 사상 최대 폭등 | 126

대외경제 127

- 북중 교역 사상 첫 50억달러 돌파 | 127
- 프랑스 NGO, 북서 염소목장 사업 | 127
- 중 단둥 대규모 전력개발, “북 지원 승전용” | 128
- 북, 시리아에 화학무기시약 수출시도 | 128
- 북 라진항 개항, 중 석탄업계 대량 증산 | 129
- 북중 교역 재개됐으나, 북 통제 여전 | 129

남북경협 131

- 국토부, 탈북민 위한 전용산업단지 조성 | 131
-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최저, 관계경색에 직격탄 | 132
- 개성공단 관련기업 경협보험 지급 요구 첫 소송 | 132
- 정부, 김정일 사후 인도지원물자 반출 첫 승인 | 133
- 지난 해 남북교역 10% 감소 | 133

대내경제

북 ‘기업소법’ 제정, 전망 없는 기업 정리

북한은 지난 11월 실적 없는 기업의 설립과 정리, 독립채산제 등을 명시한 ‘기업소법’ 을 제정. 「통일뉴스」에 따르면 총 5장 54조로 구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의 18조는 “기업소 조직(설립)기관은 국가의 정책과 현실의 요구에 비춰보아 불합리하거나 전망성이 없는 기업소를 정리할 수 있다” 고 명시. 이 법은 기업의 정리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기업소법’ 은 10조에서 “특수경제지대에 창설한 기업과 외국투자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 밝혀 나선·황금평 특구와 개성공단, 금강산지구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시사. **연합뉴스** 1월 3일

평양, 난방 및 전력난 시달려

평양은 난방 및 전력난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 만큼 어렵다고 함. 한 소식통은 “8일 경에 보일러 시설이 고장 나 평양화력발전소가 한주일 동안 가동을 중단했었다” 며 “그 바람에 수도관들이 모두 얼어붙어 대부분 구역들에서 난방이 완전 중단되었다” 고 전함. 발전소의 잦은 고장으로 올해 안에 주민지구에 다시 난방을 보장하기는 어려움. 전력난 역시 심각. 낮에는 주민지구의 전기를 아예 끊는데다 밤에는 길거리의 조명들을 밝히는데 주력하면서 대신 주민 한 세대 당 60W전등 2등씩만 허용. 200w 이상의 부화가 걸리는 가정세대들은 무조건 벌금을 내야함.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한 달에 보통 12kg 정도의 석유가 있어야 하는데 구역 인민위원회에서 매 가정세대 당 4kg씩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며 나머지는 자체로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함. 특히 살림집 건설이 한창인 평양시 만수대지구와 만경대지구의 주민생활은 원시적임. 대낮에 정전되기 때문에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못하는데다 수도물마저 전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위생실(화장실)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Radio Free Asia** 1월 3일

북, 새해부터 기름 수집에 안간힘

북한이 새해 시작부터 기름 생산에 전체 주민을 총동원. 한 소식통은 “직장에서 노력자 일인당 1년에 기름 2톤씩 생산하라는 과제를 받았다” 고 전함. 북한이 이처럼 기름 생산에 안간힘을 쓰는 것은 올해도 비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임. 김정일 위원장 살아있을 때 ‘주체비료’ 가 쏟아진다고 선전했지만, 정작 남흥화학공장이나, 흥남비료공장들은 원료 부족으로 가동이 잘 안되는 실정. 또 남북관계 악화로 한국에서 지원되던 비료가 끊어지자, 북한이 순수 ‘자력갱생 상품인 인분’ 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 **Radio Free Asia** 1월 5일

북, 암시장 달러환율 7년새 19배로 폭등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북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 환율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19배로 폭등. 환율이 매년 160% 오른 것으로, 남한이 2007년 외환위기 시절 겪었던 환율 폭등을 북한은 매년 경험하고 있는 셈. 통계청의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보고서’ 에 따르면 북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2002년 7월 달러당 200원에서 2008년 7월 3200원, 2009년 3월 3800원으로 각각 상승. 북한의 암시장 환율은 북한 정부가 정한 공식 환율보다 40배 이상 높은 수준.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전소에서 적용하는 공식 환율은 2002년 달러당 2.21원에서 2008년 130원으로 올랐으나 2009년부터는 달러당 100원을 유지. **동아일보** 1월 6일

북 사치품 수입 지난 5년간 대폭 늘어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크게 증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북한의 자동차와 랩톱 컴퓨터, 에어컨 수입량은 4배로, 휴대전화 수입은 43배로 증가. 수입 물량 가운데 대부분은 중국을 통해 반입.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사용됐던 3대의 링컨 리무진 차량을 비롯해 많은 사치품이 북한 지도부로 수입.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1월 8일

북 ‘합리적 세무조사’ 강조, 투자유치 노력

북한이 최근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유의사항’ 을 발표. 북한의 ‘사회과학원 학보 4호’ 에 실린 ‘특구경제지대에서의 세무조사 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라는 논문에서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에 초점.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기업경영의 전 과정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전면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해야 한다” 며 “외국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세금회피 수법과 공간을 환히 꿰뚫고 그에 대처하는 세무조사방법을 창조해야 한다” 고 강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조건에서 세무조사 기법 개발, 세금법 규정 및 세칙 정비, 납세자의 권리·의무 규정, 외국 세무조사 정책연구 등의 필요성을 거론. 이는 북한 당국이 나진·선봉 및 황금평에 적용할 새로운 세법이나 세무조사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는 점을 시사. 외국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세무조사를 유독 강조한 것은 북한 당국이 투자유치 실적이 지지부진한 경제특구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 **동아일보, 연합뉴스** 1월 8일

북 경제, 한국 지원 덕에 2007년 정점

북한 경제력이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대북지원 축소 등의 여파로 15년 전의 87% 수준으로 감소.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연구’ 를 보면 북한의 경제상황은 1995년을 100으로 볼 때 2009년 86.5 수준으로 악화.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1995년 100에서 2009년 119로 늘었지만 강철 생산량은 100에서 81.8로 감소. 석탄생산량과 전기생산량은 각각 107.6, 102.2로 증가했으나 수산물 어획량과 원유도입량은 63, 47.1 수준으로 위축. 재정규모와 대북지원액이 10개 경제변수 중 감소폭이 가장 큼. 북한의 도로 길이는 2009년에 110.8, 무역총액은 166.3 수준으로 늘었으나 재정규모와 남한의 대북지원액은 각각 31, 36.2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경제상황은 1995년 지수 100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던 1998년 70.3을 기록하며 최악의 상황을 맞음. 경제성과가 가장 높았던 해는 지수가 104.7로 추정된 2007년이였다.” 고 밝힘. **연합뉴스** 1월 9일

북, 휴대폰 수입 2009~2010년 6배 증가

유엔이 최근 발표한 전세계 상품 교역 현황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사이 북한과 중국 간 휴대전화 단말기의 교역 규모가 무려 6배나 급증.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휴대전화 단말기는 43만 개로 2009년에 비해 6배나 증가. 또 북한이 휴대전화기 수입에 지출한 비용은 2010년 3,500만달러로, 전년대비 6배 증가. 북한의 휴대전화 서비스는 2008년부터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이 투자한 고려링크를 통해 제공되며, 휴대전화기는 중국산임. 오라스콤 텔레콤의 실적 보고서를 보면 북한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이래 꾸준히 증가.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2009년 말까지 91,704명이었던 것이 2010년 말까지 누적 집계가 431,919명, 그리고 2011년 3분기 현재 누적 인원은 809,000명에 이름. **Radio Free Asia** 1월 10일

북 경제자유도 세계 최하위

북한이 기업활동의 자유를 측정해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지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최하위를 기록.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헤리티지재단이 공동 집계해 발표한 '2012 경제자유 지수' 조사에서 북한은 184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 지난해에도 세계 최하위의 경제자유지수를 기록한 북한은 여전히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자유가 '0'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음. 항목별로는 개인 재산권이 178위, 투자자유도 172위, 통화자유도 178위를 각각 기록했으며, 기업 활동자유도, 무역자유도, 재정자유도 등의 항목도 최하위인 179위를 기록. 한편 한국은 31위를 기록, '적당히 자유로운(moderately free)' 국가로 분류.

DailyNK 1월 13일

농업 및 식량

북, 애도기간 소규모 식량배급 실시

김정일 위원장 애도기간 중에 주민들에게 소량의 식량 배급을 실시.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 장례기간에 평양주민들에게 보름치의 식량배급을 전격 실시하는 것을 목격했다” 고는 하나, 지방의 경우는 이보다 적은 량의 식량만 공급되었다고 함. 또 다른 소식통은 “신의주의 경우, 겨우 3일분의 식량이 공급됐을 뿐” 이라고 전함. **Radio Free Asia** 1월 2일

WFP “12월 북한 당국 배급량 증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12월에 주민 한 명 당 하루 375g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밝힘. WFP에 따르면 배급량은 7월부터 9월까지 200g에 머물다가 4개월만인 10월 355g으로 늘어난데 이어 11월에는 365g, 12월에는 375g으로 늘어남. 북한은 2012년에는 1인당 배급량을 380g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WFP에 밝힘. WFP는 북한당국이 지난 몇 달간 배급량을 늘린 배경으로 가을 추수를 언급했다고 전함. 한편 WFP는 12월 중 북한 주민 310만명에게 35,208톤의 식량을 분배. WFP는 또 1월 중에는 브라질과 스위스가 기부한 14,300톤의 식량이 북한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힘. **Voice of America** 1월 4일 외
동아일보, 중앙일보 1월 5일

유엔, 북한 영양실조 어린이 긴급 지원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북한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에 42만7,000달러를 제공. CERF는 UNICEF가 이 자금으로 1월부터 3월까지 북한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치유하고 필수약품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힘. UNICEF의 아시아 대변인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함경남북도과 양강도, 강원도 내 25개

군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f-100 영양강화 우유와 고단백 비스킷을 제공받게 됨. **Voice of America** 1월 5일 **외 연합뉴스** 1월 6일

북, 미에 “영양지원 규모 늘려달라” 요구

북한이 미국에 대해 대북 영양지원 규모를 당초 24만톤보다 크게 늘려달라고 요구.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도기간이 끝나기 전인 지난달말 뉴욕채널을 통해 대북 영양지원 규모를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영양지원 뿐만 아니라 알곡도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 고 전함. 북한은 당초 24만톤보다 늘어난 30만톤 가까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28일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에 쌀을 포함한 식량지원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하고 영양지원만을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함. **동아일보, 연합뉴스** 1월 8일

북, 환율 및 식량가격 사상 최대 폭등

북한의 환율과 쌀값이 양강도의 해산 장마당에서 쌀 1kg의 가격은 북한 돈 6,000원에 달하고 환율은 중국 인민폐 1위안 대 북한 돈 1,200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소식통들은 북한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정치적 결집의 기회로 삼고 후계자 김정은 띄우기에만 열중하는데다 장사꾼들마저 이를 돈 벌이에 악용하면서 초래. 북한 당국이 지난 5일부터 오후 시간대에 장마당을 허용했지만 국경경비 강화로 밀수가 막힌 데다 주민이동까지 금지된 탓으로 식량과 생필품들의 유통이 차단돼 장사꾼들은 아예 장마당에 나오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임. 이를 기회로 쌀장사꾼들의 경우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주민들에게 한 달 후에 1.5kg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옥수수 1kg을 꾸어주고 있고 돈 많은 장사꾼들이나 환전꾼들 역시 한 달에 50%의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꾸어주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Radio Free Asia 1월 10일

대외경제

북중 교역 사상 첫 50억달러 돌파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은 51억8,700만달러를 기록. 지난 해 같은 기간(30억6,100만달러)보다 21억달러 이상 늘어남. 또한, 11월 한 달 간 두 나라 교역액은 5억1,200만달러로, 지난 5월 이후 10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교역액 5억 달러가 넘음. 특히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이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시현. 11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22억6,700만달러로 지난 해(10억4,500만달러)보다 2배 이상 증가. 이 가운데 석탄과 철광석 수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북한 제1의 대 중국 수출품인 석탄은 10억3,3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돌파. 철광석 수출은 지난해 1억7,000만달러에서 3억300만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 일부 언론에서 북한이 에너지난 때문에 지난 10월부터 대 중국 석탄 수출을 잠정적으로 금지했다고 보도했으나, 북한의 10월 석탄 수출액은 1억200만달러, 11월은 9,300만달러로 통계상으로는 수출에 큰 변화가 없음. 11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29억2,000만달러로 지난 해(20억1,000만달러)보다 45% 증가. 북한의 수출 증가세(116.5%)가 수입 증가세(44.9%)를 크게 앞지르면서, 북한의 대 중국 무역적자도 계속 줄어들음. 11월까지 북한의 무역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9억7,100만달러에서 올해 6억5천3백만 달러로 3억달러 이상 감소. **Voice of America, Radio Free**

Asia 12월 27일

프랑스 NGO, 북서 염소목장 사업

프랑스의 민간단체인 '프리미어 위장스'는 다음달부터 3년 간 북한의 황해남도에서 염소 목장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힘. 프리미어 위장스는 "북한의 황해남도에서 염소 목장 사업을 펼치기 위해 유럽연합의 지원금 120만유로를 확보했다"고 전함. 이 사업을 통해 황해남도 전역에서 어린이 1만5천명을 포함해 3만여명에게 혜택을 줄 것을 기대. 염소 목장 사업을 통해 치즈도 생산하고 이외에 콩 우유를 지원해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할 계획. 이 단체는 지난해 말까지

3년에 걸쳐 중국의 산둥 지방에서 번식력이 뛰어난 토끼를 구입해 북한에서 사육하는 사업으로 북한 주민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 **Radio Free Asia** 1월 3일 **외 중앙일보** 1월 4일

중 단둥 대규모 전력개발, “북 지원 송전용”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와 마주한 중국의 대북 최대 무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에 대규모 전력시설이 잇달아 개발. 중국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단둥에는 북한과 공동 운영하는 수풍 발전소와 그 하류의 태평만 발전소 등 압록강에 건설된 2개의 수력발전소를 비롯해 화녕단둥화력발전소, 진산열병합발전소, 관톈의 타이핑사오수력발전소 등이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 압록강 하류의 동강에는 1999년 28대의 풍력 발전기가 세워져 20.1MW 전력을 생산. 이들 발전시설의 총 전력은 1,950MW에 달해 현재 단둥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 이런 가운데 단둥은 올해 1,200MW 규모의 보스허양수발전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며 화녕화력발전소의 2, 3기 증설(3,200MW)과 진산열병합발전소 2기(2,000MW) 건설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단둥시는 동강에 460여대의 풍력발전기를 추가 건설해 풍력발전량을 500MW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곳에 4,000MW 규모의 핵발전소를 신설기로 하고 올해 중앙정부 승인을 받겠다는 구상도 마련. 5년 내 적어도 7,300MW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 서둘러 발전시설 확충에 나서는 것은 북한이 개방해 대규모 개발에 나설 것에 대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 지난해 6월 북중이 공동개발키한 황금평 및 위화도가 개발되면 필요한 전력 100%를 중국에서 공급해야 하는 상황. 또 신의주 특구개발이나 압록강 유역 북한 지하자원 개발, 중공업 시설 건설이 본격화되면 수요가 급증할 전력을 현재의 북한 형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 중국은 이미 전력뿐 아니라 대북 진출을 위한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하고 있음. **연합뉴스** 1월 4일

북, 시리아에 화학무기시약 수출시도

유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09년 11월 시리아에 화학무기 시약을 수출하려다 적발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 당시 리베리아 선적의 화물선이 북한을 떠나 시리아로 향하던

중 경유지인 그리스 항구에서 당국에 컨테이너를 압수당했으며 컨테이너 안에서 액체와 분말 시약이 들어있는 여러 종류의 유리 앰플 발견. 이 시약은 화학무기가 사용된 뒤 대기 중에 떠다니는 화학물질을 식별하는 데 사용. 문제의 화물선은 화학 방호복 약 1만4천벌도 적재. 이 방호복은 같은 해 9월 정부가 부산항에서 압수한 군용 방호복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그리스 정부는 화학무기 시약을 압수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지난 해 9월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사실을 보고. 유엔 안보리는 압수된 시약이 화학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가까운 시일 안에 그리스 현지에서 조사를 시작할 방침. **Voice of America,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1월 5일

북 라진항 개항, 중 석탄업계 대량 증산

중국이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북한 라진항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 석탄업계가 생산 설비 증설. 「연변일보」는 훈춘광업집단이 지난 2년 동안 12억 위안을 들여 채탄 설비를 대폭 증설, 올해부터 채탄량을 1천35만톤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고 보도. 이는 중국이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라진항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돼 생산한 석탄을 남방지역으로 대량 운송할 길이 열리기 때문. 중국은 라진항을 경유해 남방으로 운송하는 물류 확대를 위해 지난해 6월 훈춘과 북한 원정리를 잇는 두만강대교 보수를 완료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원정리-라진항 도로공사도 오는 6월 전 구간 완료예정. 중국은 두만강 유역에서 라진항을 이용해 남방으로 물자를 운송하게 되면 지금의 운송 방식에 비해 연간 6천만 위안의 물류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 **연합뉴스** 1월 5일

북중 교역 재개됐으나, 북 통제 여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전면 중단되다시피 한 북중 무역이 정상을 되찾아 가고 있지만 북한의 대중국 수출 및 민간 교역은 여전히 통제됨. 북한 교역의 최대 거점인 중국 단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단둥-신의주 간 교역이 전면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받음.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된 단둥은 표면상 완전히 정상을 되찾은 듯 보임. 대북

무역상들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에도 북·중 교역이 완전히 중단됐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통관이 통제됐다” 며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국가기관 간 교역은 종전 수준을 회복했다” 고 전함. 또한 “북한이 강성대국의 해인 올해 완공하겠다고 공언한 평양 10만 호 건설을 서두르면서 건설용 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고 덧붙임. 그러나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제한적으로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무연탄이나 철광석의 중국 반입이 지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민간 교역도 여전히 김 위원장 사망 직후와 비슷한 통제가 이뤄짐. 북한 관료들의 출장도 여전히 통제되는 것으로 전해짐. 하루 통행증을 끊어 단둥을 오가며 물품을 구매해가는 북한 보따리상들의 발길도 뜸한 편. 대북 소식통들은 “애도기간이 지났지만 북한 내부는 지금도 추도 분위기여서 무역이나 인적 교류가 제한적” 이라며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김 위원장 생일이 지나고 북한의 신년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북·중 교역이 제자리를 찾을 것” 이라고 전망. **연합뉴스** 1월 15일

남북경협

국토부, 탈북민 위한 전용산업단지 조성

국토해양부가 내년 포천, 예산 등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탈북자 전용 산업단지 2~3곳을 조성하기로 함. 국토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힘. 이 전용산업단지는 탈북민을 전체 산단 고용인원의 10% 이상 고용. 탈북민의 정착을 위해 이 단지내에 1차 가공산업 위주로 공장을 유치하고, 국민임대주택 및 편의시설 등을 건설해 직주근접형 단지를 조성할 방침. 현재 포천 신평산단(49만㎡)과 예산 신소재산단(48만㎡), 충주 패션산단(20만㎡) 등 3곳을 시범단지 후보지로 검토중. 포천 신평산단은 염색, 예산 신소재산단은 금속가공주물, 충주패션산단은 의복·섬유 단지로 각각 조성되며 내년 1~3월이면 착공이 가능할 듯. 전용산업단지내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탈북민을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는 산업용지 분양가를 20~30%가량 싸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현재 탈북민을 고용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총 32개사로 내년 중 통일부가 15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정부는 이들 전용산단에 진입도로와 용수 및 폐수처리장 건설비의 전액을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산단 전용 임대주택 건립도 건설할 방침. 국토부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을 통해 탈북민의 근로 희망수요를 파악하고 지자체와 함께 구로디지털, 남동공단 등 기존 산업단지내 입주기업과 탈북민들을 연결해주는 방안을 추진. 또 내년 1월 중 국토부, 통일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북한이탈주민 산단고용촉진 지원단'을 구성해 산단 입주기업이 탈북민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정부가 이처럼 탈북민 정착 지원에 나선 것은 지난달 현재 탈북민수가 22,679명에 이르는 등 탈북민의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1998년 947명이던 탈북민의 국내 입국자수도 2004년 1,894명으로 2배가량 늘었고, 2006년 2,018명으로 2천명을 돌파한 뒤 2010년 2,376명, 올해 10월 현재 2,319명에 이르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연합뉴스

12월 27일 외 Voice of America 12월 28일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최저, 관계경색에 직격탄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2000년 이후 최저를 기록.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총 사업비 1조153억500만원 가운데 426억7천800만원에 그쳐, 4.2%의 집행률을 기록.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은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급격히 떨어짐. 2007년 82.2%에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는 18.1%로 급락해 2009년 7.6%, 2010년 7.7%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 특히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이에 따른 정부의 5·24 대북 제재, 같은 해 11월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 큰 영향을 받음. 지난해 집행액 가운데 거래말큰사전 편찬사업 등 사회문화 협력지원에 25억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경비 등 이산가족교류 지원에 9억원,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101억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지원 61억원을 비롯한 경험기반조성 사업 등 총 297억원을 무상지원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등 유상지원은 129억원을 기록. **연합뉴스, 중앙일보** 1월 8일

개성공단 관련기업 경험보험 지급 요구 첫 소송

개성공단 입주예정기업인 (주)겨레사랑은 지난 6일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 로 피해를 봤다며 수출입은행에 경험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 남북경협 기업이 경험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 (주)겨레사랑은 소장에서 "정부의 대북투자 금지조치 이후 2011년 4월 경험보험금을 신청했으나 수출입은행은 5·24조치가 아니라 경영 내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자의적 규정 해석과 판단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고 주장. 이 기업은 2007년 6월 개성공단의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총건평 1만5,591㎡ 규모의 복합상업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지만 5·24 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짓다가 중단된 6개 업체에 경험보험금 43억원을 지급했지만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기업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경험보험이 적용된다면 이 업체가 지급받을 금액은 6억원가량.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해당기업은 5·24조치 이전부터 자기자본 부족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건축물 공사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며 "경영상 문제여서 경험보험금을 지급할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전함. **연합뉴스, 한국경제** 1월 9일

정부, 김정일 사후 인도지원물자 반출 첫 승인

통일부는 새해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의 반출을 처음으로 승인.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신청한 7,700만원 상당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 물자의 반출을 승인했다” 며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국수, 아동의류 등 지원물자가 중국 투먼을 거쳐 13일 북한 함경북도 온성 지역의 유치원과 고아원에 전달될 예정” 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1월 9일

지난 해 남북교역 10% 감소

지난 해 남북교역액이 17억1,000만달러로 전년도 19억2,000만달러보다 10.4% 감소했다고 한국 무역협회가 밝힘.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낸 반출액은 8억달러로 전년도보다 7.8% 줄었고, 반입액은 9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2.5% 감소. 이는 지난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을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한국무역협회는 분석. 2010년 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던 남북간 일반교역은 지난 해 22만6,000달러에 그쳤고, 3억1,000만달러였던 위탁가공 교역도 3,700만달러에 불과. 5·24 조치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은 16억9,000만달러로, 전년도보다 2억5,000만 달러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남북간 교역을 산업별로 보면, 공산품이 16억6,000만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차산품은 5,000만달러에 불과. 공산품의 경우 한국에서는 주로 개성공단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를 보냈고, 북한은 주로 가공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보냄. 한국에서 북한으로 반출된 품목은 의류 생산 원자재인 인조단섬유직물이 1억5,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면직물과 기구 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이 뒤를 이음. 북한에서 한국으로 반입된 품목의 경우 의류가 3억2,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기구 부품, 무선통신기기, 신발 등의 순서인 것으로 파악. **연합뉴스, Voice of America** 1월 13일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는 무단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1월호

2012년 1월 1일 인쇄
2012년 1월 7일 발행

발행인
현오석

발행처
한국개발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우 130-740)

사서함
청량사서함 113호

대표전화
02-958-4114

팩시밀리
02-958-4310

인터넷주소
www.kdi.re.kr

등록
1975년 5월 23일 제6-0004호

인쇄
신성인쇄

© 한국개발연구원 2012